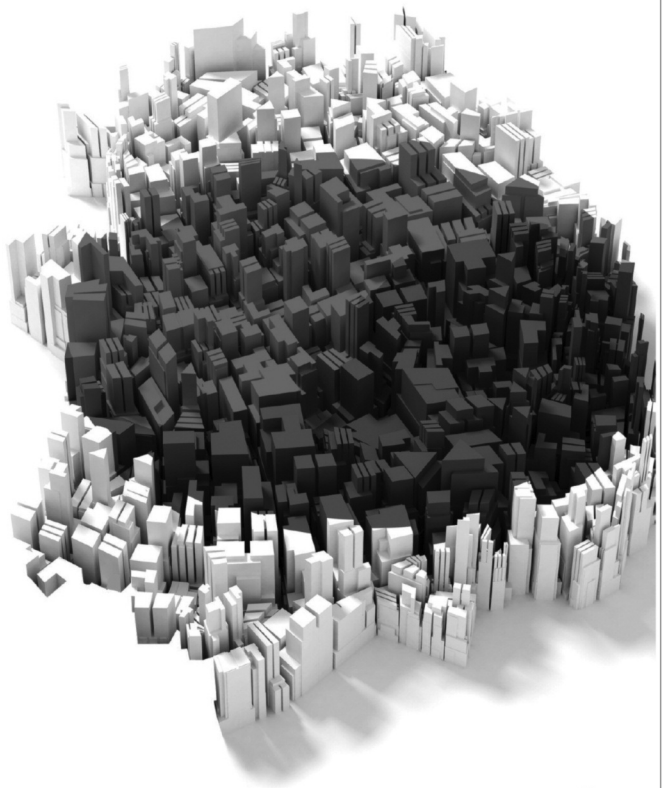


2019. 12. 31 통권

제9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발간사

2019년에도 전 세계 각지에서 테러들이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석유시설 두 곳이 드론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테러의 수단과 양상이 다양화되고 세계 경제와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이슬람국가(IS)를 표방하는 국제테러단체의 수장 알 바그다디가 미국의 공습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예방 및 대응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제9호에서는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관한 연구-1950년대 특무부대의 이승만 대통령 경호를 중심으로-’, ‘대규모 국제행사 테러대책 발전방안’, ‘국내외 테러동향과 과거 북한의 도발로 본 국내 사이버테러 위험성 재인식’, ‘한·일 경비업의 비교를 통한 동향분석과 시사점’으로 총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가 등재후보지로 승격함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안보, 안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에 많은 성원과 참여,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간을 위해 논문을 투고해주신 연구자분들과 심사위원, 편집위원, 학회 임원분들과 회원, 그리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학회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장 강 욱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회장 박준석

차 례

-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관한 연구—1950년대 특무부대의 이승만 대통령 경호를 중심으로—
정주호 · 최종영 7
- 대규모 국제행사 테러대책 발전방안
전종섭 49
- 국내외 테러동향과 과거 북한의 도발로 본 국내 사이버테러 위험성 재인식
유석봉 89
- 한·일 경비업의 비교를 통한 동향분석과 시사점
이치영 · 박준석 · 권혁빈 111

Contents

- A Study on Presidential Security Activities of Military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y: focusing on Teukmubudae and Its Performance for the Security of President Syngman Rhee in 1950s
Jung, Joo Ho · Choi, Jong Young 7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for Large Scale International Sports Events in Korea
Jeon, Jong Sup 49
- Re-recognition of the Risk of Cyber Terror in Korea, which was seen as a Terrorism Trend at home and abroad and as a North Korean provocation in the past
Yoo, Seok Bong 89
- An Analysis of the Trends and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Korean-Japanese Security Industry
Lee, Chi Young · Park, Jun Seok · Kwon, Hyuck Bin 111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관한 연구

-1950년대 특무부대의 이승만 대통령 경호를 중심으로-

정 주 호 · 최 종 영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관한 연구 -1950년대 특무부대의 이승만 대통령 경호를 중심으로-

정 주 호* · 최 종 영**

[국문초록]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임무가 명문화되어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61년 10월 2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작성하여 박정희 의장(육군중장)에게 보고한 ‘중요행사 및 요인에 대한 통합경호’ 문건이 처음이다. 당시 軍 정보수사기관인 방첩부대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책임사항이 최초로 명시된 것이다. 이후 제정된 ‘대통령 경호실법’(1963년)과 ‘대통령 경호경비대책위원회 규정’(1974년) 및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장’(1981년)에는 軍 정보수사기관인 보안사, 기무사, 안보지원사령부의 임무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同 법령들을 통해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임무와 역할의 변천과정을 가늠해볼 수 있으나, 국가재건최고회의 문건과 경호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1950년대 軍 정보수사기관이었던 특무부대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관한 기록이나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및 경호실 창설 이전 시기인 1950년대 특무부대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관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혀 내는 데에 있다. 또한 경호실 창설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軍 정보수사기관의 경호활동을 시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경호사에서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중요한 부분을 채워 넣고, 아울러 軍 정보수사기관이 역사적 부침속에서 수많은 질곡을 거치면서도 대통령 경호기관이라는 조직에 부여된 책임을 수행해 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50년대 장교, 준·부사관으로 특무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했던 전직 요원들을 심층면접하여 그 결과를 ‘키워드 분석방법’과 ‘묘사적 분석방법’에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제1저자)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박사과정(교신저자)

의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 남한 전역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 하에서 당시 軍 정보수사기관인 특무부대는 법적으로 명시된 임무에는 없었지만 이승만 대통령 경호활동을 수행하였다.

둘째, 특무부대의 경호대상은 ‘현직 대통령’인 이승만에 한정되었으며, 가족 중 군복무중인 양아들(이강석)에 대한 신변보호 임무도 수행하였다.

셋째, 특무부대의 경호임무 형태는 대통령의 외부행사시 軍部, 民部를 가리지 않고 사전 안전활동과 행사당일 1선에서부터 외곽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특히 軍 관련 행사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행사 성격에 따라 공식 경호기관이었던 경찰보다 더 측근인 1선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넷째, 특무부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太陽’이라는 내부 암호명을 사용하였으며, 요원들은 특무대장 김창룡이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최측근에서 임무수행한 지휘관으로 인식하였다.

다섯째, 특무부대에는 별도의 경호조직이나 경호전담요원 없이 전국의 특무요원들이 최우선 공동임무로 대통령 경호임무에 전원투입되었다.

이러한 요원들의 노하우는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기무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기능을 확충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비정상적인 병력 움직임과 군부대 내 경호위협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기록 출처 확보 및 더 나은 연구방법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軍 정보수사기관, 특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 경호, 이승만 대통령

목 차

- I. 서론
- II. 軍 정보수사기관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I. 서 론

軍 정보수사기관은 군대內에서 정보업무와 보안/방첩분야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정보처내에 설치된 특별조사과를 모체로 업무를 시작하여 이후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으며, 지난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된 우리나라 唯一의 기관이다. 명칭 변경시마다 조직의 확대·축소가 있었고, 특히 現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과거 역사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기관임을 천명할 정도로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직무범위를 벗어난 초법적 활동 및 특권주의적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본연의 임무만을 수행토록 한 것이다. 70년이 넘는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임무가 있다면 그 중에 ‘현직 대통령 경호임무’가 있다. 軍 정보수사기관의 경호활동이 경호처 및 경찰과 함께 대통령 경호의 큰 축을 형성할 만큼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동안 베일에 쌓여 외부에 알려진 내용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임무가 명문화되어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61년 10월 2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작성하여 박정희 의장(육군중장)에게 보고한 ‘중요행사 및 요인에 대한 통합경호’ 문건이 처음이다. 당시 軍 정보수사기관인 방첩부대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책임사항이 최초로 명시된 것이다. 이후 제정된 ‘대통령 경호실

법’(1963년)과 ‘대통령 경호경비대책위원회 규정’(1974년) 및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1981년)에는 軍 정보수사기관인 보안사, 기무사, 안보지원사령부의 임무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同 법령들을 통해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임무와 역할의 변천과정을 가늠해볼 수 있다.

특히 당시 시대와 관련하여 김용(2003), 정영일(2013), 최종광(2014), 조광래(2011), 조일수(2015), 오세용(2003), 김은정(2009), 양재열(2005) 등의 연구들은 대부분 경찰과 대통령 경호실(현 경호처)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국가재건최고회의 문건과 경호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1950년대 軍 정보수사기관이었던 특무부대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관한 기록이나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및 경호실 창설 이전 시기인 1950년대 특무부대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관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혀 내는 데에 있다. 또한 경호실 창설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軍 정보수사기관의 경호활동을 시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경호사에서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중요한 부분을 채워 넣고, 아울러 軍 정보수사기관이 역사적 부침속에서 수많은 질곡을 거치면서도 대통령 경호기관이라는 조직에 부여된 책임을 수행해 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밝혀내고자 하였다.

Ⅱ. 軍 정보수사기관

1. 임무

軍 정보수사기관이란 軍隊 내에서 정보업무와 수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軍 정보수사기관으로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唯一하다. 그 외 軍 정보기관으로는 정보본부(정보사)가 있으며, 軍 수사기관으로는 국방부 조사본부(헌병)가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수행하는 정보업무와 수사업무는 정보본부에서 수행하는 정보업무와 조사본부에서 수행하는 수사업무와 확연히 구분되는데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軍 정보기관과 軍 수사기관의 주요 수행업무

구분	軍 정보기관(정보본부)	軍 수사기관(조사본부)
임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정보정책의 기획, 통합, 조정 2. 국제정세/해외군사정보 수집분석 3. 군사전략정보 수집분석 4. 군사외교/방위산업 분야 정보지원 5. 재외공관 주재무관 파견운영 6. 주한 외국무관과 업무협조·교류 7. 합참/각군본부 정보예산 편성 8. 군사/방산 보안정책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인/군무원의 일반범죄 수사 2.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3. 군 관련 사망사고 조사 4. 중요사건 분석 및 대책수립 5.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 연구 6. 부정군수품 계몽활동 및 단속 7. 군 교도소 운영 8. 군 관련 범죄수사 지원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보안 관련인원의 신원조사 2. 군사보안 대상 보안측정·사고조사 3. 군 보안대책 수립·개선 지원 4.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 통신 등에 대한 보안업무 5. 군 관련 방첩업무 6. 군 및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수집활동 대응 및 군기 유출 방지 7.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8. 군사 및 방위산업 관련 정보수집 9. 대(對)국가전복·대테러·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수집 10.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단체에 관한 정보수집 11. 군인 및 군무원에 관한 불법·비리 정보 수집(임용예정자 포함) 12.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 13. 국방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14. 방위사업청에 대한 군사보안 지원 15.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란의 죄 - 외환의 죄 2. 군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란의 죄 - 이적의 죄 - 군사기밀 누설죄 - 암호부정사용죄 3. 국가보안법 위반 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위반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국보법 위반자가 집시법 위반시 해당)

출처 : 설치법령 재구성.

軍 정보수사기관의 주요수행업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첩(防諜, counter intelligence), 즉 適의 첩보수집 활동을 막고, 자국의 정보가 적에게 노출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전경웅(2018)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軍 정보수사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방첩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방첩활동에 대해 군대의 보안상황이 어떤지, 군대 내에 반란 또는 쿠데타를 획책하는 세력이 있는지, 이런 세력이 접근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찾아내어 문제를 해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2. 軍 정보수사기관의 연혁

우리나라 軍 정보수사기관은 정부수립 이전인 1948년 5월 27일 조선경비대 정보처에 설치된 ‘특별조사과’를 母體로 한다. 주요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우리나라 軍 정보수사기관의 창설배경 및 주요연혁

창설 배경 (‘48.5~’50.10)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과 사회의 혼란 속에서 대공활동 전담기구의 창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선경비대 정보처 소속의 특별조사과(‘48.5. SIS, Special Investigation Section) 설치. 이후 육본 정보국 특별정보대(‘48.11. SIS, Special Intelligence Service), 육본 정보국 방첩대(‘49.10. CIC, Counter Intelligence Corps)로 개칭
특무부대 (‘50.10~’60.7)	한국전쟁이 터진이후 대공업무 기구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육군 특무부대(‘50.10)와 해군 방첩대(‘53.1) 및 공군 특별수사대(‘54.3) 창설
방첩부대 (‘60.7~’68.9)	1960년 4.19 혁명 계기 정보기관 개편으로 특무부대에서 방첩부대로 변경(‘60.7)후 지하조직 침투간첩검거 및 좌익세력 척결
보안부대 (‘68.9~’77.10)	1.21사태 이후 보안 및 방첩업무 강화를 위해 부대명칭을 육군보안사령부와 해·공군 보안부대로 각각 개칭(‘68.9), 울진·삼척지구 대간첩작전 등 수행
국군보안사령부 (‘77.10~’90.12)	각군 보안부대를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77.10), 대공업무와 군내 비리색출 및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행사 개최를 지원
국군기무사령부 (‘91.1~’18.8)	윤석양 이병 사건을 계기로 순수 軍 관련 업무로 체계를 정비하여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91.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8.9~현재)	맏글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촛불집회 계엄령 시행계획 문건 등 사건으로 기무사 해편(解編)후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 창설(‘18.9.1)

출처 : 舊 기무사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3.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軍 정보수사기관은 해방직후 美 군정시기 남한에서 활동했던 주한미군 방첩대의 기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받아 조직한 육본 정보국내

특별조사과(1948.5.27.)를 모체로 이후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DSSC, Defence Security Support Command, 2018.9)로 이름을 바꾼 조직으로서, 일찍부터 대통령에 대한 통수권¹⁾ 보필을 그 이념으로 삼았고, 그 일환으로 대통령 경호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2018년 9월 1일 새로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기존 軍 정보수사기관의 위법적, 권위적 요소를 배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활동범위와 준수사항을 철저히 명문화하여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는 등 그 임무와 역할의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대통령 경호임무만큼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期(발흥기) : 1950~1960년 특무부대(戰爭의 혼란속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대통령을 1선에서 경호)

이 시기에 특무부대가 이승만 대통령을 경호했다는 국가기록원·경호처·경찰의 공식기록은 없다. 1949년 12월 29일 내무부 훈령 제25호로 제정되어 1950년 2월 21일 관보에 실린 「경호규정」 제4조에 “경호에 당하여 미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후 면밀 주도한 경호계획을 수립하여 유루(遺漏)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서 협의의 주체를 당시 공경호 기관이었던 경무대경찰서를 의미한다고 가정했을 때 긴밀히 협의해야할 대상으로 관계기관 중에 특무부대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 정도가 전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이 시기를 ‘勃興期’로 분류한 이유는 舊 기무사가 창설 50주년을 맞아 2001년 7월 31일 자체 발간한 홍보자료²⁾에 1958년 당시 특무부대 조사처의 임무에 ‘경호행사 지원’을 명시했다는 것과 김창룡 특무부대장의 일대기³⁾에 나타난 기록, 즉 “戰時 대통령이 경남(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오자 김창룡은 군경 합수본부장으로 대통령의 경호와 임시수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서울수복 후에도 육군 특무부대는 정보수사기관으로서 국가 안전보장업무를 통해 대통령을 보필하고 쿠데타 방지, 부정부패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국가 주요직위자들에 대

1)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군의 총지휘자로서 軍政과 軍令權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헌법 제 74조).

2) 국군기무사령부, 「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부 50년 사진집」,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2001.

3) 이대인, 『대한민국 특무부대장 김창룡』, 기파랑, 2011.

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과 원허스님이 불교신문에 실은 스님행장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낙산사를 방문했을 때 사찰 밖에는 경찰이 경비를 서고, 경내에는 특무대 요원들이 삼엄하게 경호를 서고 있었다”고 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

2) 제2期(정착기) : 1960~1990년 방첩부대·보안사(경호실을 中心으로 경호유관기관으로서 지원체계 정착)

이 시기는 1960년 청와대 경찰과견대와 1961년 국가재건회의 의장경호대 및 중앙정보부 경호대를 거쳐 1963년 경호실이 창설된 이후로 특무부대의 뒤를 이은 방첩·보안부대 및 국군보안사령부는 특무부대때 쌓은 경호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호행사前 계획수립을 하는 단계에서의 경호관련 첩보 수집으로부터 행사 진행간 제반 안전 활동으로 경호실을 지원하는 최고의 경호유관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음의 문서와 법령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3〉 방첩부대·보안사의 경호책임에 관한 근거

1961.10.25. 국가재건최고회의 「중요행사 및 요인에 대한 통합경호」	방첩부대의 경호책임 구체적 명시
1963.12.17. 「대통령경호실법」	경호실과 방첩부대의 관계 명시
1974.9.11. 「대통령 경호·경비대책위원회 규정」	육군보안사령관을 경호실무위원회에 포함 및 ‘경호에 관한 공동책임’ 명시
1975.8.2. 「대통령 경호·경비안전대책통제단 설치에 관한 규정」	육군보안사령부의 경호책임 명시(3개 항목)
1981.3.2.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국군보안사령부의 경호책임 명시(7개 항목)

출처 : 관계법령 재구성.

1961년 10월 25일 국가재건회의에서 박정희 의장(中將)에게 보고한 「중요행사 및 요인에 대한 통합경호」의 全文에 따르면 안전조사⁵⁾의 책임이 지구위수사령관에게 있으며, 지구위수사령관은 최기 주둔 각군 방첩대장에게 안전조사책임을 위임할 수

4) 원허스님, 「이승만 대통령 “노스님 잘 모시게”(스님행장)」, 『불교신문』, 2004.7.27.

5) 안전조사란 사전 행사장에 전개하여 지뢰 등 폭발물 탐지와 사설·전기·가스 등 안전위해요인을 검사후 요인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활동과 행사 참석자의 신원조사를 통해 불순 분자의 참석을 차단하는 등의 모든 사전 안전활동을 포함한다.

있다고 한 것은 軍隊內통상적인 임무수행관계에서 안전조사의 책임이 곧 방첩대장에게 있음을 뜻한다. 이는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전담 공경호 기관이 해방·정부 수립후 경찰에서 軍(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경호대)을 거쳐 중앙정보부로 이관되는 시기에서도 방첩부대가 경호의 핵심부분을 책임지고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1963년 12월 17일 시행된 「대통령경호실법」 제6조(국가기관 등에 협조요청)에서 경호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각 기관 및 지자체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 및 기타 필요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경호실과 방첩부대의 협조·지원 관계를 처음으로 法에 명시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1974년 9월 11일 시행된 「대통령경호·경비대책위원회규정」 제3조와 4조에 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안사령관을 경호실장 다음으로 명시하여 대통령 경호에 관한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첫 대통령령으로서 당시 보안사령부가 경호책임 기관으로서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준다.

1975년 8월 2일 시행된 ‘대통령 경호·경비 안전대책 통제단 설치에 관한 규정’에 처음으로 나타난 보안사의 특화된 임무는 육·해·공군 內의 요시·요주의자에 대한 엄중감시, 군부대 특히 수도권내의 부대 동향파악 강화,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방첩부대, 보안부대, 국군보안사령부가 실제 책임지고 수행했던 경호의 역할에 비해 매우 축소된 느낌을 가지게 한다. 同 규정이 만들어진 1975년 당시 육군보안사령관이었던 진중채 사령관이 전방 대대장의 월북사건을 납북이라고 거짓 보고하였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분노를 사고, 스스로 권력지향형 인물이 아닌데다 보안사 권력 확장에 관심이 없었던 탓에 재직기간중 보안사의 정보처가 폐지되는 등의 보안사령부 축소안이 실행되는 시기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81년 3월 2일 시행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제4조에서는 방첩부대, 보안부대, 국군보안사령부가 실제 책임지고 수행하는 경호의 역할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으로써 경호실을 중심으로 한 경호유관기관으로서의 지원체계가 확고히 정착되었다.

3) 제3期(확장기) : 1991~2018년 국군기무사(軍內 경호기관에서 國家的 경호기관으로 임무확장)

1990년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부대명칭이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뀌고 3년 뒤인

1993년에는 김영삼 정부 출범과 동시 軍內 사조직 ‘하나회’ 척결의 신호탄으로 하나회 출신 서완수 기무사령관이 전격적으로 경질되는 격변 속에서도 기무사의 대통령 경호임무는 오히려 책임이 늘어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경호실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경호에 대한 전문성을 발전시켜나갔다.

〈표 4〉 기무사의 경호책임에 관한 근거

1995.12.14.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기무사의 경호임무 확대 * 국내·외 경호행사까지 지원
2004.7.24.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기무사의 경호임무 확대 *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지원임무 추가
2005.3.1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기무사 등 유관기관의 경호책임에 관한 위원회 설치근거가 法에 명시

출처 : 관계법령 재구성.

우선 1981년 마련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이 1995년 12월 14일 개정되면서 기무사의 책임부분에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 지원’이 추가되어 기존 7가지였던 책임이 8가지로 확장되었다.

2004년 7월 24일 同 위원회 규정의 개정 시에는 기무사 책임에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활동’ 까지 추가되어 9가지가 되었다. 이때 일부 용어도 변경되어 현재 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고도의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경호관련 시설에 대한 평소 보안활동을 책임지게 된 것은 기무사령부가 그만큼 경호기관으로서 신뢰성·전문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국내·외 경호행사 지원’ 추가는 그동안 軍內 행사장 활동으로 국한되어 있던 기무사의 임무범위가 G20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가적인 행사에까지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그간 대통령령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으로 운영되던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근거가 2005년 3월 10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 법률에 규정(同法 제16조 신설)됨으로써 활동근거가 확충됨과 동시에 경호처와 기무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보다 원활해지게 되었다.

기무사는 이러한 임무확장과 법적근거 강화에 힘입어 2007년 6월 21일 소격동 청

사에서 청와대 경호실 및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경호업무 발전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경호위협에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2008년 11월 과천 청사로 이전 후에도 2010년 2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가급 행사인 ‘제5차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경호처를 비롯한 경찰·軍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을 부대로 초청하여 각 기관별 임무를 확인하고, 위협유형별 철저한 대비책과 우발상황에 대한 임무수행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경호처 및 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되어 2017년 10월 1일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군사정보·동향업무를 담당해온 1처를 해체하는 대신 보안·방첩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국가·군 대테러 및 경호분야 조직을 더욱 보강하여 대통령 경호지원활동에 더욱 역량을 집중시켰다.

4) 제4期(발전기) : 2018~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문 경호기관으로 과학화·전문화)

2018년 9월 1일부로 국군기무사령부가 폐지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 창설되면서 본부 조직을 기존 3개 處에서 2개 處로 축소하고 예하 조직을 50여 개에서 30여 개로 대폭 줄였으며, 인원도 30%나 감원하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대통령 경호임무 만큼은 폐지·축소없이 기존의 9가지 임무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부서·직급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19년 9월 18일 개정된 「대통령경호안전대책 위원회규정」에서 각 기관의 분장책임을 명시하는 제4조에 기존 ‘국군기무사령부 2 부장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1명’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우리나라 유일의 軍 정보수사기관으로서 부대명칭이 바뀌고 임무·조직에 변화가 있더라도 대통령 경호임무에 관련한 70년 가까이 이어온 전통과 노하우를 그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새로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통령 경호경비’ 임무를 부대의 주요 8대 업무⁶⁾ 中 하나로 소개하고, 부대 해편 및 창설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가는 과학화·전문화된 공경호기관이 되고자 미래를 내다보는 실

6) 군사보안, 방위산업보안, 신원보안, 보안감사, 대테러, 안보수사, 방첩정보, 경호경비

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18년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 일환으로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과 與野 위원들의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현장점검시 세라믹 재질의 위장형 위협도구 등 기존의 검색장비로는 탐지가 곤란한 新型 경호위해도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경호장비들을 제시하였으며, 2018년 12월 17일에는 부대창설 100일(2018년 12월 9일) 즈음 언론기자단 초청행사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드론 · 로봇 · 현장관제시스템 등과 같은 최첨단 경호장비를 비롯하여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28종 368점의 경호장비를 소개하고 운영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오종택, 2018).

이 중 경호용 드론장비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세계 선도적인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무인 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에 착수, 수년간의 연구 끝에 2018년 연말부터 경호행사장에 실전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장비로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경호분야 과학화 · 전문화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오동현, 2019).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앞서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을 살펴본 결과 1950년대 활동했던 육군 특무부대 시기의 이승만 대통령 경호활동에 대해서는 일부 출판물과 불교 사찰일지에 간단하게 몇 줄 언급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신뢰할 만한 그 어떤 내용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시기는 국가 공경호 전담기관인 경호실도 생기지 않은 시기였고, 무엇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남북한이 잠시 전쟁을 멈춘 상태, 즉 停戰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경호상 매우 특수하고 위험한 시기였기 때문에 美군정때부터 우리나라 民部와 軍部를 통틀어 유일한 정보수사기관이었던 특무부대가 이승만 대통령을 실제 경호하였는지 여부와 경호를 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 警護史의 첫페이지에 해당하는 10년간 기록으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 공식적 경계 안에서는 확인 할 길이 없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논문을 쓰기로 결심한 2017년 이후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질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수시로 자문을 받아온 전문가 그룹과 면담을 진행하여 향후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1950년대 육군특무부대 소속 생존자 대상 심층 면접의 필요성 등 향후 연구진행에 대한 가이드를 얻을 수 있었다.⁷⁾

〈표 5〉 연구자문을 위한 전문가그룹 구성

學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주임교수(정주호) ○ 성균관대 사회학과 겸임교수(C교수)
예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육군특무부대 조사처장/특무처장(N예비역대령) ○ 「대한민국 특무부대장 김창룡」 著者(이대인)
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現 경호경비부대장(P중령)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前 경호경비과장(H중령)

전문가들은 질적연구 방법에 참여관찰·심층면접·포커스그룹 방법 등이 있으나, 참여관찰의 경우 現 시대를 살고 있는 연구자가 과거인 1950년대 軍 정보수사기관원들의 임무현장에 전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現場調査라 불리는 참여관찰 방법을 채택할 수 없고, 포커스그룹의 경우 또한 마케팅 연구자들이 광고의 주제나 기술에 대한 소비자 입장의 일반인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조사하는 것처럼 특정한 주제에 대한 자유지정 참가자들의 토론 형식으로는 이 연구가 수행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심층면접은 연구자가 연구주제와 관련된 배경·경험이 있는 자발적 참여자로 동료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언어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본 연구의 질문과 이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찾기 위해 신뢰성과 타당성이라는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심층 면접방법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연구자는 2018년 7월부터 1년 동안 특무부대 출신중 정보 제공에 동의한 생존자들을 찾아 전국을 다니며 1차, 2차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2. 연구문제

① 우리나라에 경호실이 창설되기 前에는 누가 대통령 경호를 하였는가? 공식자

7) 전문가그룹 면담은 2018년 5~6월간 진행하였으며, 각자의 거주지역·직업환경·연령 등을 고려하여 전체모임 대신 연구자와의 1:1 면담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료와 많은 선행연구처럼 경찰이 단독으로 대통령 경호를 수행하였는가?

- ② 정부수립~6.25전쟁 前·後 혼란했던 시기에 軍 정보수사기관(특무부대)에서 경찰보다 더 측근에서 대통령 경호를 했다는 일부 민간 기록에서처럼 당시 특무부대는 대통령 경호에 참여하였는가?
- ③ 공식적인 역사적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1950년대 軍 정보수사기관(특무부대)의 대통령 경호활동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호활동 임무 수행의 근거와 구체적인 활동방법·형태 등은 어떠한가?
- ④ 이 연구를 통해 軍 정보수사기관(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부대, 국군보안사,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의 대통령 경호활동 70년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갖는 가치와 의의는 무엇이며, 어떤 논의가 가능한가?

3.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이들과의 연구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복안(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은 연구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를 위해 심층면접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7명이다. 더 많은 심층면접이 가능하나 연구자로서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즉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데 있어 충분하여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의 수로 7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이들과 심층 면접을 가졌다. 이들 연구 참여자들은 기꺼이 연구에 참여하고 1950년대 軍 정보수사기관이었던 특무부대원으로서 대통령 경호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희망하였다.

연구자는 육군특무부대·방첩부대 출신들의 친목모임인 ‘육인동호회’ 사무국장(김준식, 예비역 준위)의 도움을 받아 전체 생존회원 220여 명 가운데에서 7명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1950년대 육군 특무부대에 근무한 장교·준사관·부사관 출신일 것⁸⁾, 둘째, 복무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복무기간 중 대통령 경호활동을 직접 수행했거나 간접 경험이 있을 것, 셋째 연구주제에 대하여 면접 과정에서 가감없이 자신이 생각을 표명하거나 관련 자료(사진, 명령지 등)를 제시할 수 있을 것, 넷째 앞의 세가지 조건에 해당이 없더라도 연구주제에 관해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이력과 경력 또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등이 그것이다.

8) 실제로는 조선경비대 정보처내 특별조사과가 만들어진 1948년 5월 27일부터 청와대 경호실이 창설된 1963년 12월 17일 이전까지 기간으로 하였다.

다. 요건 중 셋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정보제공 희망의사를 보였으나 대부분 80세~90세의 高齡者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연구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思考 능력과 언어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넷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 연구에 큰 도움을 준 「대한민국 특무부대장 김창룡」의 著者(이대인)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군기무사령부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기무부대 역사편찬위원회 집필위원으로서 ‘기무부대사’ 편찬에 참여시 특무부대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1964년부터 방첩부대에 근무하면서 특무부대 출신의 선배들로부터 1950년대 경호활동에 관해 전해들은 내용과 자신이 근무하기 시작한 1964년 이후 경호활동을 비교하여 의견을 제시해 준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본 면접 참여자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구분	연령	주소	근무기간	주요 경력
N예비역 대령	91	안양	1947~1966	• 특무부대 조사/특무처장 • 10대 국회의원
H예비역 준위	87	계룡	1950~1989	• 특무부대 본부 및 서울지구대 근무
J예비역 준위	89	대전	1953~1960	• 특무부대 본부 서무계 • 지구대 대공계장
K예비역 준장	90	서울	1953~1983	• 초대 국방부 특무대장 • 정보본부 차장
Y예비역 준위	84	서울	1956~1989	• 특무·방첩부대 兵/부서관 근무 • 보안사/기무사 정보처·비서실
L예비역 준위1	86	전주	1964~1984	• 방첩부대 근무 • 전북지구 보안부대 행정과장
L예비역 준위2	73	성남	1971~2000	• 방첩부대 兵 근무 • 보안사/기무사 분석관

연령별로는 90대가 2명, 80대가 4명, 70대가 1명이다. 성별로는 모두 남성이며, 전역당시 계급은 장군출신이 1명, 대령출신이 1명, 준위출신이 5명이다. 연구대상 기간인 1950년대 특무부대 근무경험자는 5명이며, 나머지는 2명은 기무부대 역사편찬위원회 집필위원으로서 특무부대 역사를 집중연구했거나 특무부대 출신 부대원들과

십 수년간 같이 근무한 경우이다.

4. 자료처리

연구자는 이들과 면담시 생년월일, 태어난 곳, 유년시절 성장과정, 학창시절, 입대 관계, 군복무 상세경력, 전역후 활동, 현재 건강상태, 연금수령액, 재산정도, 자녀관계 등 생애사적 연구에 준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항목 외에는 생략하도록 하였다.

면접 참여자들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이들의姓을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그 옆에 실제로 사용되는 직명(호칭)을 사용하였다. 장군출신은 ‘○부대장’, 대령출신은 ‘○처장’으로 하고, 준위출신은 대개의 경우처럼 ‘○계장’으로 하거나 마지막 직책인 ‘○○과장’ 또는 ‘○연구관’으로 하였다. 이러한 표기방법의 효과는 읽는 이로 하여금 해당 참여자의 계급, 경력 등의 개략적인 개인적 맥락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선정요건에 합당한 사람을 찾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고, 일부 참여자와는 사전에 수차례 비공식적인 방문과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참여자와의 1차 심층면접은 2018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0월 10일까지, 2차 심층면접은 2019년 1월 10일부터 2019년 7월 2일까지 직접 거주 지역을 방문하여 근처식당이나 카페에서 1:1 對面 면접하는 방법으로 각자 1~4차례 진행되었다. 개인당 1회 면접 평균시간은 60분 가량이었다.

1차 면접에서의 연구 질문은 구조화된 질문 · 반구조화된 질문 · 혼합질문 방법 중에서 대상자들의 연령과 전혀 다른 계급 · 직책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충분히 경청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시켜 진행하였으며, 2차 면접은 1차때 질문하지 못하였거나 동일 사안에 대해 상반된 답변이 수집되었을 때 재확인을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5. 연구윤리

연구자는 면접을 진행하면서 양적 연구에 비해 문제발생 가능성이 더 큰 질적 연구의 윤리적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윤리적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자발적 의사에 의한 연구 참여이다. 연구자는 이번 연구의 목적과 연구에 대한 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 자발적으로 동의한 인원만을 면접 참여자로 선

정하였다. 특히, 이들이 답변한 내용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며, 연구결과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느 선까지 명시되는지에 대해 고지할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연구 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나 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비밀보장의 원칙이다. 이 연구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경호활동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현직 대통령 경호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미쳐서는 안되며, 면접 과정에서 대상자 등과 관련된 타인의 비밀보장도 중요하다. 그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때마다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호활동의 기법과 제3자가 그 이야기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수 과정에서 現 공경호 체제의 보안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한 사람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윤리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였다. 특히 글쓰기 과정에서 면접 참여자의 중간확인 및 참여 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셋째, 수집된 정보에 대한 각색금지 원칙이다. 대부분 80~90대의 연령층인 면접 참여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내용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의도가 잘못 전달되어 분석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 각자가 사용한 언어를 있는 그대로 원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녹음기를 이용하여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前 문서화 과정에서 수차례 녹음내용과 대조작업을 거쳐 수집된 내용의 변조가 없는지 확인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IV. 연구결과

1. 1950년대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 여부

법령과 문헌조사를 통해 밝혀진 1950년대 대통령경호 기관은 경찰이었다. 1949년 2월 23일 신설된 경무대경찰서 조직이 중앙청과 경무대의 구내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경무대 경찰서장이 경호책임자로 하여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하였고, 1949년 12월 29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제정된 ‘경호규정’에서도 서두의 ‘경찰경호’라는 표현을 통해 ‘경호’가 경찰의 중요업무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김은정, 2009). 경무대경찰서의 대통령경호 임무는 1950년대 10년간 지속되었으며, 1960년 6월과

8월에 대통령경호 임무가 이관된 기관도 역시 경찰이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막을 내리고 같은 해 6월 제3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정부형태가 변화하면서 대통령경호경비를 담당하던 경무대경찰서가 같은 해 6월29일 폐지되고 경무대 지역의 경비업무를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같은해 8월 13일 민주당 정부의 제2공화국이 수립되고 내각책임제하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에서는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를 설치하여 대통령의 경호 및 대통령 관저 경비를 담당하도록 하였던 것이다(양재열, 2005).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와 문헌자료에 1950년대 특무부대라는 경호기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특무부대 출신 생존자들은 현역시 계급과 직책이 달랐어도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했다고 증언한다.

“1950년대에 경찰이 공식 경호기관이었지만 실제로 특무대 요원들이 1선에서 경호를 했어요”(L연구관)

“그때 대통령 경호는 특무대에서 주로 했지. 특히, 군부대 지역으로 온다하면 특무대가 그걸 했어요. 대통령이 온다하면 그 부대 담당하는 특무대 부대원들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 다른 사람 절대 모르게 근무하면서 신변보호를 하고 그랬어”(H계장)

“대통령께서 지역에 가시면 지역 특무대장이 사전 경찰하고 협조해서 측근경호도 하고 외곽경호도 했지”(N처장)

“이승만 대통령이 외부에 나오면 특무대에서 근접경호를 했어요. 경무대에서 미리 연락이 와서 우리가 사전에 나가서 복귀하실 때까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요. 경호임무는 간접적이었고, 우리 특무대에서 어디 행차한다 하면 공개적으로 한계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가서 경호를 했어요”(J계장)

“육사가 진해에 있을 때 육사졸업식이고 뭐고 그런 행사에는 모두 갔어. 책임감 가지고 1선에서 경무대 특수대랑 같이 하고, 행사장이 정해지면 사전에 가서 안전 점검하고 다 했지. 그럼. 경호업무에 한치도 문제가 있으면 안되니까 최우선으로 했지”(Y계장)

면접 참여자들은 평균 8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前 기억에 대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특무부대가 대통령 경호를 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이라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특무부대의 경호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몰랐을지도 모르죠. 정상적으로 다들 해왔으니까...(N처장), 대통령이 특무대를 의식하고 뭐 그런 것은 없어요. 특무대에서 자체에서 알아서 해주고... 그렇지만 대통령은 그걸 알고 있지”(H계장)

특정조직이 자기들의 자체판단으로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고, 정작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意識을 안했다⁹⁾는 것은 全世界 경호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매우 희귀하고 특이한 연구결과가 아닐 수 없다. 말단 제대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는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에 의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부대원들의 경호업무를 전체적으로 통제했던 특무부대 조사처장 출신인 N처장이 “대통령께서는 몰랐을지도 모르겠다”고 한 것은 최소한 특무부대원들의 경호활동이 매번 정식 경호계획 형태로 사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전혀 모르게 국가의 公的 기관이 지근거리에서 수시로 경호임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연구자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정보기관의 首長만이 대통령에게 직접 독대하여 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김창룡을 비롯한 9명의 특무부대장들이 직접 이승만 대통령을 독대시 자신들의 경호활동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소결, 즉 “특무부대 요원들이 대통령 경호를 한 것은 맞으나,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었는지는 경호책임자인 특무처장도 모를 정도로 대통령과 특무부대장간의 특별한 ‘신임-절대충성’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대원들의 경호활동은 대통령과 특무부대장간의 독대 자리에서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우선은 공경호 조직의 특성에 관한 사항이다. 양재열(2005년)은 공경호를 수행하는 조직의 특성으로 ‘공권력성’, ‘통합성 및 계층성’, ‘협력성’, ‘보안성 또는 폐쇄성’,

9) 개의치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

‘전문성’, ‘기동성’, ‘완벽성’ 등 7가지를 제시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私경호와 달리 대통령 공경호 조직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으로서 법적근거에 의한 공권력에 바탕을 두고 경호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모든 조직은 경호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통합된 가운데 수직적 피라미드형 상하계층을 이뤄 지휘감독이 이뤄져야 하고, 기관간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경호와 관련된 정보와 기밀의 보호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임무수행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과 기동성 및 완벽성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무부대는 이러한 공경호 조직의 특성 중 나머지 6가지는 且置하고도 첫 번째 ‘공권력성’의 특성을 갖추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대통령 경호임무는 정부의 공조직으로서 설치근거를 갖고 경호와 관련된 법규 등에 법적근거를 두고 공무를 집행하는 행위임에도 특무부대는 부대설치 근거인 「특무부대령」이 1957년 11월 21일에서야 제정되어 1950년 10월 21일 창설때부터 1957년 11월 21일까지 7년 동안은 공조직으로서 설치근거도 없는 상태였으며, 경호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또한 1949년 12월 29일 제정된 「경호규정」 제4조에 “경호에 당하여 미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후 면밀 주도한 경호계획을 수립하여 유루(遺漏)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당시 경호책임기관이었던 경무대경찰서가 긴밀히 협의해야할 대상기관 중에 특무부대가 포함되는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대통령과 특무부대장과의 특별한 관계이다. 대통령이 특무부대에 자신의 신변보호 임무를 줬거나, 직접 임무를 주지 않았더라도 특무부대의 이러한 활동을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특무부대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으며, 특무부대장은 이러한 대통령에게 조직의 모든 역량을 모아 절대충성을 다하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傍證으로서, 특무부대의 대통령 경호활동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¹⁰⁾

이 두가지 측면을 연결지어 보면 특무부대가 공경호 조직의 특성 7가지 가운데 ‘공권력성’이라는 특성에는 부합되지 못하지만 당시 특수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특무부대장간에 형성된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1950년대 특무부대원들의 대통령 경호임무 수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그 개연성을 높이게 한다.

면접 대상자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떠하였으며 특무부대가 대통령 경호를 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 즉 특무부대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10) 이승만 대통령과 특무부대장, 특히 김창룡 특무부대장간에 ‘절대신임-절대충성’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의 章에서 살펴보았다.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게 된다.

“그때만 해도 전쟁할 때고 전쟁 끝나고 얼마 안됐을 때고 하니까 더더욱이 오열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만 해도 공산당이 70프로가 넘었어요. 남로당이 70프로가 넘어가지고 저기 전라도 일부하고 경상도, 제주도 지역에서는 해만지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공비가 내려와서 지리산에서 공비가 내려오고 한라산에서 공비가 내려와서 습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니까 철저히 안할 수가 없었어요”(N처장)

“그때는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그런 게 없었거든. 특무대 밖에 없었던 말이야. 그때는 바로 근접경호를 우리가 했어”(K부대장)

“특무대 요원들 선발될 때 미국 CIC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특무대 정보시스템이 미국에서 다 들어온 것이예요. 해방전후 경찰에서 리더를 했지만 여순사건이 터지면서 계엄이 발동되고 군사체제화 되어갔지. 그러면서 가장 충성심이 엿보이고 스피드하게 한 데가 특무대였거든. 대통령 신뢰가 컸어. 김창룡 대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자기도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무대가 주도적으로 일을 했지. 김창룡 특명에 의해서”(L연구관)

“특무부대령이 1957년 11월 20일 제정되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경호임무는 우리가 내규를 만들어서 했고, 우리가 거머쥐고 하니까 경찰도 못들어오고 했지. 그러다가 중앙정보부가 생기고 나서는 중정이 근거리에서 하고, 우리는 외곽에서 했지”(Y계장)

특무부대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설치근거 유무나 경호임무에 관한 법적근거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식이 없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불과 몇 년 만에 6.25전쟁이 터지고 국토의 대부분이 인공치하가 된 절체절명의 시대에 미군 방첩대로부터 방첩활동을 전수받은 유일한 기관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각오로 오로지 특무부대장의 특명에 따라 “우리 밖에 없다”는 일념下 대통령 경호임무를 자처한 것이다.

2. 특무부대 경호활동의 방법과 형태

1) 경호의 대상

오늘날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가족, 대통령당선인과 가족, 대통령권한대행과 배우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퇴임후 10년 이내 전직대통령과 배우자, 방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배우자, 그 밖에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으로 하고 있지만,¹¹⁾ 1950년대 당시에는 대통령, 부통령, 외국의 원수,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또는 외국의 使節과 기타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로 되어있던 시기였다.¹²⁾

심층면접에 응한 특무부대 출신 생존자들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대해서만 언급하였고, 다만 당시 특무부대의 경호활동을 총괄했던 특무처장 출신 N처장만 “국무총리 등 요인이 지역에 들어왔을때는 간접 경호하고 했다”라고 한 것이 전부인 점을 미뤄 볼 때 연구자는 특무부대의 경호대상이 역대 경호책임기관에서 「경호규정」·「경호실법」 등에 의한 경호 대상 전부를 경호했던 것과 달리 특무부대장의 특명에 의한 이승만 대통령 경호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본다.

2) 경호 조직

일반적으로 조직은 어떤 특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가급적 그 목표를 합리적으로 이룩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분업의 원칙에 따라 편성·운영되고 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한 조직은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 외에도 공권력성, 통합성 및 계층성, 협력성 등 公경호 조직으로서의 특성들을 갖추고 있다(양재열, 2005).

1950년대 경호책임기관이었던 경찰, 즉 경무대경찰서는 현재의 경호처 조직¹³⁾과

1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2017.7.26.)

12) 내무부훈령 제25호 「경호규정」 제2조(1949.12.29. 공포)

13) 경호처는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단으로 편성되며 경호전문교육을 위한 소속기관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두고 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국회/예산 등 대외업무와 조직/정원관리업무 및 미래 경호위협분석/대비업무를, 경호본부에서는 대통령행사 수행 및 선발경호활동과 방한하는 외국정상, 행정수반 등 요인에 대한 경호를, 경비안전본부에서는 청와대와 주변지역 안전확보를 위한 경비총괄, 청와대 내외곽을 담당하는 군경 경호부대 지휘, 국내외 경호관련 정보수집 및 보안업무, 행사장 안전대책 강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경호지원단에서는 시설관리, 경호차량운행 등 경호행사 지원업무와 국정업무 통신망 운용 및 과학적 경호시스템 구축, IT장비개발업무를, 경호안전교육원에서는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와 직원교육 및 경호안전 분야 종사하

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소규모였지만, 경찰서 밑에 경무계, 사찰계, 경비계 등 3개의 부서를 두고, 경무계는 경무·통신·경리업무를, 사찰계는 사찰·형사업무를, 경비계는 경비·보안·수행·차량·이화장 관리업무를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 경호를 위한 책임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임무분장을 하였다.¹⁴⁾

여기에 반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1선에서 모셨다는 특무부대에는 본부내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전담으로 계획하고 지휘·감독하는 부서도 없었고, 행사장 안전대책이나 안전조치 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별도 조직 또는 예하부대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경무대경찰서 같은 자체 경호부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투입되는 대원들 계급은 일개 파견대에 한 40명 이상 됐으니까 대장부터 쏠 계급이 다 해당되고 충분하죠”(N처장)

“우리 특무부대 내에 경호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내부 문서를 다 뒤져보고 비서실 근무를 하면서 3년간 자료정리를 했지만 없어. 전부대원이 그때는 메달가지고 신분, 영역을 따지지 않았어. 민간이든 군이든 영역이 어딴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행차하신다 하면 전국의 부대들이 핵심적으로 경호를 했지. 경호 1선에. 최우선으로. 대통령이 짚차를 타고오든 비행기를 타고오든 열차를 타고 오든 특무부대원들이 목숨 내놓고 권총차고 최고로 모셨어요”(L연구관)

특무부대원들의 대통령 경호활동 속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의 표현대로라면 특무부대라는 軍 정보수사기관 전체가 경호조직이었다는 셈이다. 경무대와 중앙청의 구내를 관할지역으로 하여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책임지고 있던 경무대경찰서가 공식組織이었다면, 전문·전담 조직도 없이,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대장부터 쏠 계급이 목숨 내놓고 경호현장에 투입된 이 조직은 대통령의 절대 신변보호를 위한 비선조직 성격에 더 가깝다고 여기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대통령 경호처 홈페이지)

14) 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http://www.pss.go.kr/pss/data/history.jsp>)

3) 경호활동의 범위(군부대 행사, 민간지역 행사)

경호활동의 범위를 군부대 행사와 민간지역 행사로 따로 구분하여 분류하지는 않는다.¹⁵⁾ 다만, 여기서는 특무부대 경호활동의 방법과 형태 등 특성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1950년대 특무부대의 대통령 경호활동을 총괄했던 당시 특무처장 출신의 N처장과 6.25전쟁 前부터 특무부대 본부 및 서울지구대에 줄곧 근무했던 H계장의 심층면접 결과를 보면 1950년대 당시 부대원들이 군부대와 민간지역 경호행사 모두에 투입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께서 군부대뿐만 아니라 민간지역 오셨을 때도 해당지역 특무대가 외곽 경계도 하고 했죠”(N처장)

“일반지역으로 올 때는 그 지역 특무대에서 신변보호를 위해서 대통령 주위를 앞뒤로 가면서 경호를 했고... 차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냥 대통령 그쪽에서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혹시 총으로 도발 하는 것이 나타날까봐 감시하라고 그랬지. 차로 따라 갈수도 없는 것이고 배치해 놓고는 가는 길을 감시하는 걸로 했지”(H계장)

이러한 1950년대 특무부대의 軍 · 민간영역을 망라한 경호활동은 이후에 나타나는 방첩부대 · 보안부대 · 국군보안사 · 국군기무사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경호활동 범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특무부대가 단순히 軍內 경호행사에 ‘동원’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영역의 경호행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통해 조직의 경호임무 수행역량을 축적하고 대외적 위상을 높였기 때문에 1961년 10월 25일 국가재건회의에서 박정희 의장(中將)에게 보고한 「중요행사 및 요인에 대한 통합경호」에서 방첩부대가 모든 종류의 경호행사 임무를 위한 편성에 포함되고, 행사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안전조사 책임관으로 방첩부대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63년 정식으로 경호전담기관인 경호실이 창설된 이후에도 경호임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위상과 역할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당시 근무부대원의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15) 경호의 대상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한 경호행사 등급으로만 분류한다.

“軍 헬기장이나 이런 데로 오시면 우리가 다 했고, 민간지역으로 오시면 경찰이 있고 경호실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원해주고 그랬지. 軍 비행장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했지. 경호실에서 나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요청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경호를 해주고 우리가 굉장히 앞서서 경호를 한 적이 있어요. 국책사업 현장 같은 곳에 사단 병력이 투입되어서 경호경비작전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지”(I과장)

이러한 활동범위는 점점 구체화되고 명문화되어, 1975년 8월 2일부터 1995년 12월 14일까지의 경호관련 규정에 軍 및 軍 관련 경호행사의 책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1995년 12월 14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개정시는 軍 및 軍 관련 행사의 범위를 뛰어넘어 ‘국내·외 경호행사 지원’으로까지 확대되게 된 것임을 알게 된다.

4) 배치구역 및 경호활동 내용¹⁶⁾

90세 전후의 생존자들에게 경호원리와 경호관리 10대 구성요소를 구조화된 형식을 갖춰 질문하는 면접 수행이 제한되어 “어떤 식으로 경호를 했는지” 짧은 질문을 던지고 각자 그들만의 언어로 40년 前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상세하게 당시 부대원들의 배치구역과 활동내용을 혼합하여 설명하는 것을 청취하였고, 일부는 건강상 이유로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정확한 의미전달이 힘들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심층면접 결과를 정리하면, 1950년대 특무부대원들은 배치구역에 있어서는 1선(안전구역), 2선(경비구역), 3선(경계구역)에 모두 배치되었고, 경호활동 면에서는 ‘검식, 통신, 의료지원, 기동지원, 경비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관이 있었다. 다만, ‘수행’의 경우에는 경무대를 출발해서부터 복귀시까지 쉼 구간 수행이 아니었고, 행사장 지역에서의 구간이동간 수행도 대통령과 일정공간이 이격된 상태의 수행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호학에서 의미하는 수행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선발’의 경우 또한 경호책임기관에서 편조팀(Task Force) 개념으로 경무대로부터 사전 출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선발팀’의 통제를 받거나, ‘선발팀’과 협조·지원관계에 있던 특무부대의 활동내용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무부대원들의

16) 당시 특무부대 요원들의 배치구역 및 경호활동을 오늘날 경호체계상 배치구역 및 경호활동과 비교 설명하기 위하여 양재열(2005)의 논문내용을 참고하였다.

활동은 경호관리의 10대 구성요소 면에서는 ‘정보업무, 보안업무, 검측업무’에 해당하는 경호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는 특무부대의 경호활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경호’의 전반을 기능별로 묶은 ‘경호관리 10대 구성요소’는 공경호의 책임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를 주체로 한 기능별 분류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창설되기 이전인 1950년대 시대적 상황에서 특무부대라는 특수기관이 수행했던 대통령 경호에 관한 역할과 기능이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먼저 유일한 장군출신으로 주로 전방지역 특무부대에서 근무하다 나중에 국방부 초대 보안부대장을 역임하고 퇴역한 K부대장의 면접 결과는 [1·2·3선 배치] - [정보·보안·검측업무] - [현장답사·경호안전활동·경호활동]으로 요약된다. K부대장이 대통령을 측근에서 계속 수행하지 않고 뒤따르는 쫓차 안에서 후속하여 이동하였기 때문에 [수행]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민간행사나 후방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방지역이나 후방이라도 군부대 행사 때는 특무대에서 사전 답사하고 서치하고 당일 오셨을 때 차 뒤에 바짝 붙어 경호했지. 뒤에 붙어서 수행 측근경호를 할 때 권총 실탄도 다 가지고 가지. 그러니까 쫓차에 내가 앞에 타고 뒷좌석에 부대원 둘을 태우고 바짝 붙어서 갔다니까. 행사장에 도착 했을때에도 우리 부대원들이 잠복은 아니어도 미리 가서 동향파악하고 서치를 하고 있지. 행사 끝날 때까지 요소요소에 배치가 다 되어있지”(K부대장)

특무부대 본부에서 부대원들의 경호활동 업무를 총괄 지휘했던 특무처장 출신 N처장의 더욱 구체적인 심층면접 결과는 이러한 K부대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알게 한다.

“특무대장이 자기 지역에 대통령 모시기 위해 사전경호 하고 대장은 측근경호도 했고 외곽경호도 했습니다. 사전현장 말하자면 대통령 오시는 현장을 검색을 한다든지 은닉해 놓은 것은 없는지 주위에 있는 불순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안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고 또 돌발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사복부대가 나서서 배치되어 가지고 순찰하면서 하고 하죠. 행사당일 역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주위에 1선, 2선, 3선에 배치가 됐죠. 그러니까 행사장에 사전에

하루 이틀 전부터 그런 제반 안전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당일 날 들어오셨을 때도 1선, 2선, 3선에서 같이 배치돼서 하고 한거죠. 행사장으로 이동할 때도 지역에 있는 특무대장이 차로 뒤 따라 갔죠. 대통령께서 어딜 간다 하면 미리 이동로 상에는 미리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치하고 또 주위에 도로관계는 특무대 인원들이 경찰 들하고 헌병들하고 사복입고 배치되어 가지고 그 주위를 살피죠”(N처장)

강릉·대구·청주·대전 등 주로 지방에서 특무부대 부사관 및 준사관으로 근무 했던 J계장 또한 사용 언어·표현은 틀리지만 앞선 장군·대령 출신의 심층면접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 오시면 각 지구대별 7~8명씩 사복입고 따라다니고 측근경호를 했지. 따라 다니고 바깥에는 경찰이고 하여튼 노출되게 안하고 근접에서 했어요. 차량으로 미행한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고 행사를 하면 거기에 가 가지고 사전에 미리 가서 그 주변을 경호하고 경계를 보고 끝나고 오면 경호실하고 연락하고 한 것은 없고 그 행사에 사전에 가서 답사하고 경호형식을 취한거지요”(J계장)

한편, 위의 J계장은 특무부대 하사로 임관하기 前 1953년부터 1956년까지 당시 중앙청 앞 3층 건물에 있던 특무부대 본부 행정병(이등병~병장)으로 근무당시 특무부대 본부 ‘특무과’ 요원들이 이승만 대통령 서울 시내 행차시마다 매번 경호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다른 참여자들과의 면접에서는 일치하거나 비슷한 내용이 없어 확인이 제한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시내 나가시면 꼭 2명이 앞뒤로 붙어서 경호를 했어요. 경무대로 들어가시면 복귀하고 대통령 행사가 있으면 그때마다 우리부대 특무과 요원들이 나갔어. 밖에 나올때만. 청와대 안에 있을때는 말고 밖에 나올 때... 그러니까 바깥 붙은거나 마찬가지여. 두 사람이. 경무대 요원이 있지만은... 우리복장은 사복 정장이었고 신분은 하사관이나 문관이 했음. 소속은 특무과 요원들이었음. 경무대에서 따라나온 경호요원이 있지만 우리 요원들이 했음. 우리 특무대 경호요원들이 다녀와서 얘기를 하니까 본부중대 서무계인 내가 알지”(J계장)

1·2·3선에 배치된 특무부대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어떻게 행

동하였는지는 1957년부터 특무부대(이후 방첩부대, 보안사)에서 32년 동안 복무하다 1989년 준위로 전역한 Y계장의 면접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Y계장은 연구자와 심층면접이 끝난 후 자신이 언급했던 내용과 면접 때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까지 추가로 확인하여 직접 A4 문서로 PC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는데, 全文 가운데 부대원들의 구체적 행동 부분을 표 형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7〉 특무부대원 경호투입 前 교육내용 및 활동요령

교육 내용	<p>① 경호업무는 국가와 민족관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을 인식하지 않고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휘체계에 보임된 장교 및 기타 간부는 부실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례 없도록 경호근무자들의 행동과악 및 엄중하고 철저한 사전교육을 받았음.</p> <p>② 경호업무 원칙에 준해 피경호 대상 및 행사에 관한 근접경호 및 외곽배면 경호근무자에게 각기 임무가 부여되었음.</p>
활동 요령	<p>① 외곽배면경호 근무자는 행사장에 집결된 일부 군중中 및 특정인사, 단체 등에게 유언비어 유포 및 불순행위를 행하는 자를 적발과 동시 경호지휘부에 보고 및 직접 인접 경찰 및 헌병 등이 조치토록 함.</p> <p>② 경호 근무간에는 인접 일반인과 잡담을 금하며 면식이 있는 사람과도 사담을 피하고 위엄 성있게 목례로 인사함.</p> <p>③ 경호 업무수행중 주변의 잠상행위자의 음식물 및 기타 잡다한 물품매입 행위로 위신 추락 행위를 금지토록 했음.</p> <p>④ 미협의 매체 무단취재 행위와 신문, 방송기자, 미표시자 취재행동을 차단함.</p>

5) 복장 · 비표

특무처장 출신의 N처장 면접결과, 당시 특무부대원들은 군부대 행사시는 군복을, 민간지역 행사시는 사복을 착용하였으며, 상호식별을 위해 특정한 표식을 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장은 지역특무대가 민간지역에서 경호 할 때는 사복입고, 군부대 오셨을 때는 사단 특무대가 군복입고 했어요”(N처장)

“표시는 옷의 특정부위에 핀을 단다든지 어떤 모자를 쓴다든지 또 모자에 무슨 표시를 했다든지 그때는 뻗지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가령 모자 옆에다 핀을 꽂는다든지 노란 리본을 붙인다든지 상의 오른쪽에 뿔 붙인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죠”(N처장)

6) 임무수령 · 보고계통 및 경찰 등 他 기관과의 관계

특무부대 생존자들의 심층면접 결과, 당시 특무부대가 어떤 경로를 통해 경호임무를 수령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특무부대가 상부지시나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특무부대장의 특명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했다는 앞의 내용과 대통령의 외부 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경호계획을 수립하여 특무부대장에게까지 보고했다는 N처장의 증언대로라면 경무대內 경호관련 부서 또는 의전관련 부서로부터 ‘경호임무’가 아닌, ‘대통령의 외부 일정’을 전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대통령의 외부일정을 파악한 특무부대 본부에서는 해당지역 관할부대인 ○○지구 특무부대에 경호계획수립지시를 하달하고, ○○지구 특무부대에서는 현장답사 등을 통해 경호계획을 수립하여 특무부대 본부에 보고후 경무대경찰서 및 현지 경찰·헌병 등과 합동으로 행사 종료시까지 각자 맡은 경호활동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 심층면접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호계획보고가 경무대(경찰서)에까지 이르지 않고 특무부대장한테까지만 종결, 즉 특무부대장 책임하에 이뤄졌다는 N처장의 증언이다.

“특무대 본부에서 조사처장을 할 때 경호업무를 전체적으로 통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무대 경찰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는 것은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특무대장에게 보고를 하고 경호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강원도 김일성 별장에 대통령 오신다 하면 몇 박 며칠을 오시는데 주위는 어떻게 경호한다 하는 계획이 서는 거죠”(N처장)

N처장은 대통령 경호책임기관인 경무대경찰서 및 일선 경찰서·헌병대와는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당시 대통령 경호는 경무대 경찰서가 지금 경호처처럼 했어요. 했지만 자체적으로 알아서 현지 부대장이 대통령이 오신다든지 자기 관할구역에 오신다든지 할 때는 수행하면서 불순분자가 끼지 않게 하면서 경무대 경찰하고 경호를 합동으로 한거죠. 경무대 경찰서는 대통령을 전적으로 경호하는 곳이고 특무부대는 특무부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관할지역에 대통령이 오셨을 때 경호하는 것과 또 대통령이 지역을 순회하실 때 그 지역에 대한 경호를 했죠. 현지 경찰하고 현지

헌병대 전부 합동으로 해가지고 했죠. 현지 경찰서 그리고 우리 특무대, 그리고 헌병대 전부 같이 경비도 하고 했어요. 경찰주관해서하는 것 하고 지역 특무대에 서 하는 것 하고”(N처장)

현장에서 경무대경찰서 인원들과 직접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했던 Y계장은 “경무대경찰서 인원들과 1선에 합동으로 배치됐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었다.

“당시 경무대에 특수대가 있었어. 그 사람들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는데 현장에서 우리하고 같이 했지. 을지로 6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자리에 있었던 서울운동장에서 축구, 야구 전국대회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참석하면 특수대가 1선 경호를 현장에서 특무부대원하고 같이 했어. 그때는 특수대하고 우리 특무대 밖에 없었어”(Y계장)

그리고, K부대장은 주로 전방 군단급 특무대에서 근무한 기억을 근거로 특무부대 본부로부터 경호임무를 수령한 이후에 이뤄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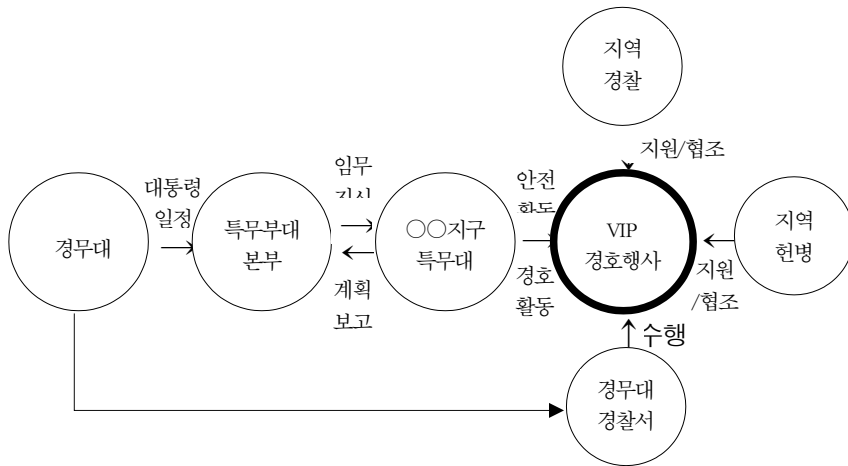
“지시는 특무대 본부에서 내려오지. 그때 경무대 경호부서하고는 관계없고 서로 모르고 본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한거야. 미리 몇 시에 가신다고 지시가 내려오면 예방활동을 연대면 연대 그 보안대가 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聯隊長하고 해가지고 미리 경계를 다 선다고. 사전에 답사를 다 해가지고 서치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거하고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수행하는 것과 경찰보다 우리가 빨랐어. 우리가 더 가까이에서 했어”(K부대장)

특무부대 요원들이 경찰과 대등하게 합동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특무부대가 중심이 되어 경찰·헌병의 지원을 받아 임무를 수행했고, 특무부대가 현지 경찰관들의 배치상태까지 확인·점검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특무부대 내정치와 조사처에서 대통령 경호를 전담함과 동시에 행사의 경중도에 따라 헌병 및 경찰의 지원을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하였음”(Y계장)

“거기에 가서 경찰 배치하고 뭐 하는 것들 우리가 가서 점검하고 행사 끝나고 나면 바로 서울로 올라오고 했어요”(J계장)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특무부대의 경호임무수령·보고계통 및 他 기관과의 관계

6) ‘太陽’ 용어 사용

특무부대 생존자들은 연구자와 심층면접에서 ‘태양’이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전체 면접결과 자료에 대한 키워드 분석에서도 ‘태양’이라는 용어가 8번째로 도출되었다. “특무부대는 대통령을 경호하였으며, 그 태양 경호를 위해 전국의 부대원이 투입되었다”는 식의 話法에서 ‘대통령=태양’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90년 초반까지도 각 지역별 부대에서 역사자료로 존안하기 위해 매일 매일 그날에 있었던 주요활동을 기록할때 ‘대통령 경호’라고 하지 않고 ‘태양 경호’라고 작성했었다는 ○○지구부대 행정과장 출신 I과장의 증언대로라면 이 용어는 특무부대 뿐만 아니라 방첩부대, 보안부대, 국군보안사, 국군기무사 초기까지 최소 40년 이상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피경호인의 안전을 위한 경호보안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매번 행사시마다 용어가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軍 정보수사기관의 이러한 용어사용은 매우 이례적이라 하겠다.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대통령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어떠하였는지 알게 한다.

“대통령 즉, 태양이 떴다하면 모든 업무에 우선해서 이승만 대통령 경호에 올인을 했어. 그때 대통령을 태양이라고 했어요. 태양 · 달 그렇게 했어요. 국회의장이 그 뭐야 달이지. 달 · 목성 · 금성 · 토성 다 나왔지요. 대법원장까지 다 했어요”(L연구관)

“그때 대통령 경호를 할 때 대통령에 대해서 태양이라고 했지. 태양이라는 용어를 썼지. 매번 행사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라고 하면 무조건 대통령이 야”(K부대장)

“우리가 암호로 태양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J계장)

“기록에 ‘태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건 암호죠. 내부에서만 쓰는 암호죠. 행사를 하는 해당지역에서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용어죠”(N처장)

“태양이라는 용어를 썼지. 우리가 소위 저 경호상 보안을 위해서 경무대 경호부서하고 협의를 한 거지. 다른 기관은 그런 용어를 사용 안하고 우리만 그렇게 호칭을 했지”(Y계장)

3. 그 밖의 면접결과

연구자는 70년 전 그들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대한 자료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호와 관련된 자료를 스캔하여 이 연구에 포함시키고 싶었으나 경호현장에서의 사진촬영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특무부대의 경호활동이 경무대경찰서의 공식활동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기에 심층면접을 마무리하면서 몇가지 질문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H계장: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뵈고 인사도 하고 그런 일이 있고... 그때는 특무대 꽃발이 대단했어”

K부대장: “이승만 대통령이 양아들 이강석의 갑종간부 졸업식에 오시고 했을 때 내가 광주지역 특무대장으로 있으면서 이강석 신변보호 책임장교

임무를 수행했지. 이때가 아마 1956년인가 1957년일 것임. 6군단 특무부대 근무할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방지역 오셨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탄 썰차가 앞에 가고 그 뒷차에 내가 앞좌석에 타고 뒷좌석에 특무요원 2명 태우고 바짝 붙어서 경호했지. 내가 6군단 특무과장 할 때니까 중위때지”

연구자: “증빙자료나 사진 같은 것은 없나요?”

N처장: “자료나 사진 같은 것은 너무 오래돼서 없고, 특무부대에서 이승만 대통령 모시고 56명인가 김창룡하고 예하대장들이 서울이 수복된 후 경무대에서 사진 찍은게 있었는데 기무사에 기증했어요”

V. 결론

첫째,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 남한 전역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 하에서 당시 軍 정보수사기관인 특무부대는 법적으로 명시된 임무에는 없었지만 이승만 대통령 경호활동을 수행하였다.

둘째, 특무부대의 경호대상은 ‘현직 대통령’인 이승만에 한정되었으며, 가족 중 군 복무중인 양아들(이강석)에 대한 신변보호 임무도 수행하였다.

셋째, 특무부대의 경호임무 형태는 대통령의 외부행사시 軍部, 民部를 가리지 않고 사전 안전활동과 행사당일 1선에서부터 외곽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특히 軍 관련 행사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행사 성격에 따라 공식 경호기관이었던 경찰보다 더 측근인 1선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넷째, 특무부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太陽’이라는 내부 암호명을 사용하였으며, 요원들은 특무대장 김창룡이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최측근에서 임무수행한 지휘관으로 인식하였다.

다섯째, 특무부대에는 별도의 경호조직이나 경호전담요원 없이 전국의 특무요원들이 최우선 공통임무로 대통령 경호임무에 전원투입되었다.

이러한 요원들의 노하우는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기무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기능을 확충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비정상적인 병력 움직임과 군부대 내 경호위협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특무부대 등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문헌자료가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자료존안이 이뤄지지 않았고, 심층면접 대상자인 생존자들 또한 평균연령 85.5세로서 구술내용 검증 및 효과적인 분석에 제한점이 많았다. 앞으로 민간기록 출처 확보 및 더 나은 연구방법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군기무사령부 (2001). 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부 50년 사진집(1950~1977). 군인공제회 제1 문화사업소. 19-123.
- 김은정 (2009). 한국의 경호 인식 형성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재열 (2005). 국가원수 경호 시스템의 변화와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세용 (2003). 경호시스템의 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대인 (2011). 대한민국 특무부대장 김창룡. 서울: 기파랑. 155-187.
- 정영일 (2013). 대통령 경호기관의 역할변화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광래 (2011). 대통령 경호실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일수 (2015). 헌병의 경호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종광 (2014). 한국 경호기관의 업무 한계요인과 개선방향. 경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기타자료

- 오동현 (2019. 1. 18). 정부, ‘육상-공중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에 올해 73억 투자. 뉴시스. 검색일 2019. 7. 27.
- 오종택 (2018. 12. 18). 르포 창설 100일 안보지원사, 기무사 색깔 빼고 환골 탈태 중. 뉴시스. 검색일 2019. 8. 26.
- 전경웅 (2018. 9. 6). 각국의 정보기관은. 미래한국. 검색일 2019. 8. 15.
- 원허스님 (2004). 「이승만 대통령 “노스님 잘 모시게”(스님행장)」, 『불교신문』.
- 대통령경호실법(법률 제1507호, 제정) 1963.12.17.
- 대통령경호·경비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7246호, 제정) 1974. 9.11.
- 대통령경호·경비안전대책통제단설치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7713호, 제정) 1975. 8. 2.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0233호, 제정) 1981. 3. 2.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4826호, 일부개정) 1995.12.14.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482호, 일부개정) 2004. 7.24.
- 대통령경호실법(법률 제7388호, 일부개정) 2005. 3.1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2017. 7.26.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 제29114호, 제정) 2018. 9.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훈령(국방부훈령 제2197호, 제정) 2018. 9. 1.

관보: 경호규정(내무부훈령 제25호) 1950. 2.21.

국가재건최고회의 '중요행사 및 요인에 대한 통합경호'(내무제55호) 1961.10.31.

舊:국군기무사령부 : <http://www.dsc.mil.kr> 검색일 2018. 6. 14.

대통령경호처 : <http://www.pss.go.kr> 검색일 2019. 9. 11.

【Abstract】

**A Study on Presidential Security Activities of
Military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y:
focusing on Teukmubudae and Its Performance
for the Security of President Syngman Rhee in
1950s**

Jung, Joo Ho^{*} · Choi, Joong Young^{**}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s by the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were known to the world as official when the "Integrated Security for Critical Events and Key Figures" document, which was prepared at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on Oct. 25, 1961, and reported to Chairman Park Chung-hee (military lieutenant general), was issued. That was the first time to acknowledge that Counter Intelligence Corps (Teukmubudae in Korean) as a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at that time, officially took active roles, took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for presidential security work.

Since then a series of laws such as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Act (1963),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Security Countermeasures Committee Act (1974) and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Security Assistance Command (1981), were enacted and stipulated relatively specific details of the duties and roles of the military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y. We might infer some view from those laws that what has been changed in the duties and roles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 over time.

^{*} Gachon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ce Security Professor(The 1st Author)

^{**} Gachon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ce Security Course of Ph.D(The Corresponding Author)

However, it is only the case when some historical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work were found and compared. Even before those documents, it was said for the agency to take some roles in protecting presidents and there are little of (legal) documents, reports and studies related to its presidential security works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kind of new historical facts on Counter Intelligence Corps (Teukmubudae) and its performance for the protection of President Syngman Rhee in 1950s, which has not been known at all and so any kinds of recognition.

This thesis will also study on what and how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s by the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has been conducted and changed by critical historical phase. It will make contribution to fill in the important parts of the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history that have been missing and disregarded as partial and peripheral and to complete the whole picture of Korean presidential security works. Additionally that historical approach will show how the military agency in the middle of a political upheaval, could and should carry out and take responsibility for presidential security which was conferred to it. This historical analysis on the changes of the military agency and its works of presidential security from its official foundation to the present, will provide a significant context where the main study of what and how the agency had carried out its work(presidential security) would proceed into meaningful findings and interpretation.

For the study, first of all, it does some content analysis by dealing with historical documents of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and its works on presidential security since the official/legal stipulation of the agency' s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the president in 1961. It brings out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agency' s works, the entitlement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actual activities, cooperation with other security forces such as police and the Korea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particular.

Based on that historial analysis, this study explores how the agency had carried out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how it could be involved into the security work. It questions about what ground it could do the work in 1950s when there was no official recognition of its works, and if it did, how it would

do the job of protecting the president in a way that would be different in comparison to other protecting forces. With those questions, this study conducts in-depth interviews with some of the former agents who were involved into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s while serving in the Korean agency as officers, warrant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The interviews were analysed both of by using text mining and keyword analysis, and traditional interviewing coding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e qualitative interviewing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the 1950s, the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was request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the president, that is, president Rhee Syngman while its was not legally stipulated or conferred to them. It carried out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 based on the situational understanding and the following reasonable decision that North Korean armed forces and leftist forces throughout South Korea in the 1950s were threatened to the safety of the president Rhee.

Secondly, The agency' s security only focused on the president Rhee and was expanded to protect his adopted son, Rhee Kang-Seok who served in military at that time. We can say that the agency' s work only covered the president Rhee himself and was limited into just one of his family, the adopted son serving in military at that time.

Third, the military agency conducted its security duty for the president when he attended some external events either of in military and in civil and its works included previous safety check-up before events and during events, actual protection of the president in an extensive manner from the first line of presidential safety to the outskirts. In particular, it was intensively conducted during military-related events, and sometimes in a particular case, it was assigned to the first line of duty more closely than the police, which was the official security force at that time.

Fourth, The agency used the internal code name of "the Sun" for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agents involved recognized Kim Chang-ryong, that is, the commander of the agency as main commander closest to the president in the duty of security. It seemed to be possible because the Commander Kim received the most trust of the president and worked as his closest aids.

Fifth, the agency did not organized and formed a unit or trained agent

specialized into the presidential security for the duty and all the agents in the agency through out the country, were expected to put an priority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when it was required. That is to say,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 was the top priority one given commonly to the agents in the agency. It could be inferred that all the agents around the country could be mobilized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resident and the duty was inseparable to the existence of agency, its responsibility and the organizational identity.

Key Words: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Teukmubudae(Special Operation Unit), Defence Security Support Command,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 President Rhee Syngman.

대규모 국제행사 테러대책 발전방안

전 종 섭

대규모 국제행사 테러대책 발전방안

전 종 섭*

[국문초록]

각 국가는 올림픽·월드컵 등의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외교·정치 발전은 물론 관광·문화 등 소프트파워 성장과 경제적 이득 등으로 긍정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 체육·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대규모 행사 개최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테러단체의 집중 타겟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이 연구는 대규모 국제행사에서의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운영된 대테러대책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드론안전, 질병관리, 사이버대응 등 새로운 형태의 안전위협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 또는 기술적 한계 그리고 상상력 부족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조직위와 정부 컨트롤 타워인 대테러안전대책본부와의 협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

이에 기관들 간의 협조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MOU체결 및 민간안전인력활용 확대와 노하우 및 첨단장비, 사전교육 등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티드론, 사이버대책, 질병안전, 민간경호·경비업의 발전 등이 이루어질 기대한다.

주제어 : 평창동계올림픽, 국제행사, 국가중요행사, 테러방지법, 대테러센터

* 국가정보원 행정심판위원(제1차자)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개요 및 위협 분석
- IV.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 성공요인 및 미비점
- V. 국제행사 대테러정책 발전방안
- VI. 결론

I.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 들어 체육 · 회의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가 급증하고 있다. 올림픽 · 월드컵 등 대규모 스포츠행사의 경우 국가의 외교 정치 발전은 물론 관광 · 문화 등 소프트파워 성장과 경제적 이득 등으로 긍정 파급효과가 크다(옥광, 김재수, 2011; 남재성, 강남수, 2012).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행사는 개최지 뿐 만 아니라 개최국의 정치, 경제, 관광 산업 등 많은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기대되는 국제적인 이미지 상승과 함께 잠재이익 및 가치를 인식하고 막대한 투자비용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대규모 스포츠 관련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강원도에서 23회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로 우리나라와 해당 지자체인 강원도에 미치는 긍정적 이미지 상승뿐 만 아니라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긍정효과가 나타났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국내외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국제테러정세는 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¹⁾가 우리나라를 ‘십자군동맹’, ‘악마의 연합군’(2015. 9.)

이라고 지칭하며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하였고 인터넷상에 주한미군 위치(2016. 6.), 우리 국민의 신상정보(2016. 2.)를 공개하면서 테러를 선동하고 있었다. 또한 ISIS는 시리아에서 패퇴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하였는데 이들의 거점이 인도네시아·필리핀등지로 東進하면서 국내 거주하는 극단주의 추종세력들에 의한 테러 가능성 때문에 긴장한 상황이었다. 한편, 북한은 2017년 들어 잇달아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실험을 자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군사도발을 지속하였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의한 후방테러 위협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올림픽은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행사로 평창올림픽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올림픽을 지향하고 있어 사이버 안전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과 병행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국가 신인도 추락 등에 효과적이면서도 공격은익이 용이하여 우려가 컸다.

이러한 대내외 어려운 여건 가운데 정부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 공조, 대테러 안전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테러 및 안전사고 없는 올림픽을 완성하였는데, 과거 어느 올림픽보다 안전하게 행사를 개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내외의 호평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테러안전활동 준비 단계에서부터 현장 활동 과정에 이르기까지 개선할 부분이 눈에 띄었다. 평창동계 올림픽은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최초로 개최된 국제행사로 새로운 법체계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유관기관이 공조하여 대테러활동을 수행하였다. 그간의 국제행사는 대통령 훈령47호인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나 평창동계올림픽은 총리실 대테러센터가 주관하게 되었다. 다만 국정원의 그간의 국가중요행사 안전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올림픽이라는 국가대사라는 점을 감안, 국가테러대책 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대테러센터와 국정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대테러안전본부를 구성하여 안전 유관기관을 조정 통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더 개선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또한 그간 테러와 안전 등 물리적 대응에만 치중함으로써 겨울철 전염병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사전 예측과 대비가 부족하였으며, 조직위(안전관)와의 안전정책 공조문제는 충분한 협의와 조율이 미흡한 점도 있었다.

그리고 민간 안전인력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요령 교육이 부족하여 초기에 혼

1) 언론 등에서는 ISIS를 IS(Islamic State)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시리아 사태 해결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2017년부터 ISIS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ISIS로 쓰고 있다.

란을 초래하였으며, 안전요원들의 통신수단이 미흡하였고, 최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카카오톡을 主 통신수단으로 활용하였으나, 보안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드론 등 신종유형의 안전위협 대비도 충분하지 못하였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와 예측도 미흡하였다. 안티드론 인력과 사이버안전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고, 드론 운용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여 약간의 혼선이 초래되었다. 민간 경호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 발전시켜야 할 점은 뒤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월드컵축구대회 등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제행사 대테러안전대책은 더욱 치밀하고 부드러우며 효율적이어야 한다. 관람객과 선수단에게 위압적인 안전 활동은 지양하며 축제분위기를 충분히 보장하는 고도화되고 자연스러운 안전대책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적용된 운영체제와 수많은 안전대책을 살펴보고 개선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개최되는 국제스포츠행사 대테러 안전활동에 적용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국가중요행사 대테러활동

1) 테러방지법상 국가중요행사

「테러방지법」 제10조는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6조는 국가중요행사는 국내외의 행사 중 관계기관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주관하는 기관, 행사개최 근거,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총리실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동조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중요행사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 안전책 기구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동조 제2-3항) 다만, 대통령과 국가 원수에 준하는 국민의 경호와 안전관리에 관련한 사항은 경호실장이 정한다.(동조 제4항) 테러방지법상에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정의는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행사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총리실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있다.

유사개념으로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260조, 2015년 제정) 제3조에 의하면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고 외국인 비율이 5%이상인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성권, 2011; 강만성 2013). 국제체육행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에 관한 규정」(훈령 제2012-169호)에서 ‘국제체육대회’라 함은 첫째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장애인 올림픽 등 국제 종합 경기대회, 둘째 월드컵축구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등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적용을 받아 대테러활동을 하는 국가중요행사는 관계기관이 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하게 되며, 통상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의 경우 국무총리 주관 테러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6년 7월 개최된 테러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중요행사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의 근거가 되었다.

2. 국제행사 테러

다음 절에서 서술할 중요행사 테러사례에서 보듯이 인지도 높은 행사일수록 그에 비례하여 국제테러나 과격시위에 노출될 가능성은 커진다. 그 이유로는 대규모 국제행사일수록 세계 각국 중요인사·참가단·기자단·관람객들이 늘어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하게 되고, 테러의 표적들이 늘어나며 테러단체 자신들의 존재감과 주장을 더 쉽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제적 명성에 결정적인 흠을 입히기도 한다. 워낙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정치적·종교적·문화적·이념적으로 적대시하고 있는 국가의 참가단과 응원단이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제행사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인적 위해요인과 물적 위해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 위해요인으로서는 국제테러단체와 과격 NGO단체를 들 수 있다. 물적 위해요인으로서는 예전에는 총기류에 의한 저격과 폭발물을 이용하여 참가자나 행사장 건물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제조가 간단

한 사제폭발물이나 첨단 생활도구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ISIS 등 극단적 이슬람테러단체가 행사 안전에 큰 위협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국제행사 안전위협 요인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테러 환경 분야에서 다시 논할 예정이다.

3. 국제스포츠행사시 예상되는 테러형태

국제스포츠행사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의 형태를 구분해보면 주요요인 살상, 인질, 자살폭탄 · 폭파 테러, 항공테러, 차량테러 등을 들 수 있다.

1) 주요 요인암살(assassination)

전 세계의 테러를 주도해온 이슬람 수니파 반군, ISIS의 패퇴에도 불구하고 잔존 세력의 시리아 · 이라크내 저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ISIS는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돕는 동맹국 민간인들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살, 살해 하겠다’는 메시지를 선포한 바 있고, 교황 암살 가능성까지 경고되기도 하였다(테러정보통합센터, 2019). 2014년 10월에는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이슬람 개종 캐나다인에 의한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인암살은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테러의 한 유형으로서 특정인물을 은밀한 방법으로 살상하는 행위인데 근래에는 공공연히 자행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카이사르(시저)는 ‘로마 공화정의 유지’를 위한 반대파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또한 1865년 남북전쟁 시 미국의 링컨 대통령 암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인도의 간디 암살, 1986년 스웨덴의 팔메 수상 암살 등 사건이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1968년에 발생한 김신조 사건, 1970년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사건,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 살해, 1983년 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등이 한국의 대통령 등 주요요인을 암살하기 위해 자행한 사례들이다. 즉, 수많은 국가지도자들을 희생시킨 요인암살은 테러리즘의 주요 형태가 되었다.²⁾ 이처럼 요인암살은 국가의 집권세력이나 정치지도자를 대상으로 암살테러를 자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 적개심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단결을 저해하는 한편, 정권의 붕괴를 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요인암살의 주된 수단으로는

2)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종신 독재관에 취임한 이후 원로원 의원들 사이에는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폐지하고 왕정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퍼지게 되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암살이 되었던 것이다.

총기와 폭발물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테러의 가장 오래된 전통 수법이라 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북한이 자주 사용한 전형적인 테러리즘 형태의 한가지이기도 하다.

2) 인질납치(hostage taking)

인질납치로 내국인이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는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향하던 23명(남자 7명, 여자 16명)의 샘물교회 신자가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 살해되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외사례로는 나이지리아 이슬람극단주의 테러조직인 보코하람에 의한 수백 명의 여학생 납치, ISIS 테러조직의 외국인 납치 참수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스포츠행사에서는 1972년 9월 서독 뮌헨에서 개최된 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의 과격 단체 ‘검은 9월단’ 소속 테러리스트 8명이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를 습격해 이스라엘인 2명을 사살하고 선수 9명을 인질로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이 인질납치 형태의 테러를 선호하지 않아 대폭 축소되었으나,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에 의한 인질납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필리핀 등 해외에서 내국인 대상 납치살해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납치, 이들을 테러리즘과 공산주의 혁명 수출의 전위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인질납치와 같은 수법의 테러는 위험부담이 적은 반면 정치적 선전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아 수감 중인 동료 테러범의 석방을 주장하거나 인질을 볼모로 하여 정치적 양보 또는 금전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전술이다.³⁾

3) 자살폭탄 및 폭파 테러

최근 테러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술은 바로 자살폭탄 테러전술이다. 이 자살 폭탄테러는 9·11 이후에 3/4이 자살 폭탄테러이다. 자살 테러는 무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효과적인 ‘치명적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자살폭탄으로 반미 지하드에 목숨을 바치겠다는 젊은 지원자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많

3) 당시 탈레반은 피랍된 23명 중 심성민과 배형규 목사를 살해했으나, 대한민국 정부와 탈레반의 협상 결과 다른 인질 21명은 8월 31일(KST)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풀려나 피랍사태는 발생 42일 만에 종료되었으며, 9월2일 생존한 피납자 19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샘물교회가 정부의 무시로 인한 사고이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샘물교회 책임으로 해외 위험지역에 선교를 하러 다니는 광신교도들이라며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5년 7월 영국 런던에서 발생하였던 지하철 테러의 경우는 지하철 리버풀 스트리트역, 킹 스크로스역, 옛제웨어로드역, 그리고 러셀스퀘어역 중간과 타비스톡 스퀘어의 버스에서 총4건의 공격을 받아 56명이 죽고 700명이 부상당하였다. 런던의 교통 시스템은 마비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전화통화를 하느라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렸으며, 이로 인해서 구조 작업이 한층 더 지연 되는 등 큰 혼란이 야기됐다. 이외에도 2013년에는 미국 보스턴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였고, 백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9.11 테러 이후 또다시 폭탄테러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자살폭탄테러는 테러리스트들이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함에 따라 사전 경계 및 방어가 아주 힘들며, 목표물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김두현, 2002). 또한, 同 형태의 테러리즘은 몇 명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도 실행이 가능하고 이들이 폭탄으로 자폭하는 경우 범인과 배후 지원세력을 밝혀내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국제테러단체들이 자주 시도하는 방법이며 폭탄의 살상도와 파괴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테러로 인한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83년의 대구 美 문화원 폭파기도사건,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둔 김포공항 폭파사건 등이 발생하였으며 핵발전소,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과 지하철, 호텔, 백화점 등 주요 다중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⁴⁾ 최근에는 신형 금속탐지기로도 적발할 수 없는 쉼 텍스(semtex) 등 플라스틱 폭탄이나 속옷폭탄 등 첨단 폭탄 제조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이에 대응한 방안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⁵⁾

4) 항공테러리즘(aviation terrorism)

2014년 3월 말레이시아항공기 실종사건은 항공 테러리즘일거라는 여러 가지 무성한 추정만 있을 뿐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실정이다. 항공교통의 발달과 함께 생활 의존도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기대상 테러가 크게 증가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대형 테러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 9.11 뉴욕 무역센터에

4) 이것은 최근 테러의 전형(典型)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서 지상에서 차량이나 사람의 몸에 폭탄을 지니고 목표지점에서 자폭하는 자살폭탄테러와 국가통치시설, 정보산업시설, 전력교통설비, 국방시설, 댐 시설, 대형건물 등 국가의 중요시설과 자원을 폭파(혹은 방화)하는 폭파 테러를 말한다.

5) 폭탄공격은 19세기 초 러시아의 '카파르치'라는 화학자가 암살용으로 폭탄을 발명했을 때만 해도 신뢰도가 극히 낮고 성능도 원시적인 단계였지만, 현대의 폭탄은 폭파기술의 발달과 원격조정장치의 개발로 가공할만한 성능을 가지게 되었다.

대한 테러사건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 9·11 테러는 납치된 비행기를 이용하여 또 다른 목표를 타격함으로써 전쟁수준의 어마 어마한 충격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 항공기 테러리즘의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⁶⁾

1960년 이후에 점차 테러범들이 항공기 납치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함에 따라 항공기 테러는 심각한 국제문제로 등장하였다. 항공기 테러가 많은 이유는 테러범들이 그들의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짧은 시간에 가성비(가성비)가 제일 높은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항공기 납치테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⁷⁾

특히 항공기를 탑승하는 이용객은 많은 국적의 국민들이어서 항공기 납치테러가 발생 하면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통신수단 발달로 전 세계 구석구석에 테러범들의 정치적 목적을 손쉽게 알릴 수 있다. 또한 항공기 탑승객들을 인질로 하여 공격 대상 국가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항공기 납치테러가 증가하는 원인이기도 하다.⁸⁾ 테러범들은 Pan Am기와 KAL 858기 테러처럼 수많은 인명을 살상함으로써 그들은 테러 목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테러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테러범들은 언론 매체를 잘 이용 하고 있다.⁹⁾ 최근 美 정보기관은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 및

6) 항공 테러리즘은 초창기에 동구 공산권 국가에서 서방자유국가로 탈출하여 정치적 망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특정세력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진영으로 나누어져 공산권 국가들과 심각한 이데올로기 대결을 벌였던 서방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공산주의 국가에게 서방자유진영국가로 항공기를 납치하는 하이제커(hijacker)에 대해 대부분 아무런 처벌 없이 정치적 망명을 허락하거나 심지어는 이들 하이제커들을 영웅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은 항공기납치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 것이다.

7) 북한의 의한 사례도 1958년과 1968년 민항기 납치사건, 1986년 김포공항 폭파사건, 1987년 대한항공 858기공중폭파사건 등이 있었다.

8) 항공기에 대한 테러리즘은 크게 항공기납치(aircraft hijacking), 공중폭파(sabotage bombing of airborne aircraft) 그리고 공항시설과 항공기이용객에 대한 공격(attacks against airline facilities and their users) 등이 주로 자행되어 왔다. 테러방지법(제2조 정의)에도 항공기테러를 위의 3가지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9)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AQAP 폭탄제조 전문가인 알 아시리 는 2009년 속옷 폭탄테러와 2010년 화물기 프린터 폭탄 테러 등의 배후로 알려진 인물이다. AQAP는 2009년 성탄절 암스테르담에서 디트로이트로 향하는 민간 항공기에 미리 속옷 폭탄을 장착한 대원을 탑승시켜 테러를 시도하려다 실패했다. 2010년 영국 이스트미들랜드 공항의 화물기에서 발견된 프린터 카트리지 폭탄은 당시 영국 경찰이 프린터를 확보하고도 안에 든 폭발물을 쉽게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정보 당국을 놀라게 했다. 폭탄은 모두 비금속 물질이어서 공항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

알누스라전선(시리아가 근거지인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 미국과 유럽행 항공기 테러를 계획 하고 신종 폭탄을 개발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되었는 그 내용은 공항검색에 탐지되지 않도록 사람 몸에 심을 수 있는 비금속재료를 사용한 신종폭탄을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하여 또다시 9.11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차량 테러(vehicle terrorism)

차량테러는 차량에 폭탄을 탑재하거나(차량폭탄테러) 차량 자체를 공격 수단(차량돌진테러)으로 테러에 이용하는 것으로 획득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대형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유형이다. 최근에 테러대상이 소프트타깃으로 무차별 확산되면서 유명 광장 및 관광지 등 다중운집 장소를 목표로 한 차량돌진테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폭탄테러는 다량의 폭탄을 은밀하게 탑재할 수 있고 원격조작이 가능하여 테러범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폭파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2016년 12월 터키 이스탄불 축구장 보디폰 아래나 인근 정류장에서 폭탄테러가 발생, 190여명이 사상, 2017년 8월 이라크 바그다드 시장에서 사제폭발물을 싣은 차량이 폭발하면서 50여명이 사상하는 등 빈번 발생하고 있으며 폭발 자체에 의한 인명피해보다는 파편들로 인한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전체피해의 70-80%를 차지하기도 한다(테러정보통합센터, 2017). 차량돌진테러는 차량 자체 또는 차량에 폭탄을 탑재하여 사람들이나 시설에 돌진하는 공격방식이다. 차량돌진테러는 차량이라는 도구를 획득하기 쉽고 광장 등 다중운집 목표물에 접근이 용이하며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일반인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다. 특히 프랑스 니스축제 테러나 독일 베를린 성탄마켓 테러¹⁰⁾사례에서 처럼 우발적이고 단순하여 사전에 적발이 쉽지 않아 ISIS 등 테러단체들은 차량돌진테러를 선호하고 있으며 추종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공격을 적극 선동하고 있다. 테러대상도 군·경 등 정부와 국가기간시설, 일명 하드타깃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반해 근래에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0) 니스축제 테러 : 2016년7월 프랑스대혁명기념축제가 열리는 니스해변산책로 인파를 향해 19톤 트럭이 2기로 가랑 지그재그 돌진 후 추가난사, 180여명이 사상, 범인은 튀니지 출신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확인되었다.

베를린 성탄마켓 테러 : 성탄절을 앞두고 대형시장이 열리는 베를린의 브라이트샤이트 광장 인파속으로 19톤 트럭이 고속으로 돌진, 60여명이 사상, 범인은 튀니지 출신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밝혀졌다.

광장·시장·관광지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인 소프트타겟으로 대상 목표가 확대되고 있다. 차량 돌진테러는 세계 각국의 강화된 테러 예방대책을 손쉽게 회피하기 위한 저비용 테러로 사전 계획 없이도 사회불만자나 정신병자 등 아무나 모방할 수 있으며 렌트카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¹⁾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차량테러에 대비한 여러 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행사가 개최된 평창 뿐 만 아니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태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한 바 있다.

Ⅲ.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개요 및 위협 분석

1.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개황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적 대회 명칭은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이며, 대회기간은 2018. 2. 9-2. 25(17일간)이고, 장애인 동계올림픽은 2018. 3. 9- 3. 18(10일간)으로 설정되었다. 대회 장소는 본부인 알펜시아에서 30분 이내의 동계 스포츠 벨트 범위 내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인원은 총 92개국 4만 여명(선수 2,920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관중은 1,078,000명(티켓판매 기준)이었다. 15개 종목 102경기가 강원도 평창·정선(설상), 강릉(빙상)에서 개최되었다. 설상은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프리스타일 스키, 바이애슬론, 노르딕복합, 스키점프, 스노보드 등 7개 종목이, 빙상은 컬링,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 등 5개 종목이,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등 슬라이딩 3개 종목이 개최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00년 10월 유치를 최초 신청한 이후 두 번의 실패를 거쳐 2011년 7월 세 번 만에 유치한 대회로 건전한 재정운동을 통한 경제올림픽,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환경·평화올림픽, 최첨단 ICT올림픽을 구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통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으며, 특히 북한의 대회 참여를 성사시킴으로써 일촉즉발의 대치상태에 있던 한반도에 남북교류 및 대화의 물꼬를 트게 해준 계기로 활용되었다.

11) 2017년 미국 맨해튼에서 우즈벡 출신 ‘사이포프’가 홈디포에서 임대한 차량으로 차량돌진테러를 자행



출처 : 김은정, 왕석원(2017).

〈그림 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2. 테러 및 안전위협 환경 분석

평창동계올림픽 위협요인으로는 국제테러위협, 외로운 늑대 등 인적 테러취약요인, 사이버테러 위협, 총기 · 폭발물 등 테러이용수단의 물적 테러취약요인, 북한에 의한 위협, 개최지역 및 대회 운영상 취약요소 등이 예상되었다.

1) 국제테러 위협

2017년에 접어들면서 ISIS · 알카에다 등은 직접 원정 또는 지령테러 보다는 선전지 신규발간을 통한 자생테러 선동전략에 집중하였는데, 특히 10대 청소년층을 자생테러 실행 잠재세력으로 유인하기 위해 온라인게임을 자신들의 이념과 메시지 홍보

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ISIS가 2015년 9월 ‘십자군 동맹 및 악마의 연합군’이라 지칭하며 테러대상국으로 지목된 바 있어 위협의 대상이 되었는데, ISIS는 인터넷상에 우리국민 신원정보, 주한미군 기지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노출 공개하며 테러를 선동하기도 하였다. 한편 테러단체들은 시리아에서 패퇴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하였는데, 전선을 東進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테러를 자행함에 따라 추종세력에 의한 국내 테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ISIS의 세력 축소가 더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난민법」 시행(2013년 7월)이후 신청자가 급증(2013년 1,574명→2015년 5,711명)하던 추세로 이중 파키스탄, 시리아 등 테러위험국가 출신자가 다수 차지(67%)하고 있어 난민위장 테러조직원 침투 가능성도 우려되었다(테러정보통합센터, 2019).

2) 외로운 늑대 등 인적 테러취약요인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는 우리나라가 反이슬람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슬람극단주의세력과 별다른 마찰요인이 없었던 데다, ISIS 등 국제테러단체의 주요활동지역과 거리가 멀어 원정테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테러단체 지지, 과격사상 추종 등의 불순 활동과 연계된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지속 적발되고 있어 테러정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2010년 이후 시리아 테러단체 ‘알누스라전선’ 동조 인니인을 비롯하여 ISIS·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와 연계협력이 있는 외국인들을 강제퇴거한 바 있었으며 국내 취업목적으로 체류했던 우즈벡·시리아·인니인 등이 출국 후 ISIS 등에 가담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한편, ISIS의 공세적 선전전에 경도된 우리 국민의 추종사례도 발생 하였는데 내국인 김君(20세)이 2014년부터 트위터로 ISIS 모집책과 교신하며 FTF 가담 방법을 논의타 2016년 터키를 거쳐 시리아에 입국, ISIS에 가담하였으며, 손모(28세, 남), 광모(23세, 여) 등은 이슬람 과격사상에 심취, 가입을 위해 출국을 기도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한편 외로운 늑대형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다. 국내 이슬람국가인(57개국 18만여명) 등이 서울·부산·경기 등지에 집거지 및 소규모 밀집 지역을 형성, 세력 확산 중에 있는데 귀화 및 내국인과의 혼인이 늘어나면서 점증하고 있는 2세들이 소외감과 호기심 등으로 극단주의에 심취해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¹²⁾ 또한 국내에 설립 운영중인 일부 종교시설에도 이슬람극단주의 등 과격사

상의 침투가 우려되는 곳들이 있었는데 지하드사상을 전파하는 사례나 과격성향 선교단체 등이 국내로의 세력 확대를 추진하는 동향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고속터미널 사제폭탄사건(2011년 5월), 인천공항 폭발물 의심물 설치(2016년 1월) 등 사회불만자·정신병력자에 의한 테러협박 등 내국인에 의한 유사사건도 빈발하는 상황이었다.(연평균 30-40건)

3) 물적 테러취약요인

대회 직접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테러대상 시설에 대한 취약요인 관리여부도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하였는데, 올림픽 개최지역이 아니더라도 국내 어느 곳에서도 대회기간중 테러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능력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차원의 테러취약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였다. 총리실 대테러센터가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원전, 공항만 등 703개)의 경우 원전, 에너지 비축시설 등은 2중 외곽울타리 및 침입 감지센서가 설치된 데다 군경과 초기대응태세가 잘 구축되어있는 등 테러 대비태세가 양호한 편이나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여 해상침입 및 원거리 곡사화기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공항만의 경우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KTX의 경우 승객편의 위주로 관리됨에 따라 위험물 검색은 물론 탑승객 검표 및 거동수상자 탑승차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방화·테러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또한 쇼핑몰·공연장·호텔·대형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사실상 전무하여 복합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건물주들이 고객편의 및 도난방지 위주 경비에만 치중하면서 안전인력·장비 투자를 기피하고 위험물품 검색도 불가능해 테러예방 및 차단수단이 별무한 상황이었다. 테러이용수단의 경우 우리나라는 총기·폭발물 등은 잘 관리되고 있어 대규모 총기난사나 폭탄테러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탈취 및 분실 위험요인은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인터넷상에 테러 수단으로 이용 가능한 사제총기·폭발물 등에 대한 제조법이 무분별하게 유포됨에 따라 사회불만자·무슬림2세 등에 의한 모방테러 우려가 상존하는 등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2) 2017년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트럭·황기 테러범인이 파키스탄계 영국 시민권자로 확인되는 등 2세에 의한 테러가 빈발하는 상황이었다.

4) 개최지역 및 대회 운영상 취약요소

평창동계올림픽은 개최지역 및 개최시기상 태생적 안전취약요인이 있었는데 대회가 혹한기 평창, 강릉 등 접적 산악지역에서 개최되어 테러범 등 불순분자의 침투와 은신이 용이하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가 있는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스키점프, 스노보드, 루지, 노르딕 등 일부 종목들은 해당지역 TV시청시간에 맞추기 위해 대회가 야간 심야시간대 개최, 테러와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대회 직접시설(선수촌·경기장·방송센터 등)이 18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평창·강릉·정선에 분산됨에 따라 출입인원 차량 및 안전점검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람객과 응원단을 가장한 불순분자의 국내잠입이나 중앙아시아 출신 선수의 불법취업 목적 집단 무단이탈 및 도주 가능성도 우려되었다. 또한 대회가 개최되는 2월 평창지역은 영하의 기온과 많은 눈이 내려 관람객의 저체온증 및 이동중 교통체증 그리고 낙상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대관령지역은 평소 바람이 많아 혹한에 강한 바람은 체감온도를 더 낮추고 강풍은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건조기에는 산불 발생시 강풍과 함께 빠른 속도로 피해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5) 사이버테러 위협

올림픽은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행사로 종교·영토 분쟁 이슈화 등을 위해 테러조직·해커비스트들의 사이버위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평창동계올림픽은 문화·환경·평화·경제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올림픽을 지향하고 있어 사이버안전에 대한 위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세계 최고 수준 北 해킹조직이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은밀한 사이버공격 가능성도 농후하였다. 주요 공격대상으로 정보수집 및 시스템 장악을 위해 IOC 등 주요인사, 조직위 직원, 개발업체,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메일 유포가 예상되었다. 또한, 리우 올림픽의 ‘지카바이러스’로 참여거부가 이슈화된 것처럼 전쟁위협을 SNS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올림픽 참여거부 여론 선동, 올림픽 개최 이전에 혼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공항 및 항공사 시스템 공격 등을 통해 입국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수법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였다. 한편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국제행사를 활용 하는 해커비스트¹³⁾·사이버테

13) 해커비스트란 해커(hacker)와 행동주의자(activist)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해킹을 투쟁

러단체 · 민간해커그룹의 DDoS · 홈페이지 변조 공격이 성행하며 ISIS 등 국제테러 단체의 사이버공격이나 인터넷을 통한 테러 모의와 지령하달 등 사이버상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었다.¹⁴⁾

모든 관심이 올림픽에 집중된 점을 악용,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든 금융사나 인터넷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금탈취와 랜섬웨어 공격도 성행하며, 주요경기 티켓 판매 사이트 해킹 및 가짜 티켓 판매를 위한 피싱 사이트를 개설할 것으로 예상하였다(최은하, 2018).

6) 북한의 테러위협

국제사회는 북한에 의한 후방테러 위협에 큰 우려를 보이고 있었는데 북한은 2017년도에 들어 잇달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자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군사도발을 지속 중에 있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집단탈북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등 해외체류 우리국민을 납치하려 하거나 주요 탈북 · 반북인사 대상 암살을 기도하기도 하였고 사회 혼란 조성을 위해 테러단체 조직원들은 통한 국가 주요인사 및 사회기반시설 등 대상 테러를 사주할 가능성도 우려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올림픽개회에 임박 하여 대회 참가를 결정함에 따라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이 불식되었으며, 북한에 의한 테러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참 검토를 언급했던 국제사회의 우려도 일거에 진화되었다(남재성, 강남수, 2012).

IV.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 성공요인 및 미비점

1. 대테러안전대책 성공요인

1)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중심의 효율적 지휘체계

이번 올림픽은 조직위가 대회 직접시설에 대한 경비 · 안전을 책임지고 정부는 대

수단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동주의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현실공간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하는 고전적인 투쟁방법 대신 가상공간에서 주요기관의 인터넷사이트를 동시다발적으로 해킹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

14) 실제 2018.3월 중국 민간 해킹그룹과 네티즌은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평창 강원도 자원봉사 포털 등 국내 30여개 홈페이지를 대량 변조하였다.

테러안전대책본부가 중심이 되어 대테러안전활동 지원 및 외곽 안전, 경호안전통제단은 국민급 인사에 대한 경호안전을 담당하였으며, 각 관계기관은 소관분야의 안전 확보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직위는 민간 안전 인력을 채용하여 대회 시설경비·출입자 검색 및 내부 질서유지의 임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총리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17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성되었다. 200여 명의 인원이 종합상황실과 현장안전통제실, 국제정보협력실¹⁵⁾·출입국대체반 등에서 활동하였다.

그간 88올림픽, 2002월드컵, 2010 G20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거치며 대테러안전활동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선진국 형태의 국제행사 안전활동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다.

즉 행사안전의 1차 책임은 행사 주최자인 조직위가 책임지되 국가는 테러와 전국 차원의 안전, 범죄, 시위 등 우발사태에 대비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정부는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 근무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썼다. 이에 대해 IOC는 올림픽안전은 어느 1개 기관의 힘으로 확보할 수 없는 만큼 평창올림픽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US투데이 등 외신은 ‘최근 개최된 올림픽과 달리 군·경이 없음에도 매우 안전한 올림픽을 치러냈다고 호평하였다.

또한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드론탐지레이더 운용, 차량형 검색기 배치, 지능형 CCTV 설치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대테러안전 활동을 수행하였다. 대테러안전본부는 스키점프대와 올림픽 플라자 2곳에 드론탐지레이더를 설치하여 비인가 불법드론을 적발, 안전위협에 대비하였다. 관계기관은 차량형 검색기(관세청), 화학물질 특수분석·순찰차량(환경부), 생물테러감시장비·실험차량(질병안전관리본부), 방사선 모니터링 장비(원안위) 등 각종 장비를 전진 배치하여 운용하였다. 조직위가 설치한 810여대의 지능형 CCTV망을 대테러안전본부 종합상황실과 공유, 실시간으로 대회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들을 모니터링하였다. 이러한 통합적인 안전활동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대테러안전활동은 민간이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국가는 측면 지원하는 선진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국내에서 치러지는 중요행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 확실하다.

15)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운영되었으며, 30여 개국 50여개 정보수사기관과 스폰서사 안전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하였다. 정보협력실에서는 매일 대회 안전위협 요인과 각종 대테러 안전상황 및 대응 등에 관한 브리핑하였다.

2) 올림픽 안전 관련 기관간 긴밀 협조 및 정보공유

올림픽과 같은 대형행사에는 많은 기관이 동원되는데 대테러안전본부는 17개 기관이 합동 근무하였다. 더 많은 기관과 안전요원이 참여를 원했지만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다. 각 기관은 소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본부(CP)를 운영하면서도 대테러안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대테러안전본부를 통해 협의 조정하였다. 북한의 참여로 조직된 정부합동관리단과도 연락관을 교차 파견하여 인공기 허용범위와 대회시설 출입절차를 협의하는 등 긴밀 상호 협조로 원만한 안전활동이 가능하였다. 경호안전통제단과도 개폐회식 등 경호행사에 대해 경호구역(경호처 통제)과 안전구역(안전본부 통제)으로 구분하여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등 유연한 경호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대테러 안전본부 현장안전통제실에 조직위 안전매니저와 민간안전책임자가 합동으로 근무하여 실시간으로 안전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다. 국내뿐 만 아니라 참가국 정보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입국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각국 NOC 및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올림픽 안전브리핑과 현장 견학을 통해 안전불안감을 해소시켰다. 대회 기간 중에는 국정원이 주도로 강릉에 국제정보협력실을 운영, 40여 개국 150여명 대상으로 매일 대테러안전브리핑을 제공하고 대회 안전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였다.

한편, 대회초반 갑작스런 안전인력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조직위-관계 기관간 협업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 대테러안전본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정부합동관리단과 현장안전통제실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 북한 인원들의 대회시설 출입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필요시 북한선수단 신변보호 필요에 따라서 편의를 적절히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결정된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큰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3) 대회 테러안전 취약요인 사전 제거, 사고발생 미연방지

대테러안전본부는 단계별로 대회 주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취약점을 보강하였다. 대테러안전활동 2단계에서는 강원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숙박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 수립여부 등에 대한 현장실태를 확인하고, 경강선KTX 개통에 맞춰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청량리역을 거쳐 평창·강릉으로

이어지는 주요역사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였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기장 주변 유해화학물질·독극물 취급업체 및 총포·화학물 취급시설에 대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회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대회직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감시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훼손되거나 느슨한 보안펜스는 보강토록 하였으며, 전 배너를 대상으로 라이터·버너 등 각종 인화물질을 정리하고 실내 난방기를 연로통과 이격 설치하는 등 화재 취약요소를 보완하였다.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오버레이 시설에 대한 난방기에 보안펜스를 설치, 소화기 배치, 화재경보기를 추가하였다. 보광·용평 등 설상경기장의 임시시설물의 안전취약문제를 제기, 조직위로 하여금 안전 점검을 추가 실시하여 개선 조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테러와 연관이 없는 활동은 아니나 테러방지 활동보다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가깝다. 이는 개최지역과 시기상 태생적으로 안전 취약요인이 있어 이의 대응활동도 비중이 컸다. 이에 따라 폭설, 화재, 추위 등 많은 안전위협에 대비하였다.

행사안전 확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설물의 안전취약점을 사전 차단하여 제거하고, 시설내로 반입되는 위해물품을 차단하는 것으로 관계기관은 수시로 이를 점검하고 조직위와 협조, 개선해 나갔다. 보안검색 민간안전 인력 중 반입금지물품 적발자 및 성실근무자 등에 격려금과 홍보물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동기부여로 보안검색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실탄, 공포탄(바이애슬론)등 비롯 AD카드 불법사용과 반입금지물품을 적발하는 등 안전확보에 기여하였다.

4) 24시간 즉각대응태세 유지, 신속대응

국제적인 이목을 받는 국제행사는 항상 안전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며 우발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대테러 안전활동의 생명은 신속대응이다. 이를 위해서는 24시간 상시대응태세를 유지해야한다. 대테러안전대책본부와 현장안전통제실 그리고 각 관계기관의 CP는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큰 사건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졌지만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간 것만은 아니다.

대회개막전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대테러안전본부는 조직위·군과 협의하여 민간안전인력을 대신하여 대체병력을 투입하여 선수단과 관람객을 보호하였다. 군 투입 전 철저한 교육으로 조기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사태가 짧은 시간에 진정추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선수단으로 감염을 차단하기 위

해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이 되어 ‘감염증대책본부’를 편성하여 주변 음식점 · 숙소에 대한 정수검사 및 소독을 실시하였다. 올림픽대회 막바지에 평창지역에 폭설이 내림에 따라 강원도를 통해 긴급 제설을 실시하고 군을 통원하여 폐막식장 제설을 실시하였다. 또한 강릉 지역에 강풍이 불어 보안펜스가 전도되는 등 위험시설 · 장비를 보강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각종 사건 ·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 재발 방지에 기여하였다.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 강릉선수촌 주변에 친북 · 반북 전단지가 살포됨에 따라 이를 즉각 회수하고 살포자를 추적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 하였다. 올림픽 개회식 공연중 무대 안으로 진입하여 공연을 방해한 인물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고 다음날 관동하기센터에 출입한 대상자를 확인하여 검거하였다. 남북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 시 차량 및 인원 동선을 점검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경력을 증강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였다. 이처럼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기민하게 대처함으로써 대내외 안전불안감을 해소하고 대회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다.

2. 대테러안전대책 미비점

1) 식음료 안전 등 전염병 위협대응 미흡

대테러안전활동 준비는 테러와 안전사고 방지에 중점을 두고 주로 물리적 대응에 주로 집중하였다. 대회개최 직전 각 시설별로 실시했던 도상훈련도 물리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회초기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던 민간안전인력을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노로바이러스¹⁶⁾가 발생, 확산되었는데 초기에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았던 데다 대응절차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의 대응이 이루어지며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였다. 일례로 민간안전인력 숙박장소인 호텔청소년수련원에서 처음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된 민간안전인력의 경우, 별도 시설이 아닌 원래 숙소에 단체로 격리하여 상호 교차 감염

16) 노로바이러스는 한겨울 식중독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감염자의 대변 또는 구토물에 의해 음식이나 물이 오염될 수 있고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의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될 수도 있다. 소량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쉽게 전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높으며 평균 12-24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갑자기 오열, 구토, 설사의 증상이 발생한다.

위험성을 높인 것은 물론, 격리인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외부 식당에서 일반 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식약청·환경부 및 조직위 등 유관기관간 정보공유와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보고가 누락되기도 하였다.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감염자 발생위험에 상시 노출됨에도 정부차원의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으며 그 결과 이러한 전염병이 성공적 대회개최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드론 안전위협 대비책 미흡

이번 올림픽에서는 전통적인 안전사고보다는 앞서 언급한 사이버공격, 무허가 드론, 감염병 등이 중요한 안전문제로 대두되었다. 무허가 드론은 국가중요행사로 치러진 2017년 U-20 월드컵 당시에도 문제가 되어서 관계기관이 각종 대책을 강구하였다. 대회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드론 탐지레이터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전파총과 산탄총도 준비하였다. 하지만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일반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실제 드론을 발견하더라도 안전문제로 전파총이나 산탄총을 사용하기 보다는 조종자를 찾아 운행을 멈추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미허가 드론을 적발해도 조종자에게 단순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3) 자원봉사자·민간안전인력 안전활동 교육 미흡

현장 대테러안전활동 과정에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민간안전인력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통일된 안전활동지침과 대응요령 등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회 초기 반입금지물품차단을 위한 보안검색 세부지침이 대회시설마다 상이하게 운영되면서 관람객들의 항의가 제기되는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정부 안전인력들이 대회 1달여를 앞두고 현장에 전개됨에 따라 안전활동에 필요한 필수 지식과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대회 시설에 배치된 현장요원이 대회 개막 임박시점까지 위험물 발견 시 처리절차를 숙지하지 못하는 등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일부 우려도 제기되었다(조직위원회 안전관실, 2019).

4) 전용 통신수단 부재

과거 우리나라에서 대형 국제행사가 개최되면 무전기가 주 통신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이번 대회는 카카오톡을 주 통신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여러 기관들이 대테러안전본부에 모이다 보니 각각 다른 기관망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것이 어려워 문서를 주고받을 경우 상용 인터넷 이메일을 사용하였고 보안성에 문제가 생겼다. 특히 메신저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정작 중요한 상황들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안전본부 소속이 아닌 사람들도 초대되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메신저 단체방을 다시 만드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국가재난 안전통신망이 있었으나, 이는 비상용으로 유사시 대비 감도체크를 할 뿐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하였으며, 무전기도 핸드폰 대용으로 사용하는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향후 국가중요행사시에는 보안성이 담보되고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전용 통신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V. 국제행사 대테러정책 발전방안

평창동계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유럽을 중심으로 축제 현장이나 군중밀집지역에서 차량돌진 · 폭탄테러 등 연쇄 대형테러가 발생하였으며 ISIS는 시리아 · 이라크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전 세계 추종자들에게 국제 스포츠행사에 대한 테러를 선동하는 등 대테러안전측면에서 쉽지 않은 여건에서 대회 안전을 준비해야 했다. 북한은 대회직전 해인 2017년 핵 · 미사일 실험 등 군사도발을 자행하면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안보상황에 불안감을 보이며 대회 참가를 주저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조직위와 안전유관기관이 함께 각종 위협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대회 개막이후에는 각종 올림픽 시설들에 대한 안전취약요인들을 점검하고 화재 · 폭설 · 낙상 등 안전위험요인들도 놓치지 않고 개선 보완하는 등 세밀히 안전활동을 수행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은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적용된 국제행사 대테러안전

대책이었다. 물론 U-20 축구대회에도 적용이 되었지만 동계 올림픽 예행연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과거 지침수준에서 테러 방지법이라는 강력한 법적근거에 따라 추진력을 가지고 통제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여러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이전의 대형 스포츠행사와는 다른 선진화된 모델을 이루어냄으로서 향후 개최될 대형 스포츠행사 대테러활동의 모범이 될 만하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현장에서 지켜본 시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지 않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이 있었다. 올림픽 성공개최와 IOC와 외신들의 찬사에 취해 이에 만족하면 안되며, 평창동계올림픽 적용된 수많은 대테러안전대책의 훌륭한 점과 함께 개선 보완해야 할 세부대책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에 적용해야만 최고 수준의 대테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테러방지법에 따라 단일 통합지휘체계 정립필요

그간 우리나라는 수많은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오면서 테러나 안전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전의 국가 대테러활동 체계는 1982년 제정된 「대통령훈령」 제49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¹⁷⁾에 의거 대응하였다. 또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대규모 스포츠행사가 개최될 경우 각 국제행사마다 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로 국정원이 안전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 경찰측은 국정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국제행사 안전관련 북한 위협과 테러 방지이외 시설경비, 교통관리, 화재, 재난, 구조구급 등 많은 안전업무가 수행되므로 국정원이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조민상, 2016; 김은정, 왕석원, 2017). 그간 국정원이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은 대통령훈령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전세계 국제스포츠행사 개최시 마다 테러가 이슈화됨에 따라 대테러업무 경험 많은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분단국이라는 특수한 사정과 국정원의 해외활동에 따른 국제 정보협력의 중요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테러방지법에 국제행사 안전활동은 국무조정실 대테러 센터의 주요임무로 지정됨에 따라 컨트롤타워 논의는 이제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할 수

17) 훈령 47호는 국정원 제정 대통령훈령으로 행정규칙에 불과, 대외적, 대국민적 효력이 미흡하고 주로 사후 대응에 치중하였다. 테러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9.11 테러 이후 계속되어져 왔으나 여야 입장 차이로 계속 지연되어오다가 2015년 11월 파리테러발생이후 인 2016. 3. 국회 통과 후 그해 6. 4.부로 시행되게 되었다

있다.

테러방지법 제6조 1항에 대테러센터의 임무에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 대책 수립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6조 1항에는 관계기관은 행사의 중요도, 개최 근거 등을 기준으로 국가중요행사를 지정하되 대테러센터와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2항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센터와 협의하여 국가중요행사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명시하고, 3항은 국가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 주재 하에 18명의 위원이 참석한 대책위원회(2016. 7.)에서 국가중요행사로 지정되었다. 2017년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3차 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대테러센터와 국정원이 공동 주관으로 경찰·군·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안전 본부를 편성하여 대테러안전활동을 총괄토록 심의 의결하였다. 이후 국무총리 주재로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제4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2017. 7.)에서 대테러센터장과 국정원 담당국장이 공동본부장으로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운영기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와 같이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가중요행사 지정, 안전대책기구 운영, 주관기관 등이 명쾌하게 총리실 대테러센터로 정해졌다. 당시 테러방지법 논의 과정에서 국정원은 국제행사에 대한 대테러활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새로 신설되는 총리실 대테러센터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논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가중요행사로 지정된 대규모 스포츠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기구 편성 운영은 발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먼저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대테러센터장과 국정원 대테러안전 담당국장이 공동으로 본부장을 맡아 지휘하였다. 이와 관련 제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동 주관이 권한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총리실의 통합 조정·기획력과 국정원의 30여년 안전활동 노하우가 잘 조화되었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지역·규모면에서 워낙 큰 행사인 관계로 설상경기가 열리는 평창과 빙상경기가 열리는 강릉을 나눠서 임무를 분장,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당초의 우려는 불식되었다.

하지만 향후 국제스포츠행사 규모 등을 고려, 어떤 형태의 지휘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 임무 분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 사례의 공동본부장 뿐 만 아니라, 행사 성격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부분본부장직을 만들어 임무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사 안전활동시 인력·장비 동원 면에서 경찰의 역할이 큰 점과 대책본부와의 긴밀 협력관계를 감안, 대테러안전대책본부내 안전관리팀, 현장안전통제실 등에서 경찰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행사규모나 대책본부 편성 형태에 따라 부분본부장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형태의 테러대응 능력 강화 필요

1) 드론 안전대책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국토부·군·조직위 등과 협의, 임시비행 금지 구역 및 비행승인 항공기 기준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항공 고시보를 통해 통제구역 및 비행승인기준을 고시하였다.¹⁸⁾

그리고 KAIST 드론 탐지레이더를 대여하여 평창지역 시설 2곳에 운용 하였다. 레이더 정보는 종합상황실내 관제시스템 모니터에 연계하여 미인가 드론 식별시 현장요원에게 실시간 전파·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중국의 드론 생산업체인 DJI社와 협력하여 同 업체에서 생산하는 드론은 올림픽 기간중 비행금지구역 접근을 원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드론 차단대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경찰은 드론 순찰조·감시조와 전파차단총 운용하였고 군은 열상감지장비(TOD)·감제 고지·헬기 및 산탄수 배치 등의 대응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조직위는 포획 드론 2대를 운영하였다. 국정원도 드론이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 몇 년전 부터 안티드론 연구기관인 KAIST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과 협조하여 드론 탐지레이더 평가실험을 실시하였다. 올림픽을 앞두고 평가실험을 하였고 美CIA와 협조, 각국 VIP가 참석하고

18) 서울지방항공청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대회 관련 공역통제계획(2018. 1. 8.)

금지구역 : 강릉, 평창, 봉평, 정선 등 4개권역 반경2-5km, 고도4천피트

제한구역 : 비행금지구역 경계부터 5km, 고도는 금지구역과 동일

승인기준 : 군·경 운영 항공기, 정부기관 긴급 비행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국토부 승인대회 관련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다중밀집지역인 올림픽플라자와 취약지대로 확인된 스키점프대 등 2곳에 드론탐지 레이더를 설치하였다.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국정원의 드론탐지 장비를 운영하면서 종합상황실에 실시간 비인가 드론을 식별하고 필요시 현장요원에게 즉시 전파 대응할 수 있도록 탐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금년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시설이 드론공격을 받아 2곳이 파괴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 원유가격이 최대 19%가 올랐다. 이 공격에 사용된 이란產 드론은 대당 1만 5천 달러로 알려졌다. 파괴효과 대비 가격을 비교하면 드론은 가성비가 대단히 높은 공격 무기가 된다. 지난해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영국 게트워 공항에서 미승인 드론 2대가 수십 차례에 걸쳐 공항 활주로 상공을 침범해 2일간 활주로는 폐쇄되고 항공기 700여 편과 여객 14만 명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최근 이 사건을 계기로 요즘 전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국가중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드론공격 대응 개념의 안티드론 도입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¹⁹⁾. 하지만 세계적으로 완전한 안티드론 체계를 개발하여 구축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때 현장 적용한 바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드론탐지레이더가 다른 나라 보다 탐지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방문한 일본 경찰청과 중국公安부 안전관계자는 자국에서 개최되는 동경하계올림픽(2020년)과 북경동계올림픽(2022년)때 우리의 드론테러 예방활동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최초로 적용된 인티드론 대책은 앞으로 국내외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시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탐지-식별-차단의 세 가지 방안이 함께 운용되어야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 대부분 국가가 기술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인력·장비와 예산 등의 이유로 완전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드론의 기술은 상상을 초월,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안티드론 기술도 발전해야 한다. 향후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 등 국가중요행사시 드론 테러대응은 주요 대테러 안전대책으로 준비해야 한다. 관계 기관이 사전 탐지-식별-차단의 단계별 임무분장을 철저히 하여 기술·예산·인력·장비를 투입 드론테러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함께 대국민 홍보가 확대되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에 대한 과태로 부과 등 행정 조치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9) 보안뉴스 ‘드론테러로부터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안티드론’ (2019. 10. 14.)

2) 사이버 안전대책

사이버공격은 국가신인도 추락 등에 효과적이면서도 공격주체 은닉이 용이함에 따라 해킹의 위협은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ICT강국으로 사이버 안전위협도 그만큼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세계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北 해킹조직의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이고 은밀한 사이버공격 가능성은 상시적으로 존재하였고 특히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의 외국인 이 참가하는 대회의 경우, 경기 운영 방해, 우리나라의 국제신뢰도 하락 목적의 도발도 우려된다. 또한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해티비스트²⁰⁾·사이버테러단체·민간 해커그룹들은 국제 행사에 DDoS·홈페이지 변조 공격을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국가간 민감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 상대국 네티즌간 사이버공격 촉발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2017. 3 중국 민간 해킹그룹과 네티즌은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2018평창 강원도 자원봉사포털 등 국내 30여개 홈페이지를 대량 변조하기도 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대테러안전대책본부가 조직위와 협조, 사이버 대책반을 평성·운영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였다. 조직위 홈페이지와 조직위 직원들의 이메일을 통한 사이버공격을 탐지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개막식 날에 발생한 올림픽 전산망 침해사고는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피해 최소화하였다. 국제 행사는 참여국가가 많은 만큼 국가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이버공격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사이버 보안요원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대규모 국가중요행사시에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국가중요시설 또는 주요기반시설로 임시 지정해 예방 보안활동을 강화하고²¹⁾ 조직위 설립 또는 정보시스템 도입계획초기부터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설계하고 적용하는 등 이전 보다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20) 해티비스트란 해커와 행동주의자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해킹을 투쟁수단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동주의자를 말한다.

21)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일(2. 9.) 조직위 메일·인증서버와 DB가 위치하고 있는 KT센터(서울 목동 소재)한에 대한 해킹사고가 발생하였다. 해킹공격으로 대회시설 출입구에 설치된 RFID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다. 다행히 관객들이 개회식장 입장이 거의 종료된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큰 피해가 없었지만 계속되는 해킹공격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서버가 있는 곳에 대한 예방보안활동이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3) 질병 안전관리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겨울철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과거 동계올림픽대회에서도 이 질병의 감염확산이 중요한 이슈였음에도 평창 동계올림픽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다. 식음료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소독대책은 있었으나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이 없었다. 특히 안전인력·자원봉사자 등이 집단숙박을 하면서 감염 증이 확산될 충분한 가능성이 예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다. 다행히 선수단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였으나, 향후에는 감염증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대응 매뉴얼과 함께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대회 준비 초기 대테러안전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민간안전 인력이 노로바이러스 확진 판결을 받았음에도 관계기관 합동 대응 및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음에 따라 정보 공유·격리조치가 미흡하였다. 노로바이러스 관련 조사 권한 및 책임이 매개체별로 상이한 상황에서 공조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초기대응이 다소 부족하였는데 의복·침구 등 개인물품은 질병관리본부, 식수는 환경부, 식품조리용품은 식약처 등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역학 조사권한은 선수는 일본이, 운영인력은 지역보건소로 업무가 분장됨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대응에 한계가 불가피하였다.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시 통계도 잘 관리가 되지 않았다. 결국 올림픽 기간 중 확진자가 300여명에 달하였으나 선수단 감염자가 극소수에 그치는 등 대회에 지장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다.

향후 대규모 국제행사시 각종 감염병 대응하는 훈련과 매뉴얼을 준비하고 관계기관업무 분장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은 대단히 전문성을 요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노로바이러스 대응시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여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질병관리분야의 컨트롤타워는 특히 중요하다. 또한 대규모 노출자 발생시 노출 원점으로부터 노출범위, 노출자 추산, 2차 확산 등을 신속하게 예측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노출 현장 외 범위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생물 테러·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 개발도 필요하다. 이는 노로바이러스 대응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여름철 각종 감염병은 더욱 심각하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개인의 건강과 질병 보전에 더욱 관리가 철저하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시 감염병, 생물테러는 대테러안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3. 민간 경호경비인력 적극 활용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조직위에서 민간안전인력 약 2,200명이 안전활동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대학 보안·안전분야 전공자를 우선 선발, 군경, 소방 등 정부 안전기관 출신 퇴직자(65세 미만) 적극 활용 등의 지침을 정해 대학 및 국방부에 우수인력 추천을 의뢰하였으며 강원대, 가톨릭관동대, 용인대 등과 MOU를 체결하였다(조직위원회 안전관실, 2019). 이에 따라 조직위가 선정한 민간안전 경호 용역업체인 ‘유니에스’가 9월-12월간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조직위와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민간 안전용역업체(유니에스) 팀장급 이상 37명을 대상으로 보안검색 방법·돌발상황 초동 조치 요령 등에 대해 안전활동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정원 등과 협조, 민간 보안검색요원 전원(2천여명) 대상 총 9회에 걸쳐 검색장비 사용방법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안전통제실은 각 실별로 자원봉사자 대상 화재·폭발물·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민간안전요원들은 주로 경기장 및 행사 관련시설 출입구 보안검색활동, 경기장 내부 질서유지 및 현장안전통제실 등에서 근무하였다. 이들은 경찰·군을 대신 교육받은 대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안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출입증 부정사용, AD카드 위조, 반입제한물품 적발 등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였다.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민간안전인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검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입금지물품 적발자 등을 대상으로 격려금(5-10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보안검색 요원들이 주로 여성 위주(80%)로 편성되어 남성 대상 검색 불편 등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 조직위와 협조 보안검색 남성 인력을 증원토록 하였다.

국제스포츠행사는 조직위라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행사로서 축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에도 ‘군경 무장인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안전한 올림픽이었다’는 외신의 평가에서도 보듯이 무장조직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기, 우발사태에 대비하고 민간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검문검색과 경기장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제적 스포츠행사에 국가 공권력을 과도하게 동원하는 것은 행사에 참가하는 선수단·관람객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민간 주도의 국제 스포츠행사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업체수와 종사자도 늘어나

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경찰청에 등록된 경비업체 수는 4천5백여개, 경비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만도 15만여명에 이른다(권순구, 2018). 양적으로는 경찰력(12만명 수준)에 앞서고,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등 대규모의 국제 행사에 참여하여 국가기관을 능가하는 첨단 경호경비활동을 해옴으로써 노하우도 많이 축적하였다. 이렇듯 큰 성장을 거듭해온 민간경비회사에게 출입검문검색과 경기장내 질서유지 등 범죄예방 업무를 적극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민간주도의 국제스포츠행사가 더욱 완성도를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민간 경호경비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공석주, 2015; 김은정, 왕석원, 2017; 유영철, 송봉규, 2018).

4. 안전관련 행사운영 주체와의 협력 강화

기본적으로 행사 안전관련 1차 책임은 조직위원회에 있다.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직속으로 안전관을 운영하였다. 안전관 산하에 보안부장, 안전기획팀 설상안전팀, 빙상안전팀, 지원시설안전팀, 요인안전팀과 함께 보안관제센터를 편성하고 국정원, 경찰, 경호실, 소방, 지자체 및 민간인력 등을 파견받아 총100여명의 안전인력을 운영하였다(조직위원회 안전관실, 2019). 역대로 조직위내의 안전관련 조직과 인력은 크게 확장되어 왔다. 그간 정부가 안전대책을 주도하여 왔으나 점차 민간 조직위에 권한을 이양해온데 기인한다. 조직위 안전관실은 대회 직접시설에 대한 경비, 관련 시설 내 질서유지와 안내, 출입통제, 선수·임원·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해 1차 책임을 진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대테러안전대책본부가 편성 운영되면서 준비단계에서부터 조직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테러안전활동을 수행하였다. 동계올림픽 전에 개최된 테스트이벤트는 정부의 안전대책을 현장 적용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테스트이벤트는 2016. 11.-2017. 4.까지 올림픽이 개최된 평창·강릉·정선 일대 경기장에서 총22개 설상·빙상 대회가 열려 50여 개국 4천여 명이 참가하였다. 테스트이벤트는 대테러센터, 국정원, 경찰, 소방 그리고 조직위 안전관실이 함께 동일한 현장안전통제실에서 근무하는 체계로 시험 운영하여 상호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발휘됨이 검증되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정부와 조직위가 긴밀 협력한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일부 사안에서 각자의 입장 차이로 사전조율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조직

위는 IOC지침에 따라 안전요원들의 배뉴 접근 권한을 최소화 하였고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안전활동의 필요상 보다 넓은 범위의 접근 권한을 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안전인력·차량의 대회시설 출입권한이 축소되는가 하면, 대회 시설 내 경기·선수·의전·미디어구역 등에도 안전 인력의 접근이 일부 제한되기도 하였다. 또한, 대회관련 시설의 인원·차량 출입통제절차, 안전펜스·검색대 설치 및 반입금지물품 기준 등에서 안전 유관기관과 의견 차이가 일부 있었다.

그리고 조직위는 대회시설 통제의 핵심시설인 보안펜스 등을 대회종료 후 철거해야 하는 임시시설물로 인식하여 저가의 자재를 활용하여 허술하게 시공한 면이 있다. 경제적 측면을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나,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폭설·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펜스가 무너지거나 결속장치가 풀리는 등 사고가 대회시설 곳곳에서 발생하여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테러안전본부는 대회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회개막 임박시점에서 완공되었고, 실제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기에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과 안전측면을 조화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민간주도 국제스포츠행사시 조직위와 정부 대책기구가 안전 대책관련 임무를 정교하게 분장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전 가능한 세밀히 MOU를 체결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테러방지법령상 국가중요행사 안전대책 조항 보완

1) 테러방지법령상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 관련 조항

테러방지법상 국가중요행사 안전대책관련 조항은 2개로, 제6조에는 ‘대테러센터의 기능 중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 대책 수립’이 명시되어 있고, 제10조 제1항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관계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개최근거,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안전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한 국가중요행사를 여부를 정한다.’ 제2항은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국가중요행사 특성에 맞는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제3항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 합

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4항은 대통령 및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민 등 의 경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호처장이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중요행사 안전활동 컨터롤타위는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장이며,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행사의 성격과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의 경우 국무총리 주관 테러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6. 7 개최된 테러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중요행사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근거가 되었다.

2)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 관련 보완이 필요한 사항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에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활동 관련 내용은 3개 조항으로 대테러안전활동 체계와 국가중요행사를 지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나 테러방지법령 전체가 국가대테러활동 전반에 관한사항으로 평상시나 평창 동계 올림픽 등 국가중요행사가 개최되는 시기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법 제9조),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법 제10조),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법 제11조), 대테러 특공대(시행령 제18조), 대테러합동 조사팀(시행령 제21조), 테러경보 발령(시행령 제22조),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시행령 제23조) 등 거의 모든 조항이 국가중요행사시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다만 대규모 국가중요행사 개최에 대비 대테러안전활동 관련 일부 조항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다. 첫째로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행 테러방지법령상에는 국가중요행사 개념이 나와 있지 않고, 시행령상 ‘관계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개최근거,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국가중요행사를 여부를 정한다.’(시행령 제26조 제1항)라고만 적시하고 있고 국가중요행사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국가중요행사로 지정될 경우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개념인 점을 감안, 국가중요행사의 개념을 법(제2조 정의) 또는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²²⁾

22) 유사개념으로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260조, 2015년 제정) 제3조에 의하면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고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인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둘째로 앞에서 언급한대로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시 민간의 안전활동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대회의 축제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경의 눈에 보이는 활동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테러·범죄·재난 등 우발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경호경비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민간 안전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 시행령 등에 국가중요행사(스포츠행사)시 민간 안전인력 역할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민간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스포츠 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김두현, 이병옥, 2009; 김두현, 박영만, 2011).

다만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과 관련한 테러방지법 개정은 크게 급하지 않고 쉽지도 않은 점을 감안, 향후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가 있을 경우 함께 면밀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VI. 결 론

이 연구는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정부의 대테러 안전대책의 잘된 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더 나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은 ①안전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준비 1단계, ②세부 안전활동을 마련하고, 취약요소 점검한 2단계, ③종합상황실, 현장통제실 운영 등 대회 현장 안전활동을 본격 가동한 3단계로 나뉘 이루어졌다.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총리실 대테러센터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안전활동으로 기록되었다.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그리고 안전 관계기관들이 조직위와 긴밀 협조하면서 체계적인 사전 정밀 안전대책 준비와 협력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이뤄냈다.

대테러안전활동은 테러방지법에 따라 대테러센터의 단일 통합지휘체제로 운영되었다. 다만 그간의 국정원의 노하우를 이유로 공동위원장 체제를 갖추었다. 앞으로 당연히 이러한 단일 통합체제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IOC도 우리의 단일 지휘체계 안전활동의 효율성을 인정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의 역할과 대규모 동원인력·장비

부의「국제행사의 유치 개최에 관한 규정」(훈령 제2012-169호)에는 ‘국제체육대회’라 함은 첫째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장애인올림픽 등 국제 종합경기대회, 둘째 월드컵축구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등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를 감안, 앞으로 안전대책기구 운영에서 임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총리주재 테러대책위원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국가중요행사 지정하여 국가차원의 안전활동의 근거가 되면서 관계기관의 협력이 심화되었다. 테스트이벤트와 U-20 월드컵축구대회 라는 예행연습을 통해 관계기관이 손발을 맞추면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지적되었다. 먼저 드론안전, 질병관리, 사이버대응 등 새로운 형태의 안전위협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이 아쉬웠다. 예산 또는 기술적 한계 그리고 상상력 부족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다. 또한 조직위와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책임을 분담하는 정밀한 MOU를 체결해 두는 것도 대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평창올림픽에서는 민간 안전인력들이 대거 투입되어 현장 최전선에서 활동하였다. 과거의 안전활동과는 달리 이들은 군과 경찰을 대신하여 무장없이 현장을 지켰다. 많은 민간인력이 동원된 안전활동으로 기록될만하다. 우리나라 경호경비업의 비약적 발전을 해오고 있다. 이들의 노하우와 첨단 경비 기술·장비는 정부를 능가한다. 이들을 더욱 확대 활용해야할 부분이다. 이들은 정부 관계기관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한다. 이들에 대한 사전 철저한 안전활동·보안검색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만성 (2013). 국제행사 물리적 보안시스템 설치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7-10.
- 공석주 (2016). 대규모 행사 안전활동을 위한 민간경비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순구 (2018). 한국대테러학. 법문사.
- 김두현 (2002). 최첨단무기테러에 대응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안전대책. 경호경비연구, 제5호, p.60.
- 김은정, 왕석원 (2017).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호경비분야의 안전 위기관리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52호, p.48.
- 남재성, 강남수 (2012).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위협 요인과 대책. 한국테러학회보, 제5호, pp.64-101.
- 신성권 (2011). 국제행사시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안전대책. 한국경찰학회 · 한국민간경비학회 세미나 발표, 제13권 제4호, p.160.
- 옥광, 김재수 (2011).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동북아시아의 정세.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15권 제4호.
- 유영철, 송봉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안전요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제8권, pp.53-78.
- 조민상 (2016).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전 및 위기관리 방안.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제1권 제5호, pp.117-131.
- 최은하 (2018). 2018 평창동계올림픽 사이버안전본부 설치를 위한 개념적 · 규범적 접근. 경찰학 연구논총, 제11권 제1호, pp.9-29.

2. 외국문헌

- Clutterbuck, Richard. (1987). Kidnap, Hijacking and Extortion(London: Macmillan). pp.6-7.

3. 기타자료

테러정보통합센터 (2017). 차량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테러정보통합센터 (2019). 2018년 테러정세 및 2019년 전망.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2016). 대테러안전활동 기본계획 및 보안정책 보고.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for Large Scale International Sports Events in Korea

Jeon, Jong Sup^{*}

Each country is investing enormous costs to attract large international sports events such as the Olympic and World Cup. This is because the positive ripple effect is due to the development of diplomacy and politics, as well as soft power growth and economic benefits such as tourism and culture. In 2000, large events held in many fields such as sports, conferences, and cultures have increased rapidly. However, in the case of large-scale events that attract international attention, terrorist groups have been the targets of focus, so each country has taken safety measures with an astronomical budg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conduct safety activities at large-scale international events. We will look at counter-terrorism measures operated 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held in Korea and identify the positive and negative parts and suggest developmental measures.

As a result, thorough countermeasures against new types of safety threats such as drone safety, disease management, and cyber response were not made, and problems found in budget or technical limitations and lack of imagination were found. There was also a slight lack of cooperation with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the counter-terrorism headquarters, the government control tower.

In this regard, cooperation between the institutions was further deepened, MOUs were established to clarify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expansion of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dministrative Judge(The 1st Author)

the utilization of private safety personnel, and the development of know-how, advanced equipment, and advance education. We look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y industry.

Key Words: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ternational sports events, national important events, anti-terrorism law, Counter-terrorism Center

국내외 테러동향과 과거 북한의 도발로 본 국내 사이버테러 위험성 재인식

유 석 봉

국내외 테러동향과 과거 북한의 도발로 본 국내 사이버테러 위험성 재인식

유 석 봉*

[국문초록]

지난 2016년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벌써 3년이 넘었다. 그 당시 북한에 대한 테러위험성이 많이 제기 되었으나 최근 우리나라는 남북정상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한 GOP 철수 등 많은 남북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이후 북한의 많은 도발과 화전양면전술을 통해 우리나라는 결코 안전하지 못했다. 2008년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었다가 빈번히 테러를 행하고 해외테러지원국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 함으로 다시 미국은 2017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되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과 실무회담 등 국가적으로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가 유지될 것 같은 상황속에서도 북한은 지금도 언제든지 테러를 행할 수 있기에 우리 국가와 군은 국가안보에 대해 과거의 북한의 테러방법과 유형을 교훈삼아서 현시대에 다시 발생 가능한 사이버테러 등의 실존 안보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테러리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추후 테러(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다양한 공간에서의 테러에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재인식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테러, 사이버테러, 침투도발, 위협, 테러리즘

* 안동과학대학교 국방의료과 교수(제1저자)

목 차
I. 서 론
II. 국내 · 외 사이버 테러동향
III. 국내 · 외 테러동향에 대한 교훈
IV. 국내 테러 대응방안
V. 결 론

I. 서 론

지난 2016년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그 해 2월23일 주호영 의원(당시 새누리당)이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 예상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정)발의 했다.” 이에 야당은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로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처음 발의된 뒤 약 15년 만에 법제화됐다. 이 법은 법률 제14071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조(목적)에서처럼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만큼 국내에도 테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테러란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한 종교, 사회제도 등에 불만을 갖고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 약탈, 저격, 폭행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폭력수단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행위’로 분류한다(신현기 외, 2012). 이러한 테러는 19세기 말 특정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력공격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이 당시 무정부주의자인 M. Bakunin이 결성한 국제적 비밀 결사대가 제1세대 테러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세대는 1914년 사라예보에서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던 헝가리-오스트리아 왕세자를 저격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국경을 넘어 테러를 감행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테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용호, 2013). 그 후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이에 대항하기 위해 테러가 더 성행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무기관리체계가 허술한 시기를 이용하여 해방운동단체들이 국제적인 테러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2001년 9.11일 민간인을 대상으로 알카에다 비밀결사조직이 미국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여 충격적인 자살폭탄 테러공격을 자행한 사건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테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두드러지는 부분은 범죄와의 전쟁 영역중어서 그 중앙에 테러가 한역을 차지하여 범죄와 테러, 전쟁으로 이어지는 상호간에 영역의 붕괴와 융,복합이 일어났다고 평가한다(윤민우, 2014). 이 시기를 제 3세대 테러리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시기 이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융,복합적인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1995년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발생한 탄저균 테러 등 화학물질에 의한 테러는 사이버중교에 의한 다양한 방법의 테러가 자행되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우며 융, 복합적인 기술이 발달하여 테러분야에도 적용되어 기존의 일반적인 범죄와 전쟁이 평면적이라면 요즘시대의 테러와의 전쟁은 개인과 사회적, 종교적, 단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복합적인 테러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복합적 테러로 주목받고 있는 형태가 바로 ‘사이버 테러’다. 사이버 테러는 시대기술의 변천에 맞게 2D, 3D를 넘어 4D 기술로서 가상의 공간에 등장했으며 기업이나 학교, 사회의 인터넷공간에서도 사이버 테러 및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미시적 수준의 일반적 범죄로부터 거시적 수준에서의 테러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동하고 있다(J.D. Reed, 2008).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세력들을 서로 네트워크 형태로 결합시키고 이러한 위협들의 전일적 총합(holistic sum)은 사회 안전과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국가 행위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서로를 결합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윤민우, 2014). 북한 또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2013년 방송국과 국내 주요 은행 4곳을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테러를 자행했으며, 2014년에는 국내 범죄자들과 북한의 정찰총국이 연계된 사이버도박을 이용한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사이버 테러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주며 범죄 및 테러행위에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사이버 테러는 Stuxnet이나 DDos공격, 해킹 같은 형태들의 유형을 띄고 있으며, 사이버테러의 특징은 웹사이트나 SNS, 밴드나 카카오톡 등의 공간을 통해 쉽게 유포되며 그 속도가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을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 테러의 목적으로 악용할 경우 국가급 위기 상황으로 빠르게 증폭시키는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되어 개인과 국가의 심리전에 위협을 줌으로서 사이버 심리전이 가지는 폭발적 위협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안보와 일상생활의 위협은 보다 분명하고 실체적인 성격을 나타내며 이를 저지하고 감시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적 정서와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대책과 논의가 필요한 듯 보인다. 이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기술적인부분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사이버테러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좀 더 발전된 많은 연구가 있기를 바래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그동안 많이 연구되어왔던 부분 중에서 사이버 상에서의 국내외 테러동향과 공격방법을 분석해 보고 둘째는 과거 북한의 주요 도발 사례분석을 통한 교훈을 통해 북한의 향후 국내 테러방향을 제시하여 한반도 안보정세를 살펴보고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함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자료수집을 위해서 기존의 논문, 보고서, 기관보고서, 미디어 자료 등을 인용하였다.

II. 국내 · 외 사이버 테러동향

1. 국외 사이버 테러동향

해외 테러 동향에서는 모든 국가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가장 주요한 테러 대상으로 손꼽는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은 살라피 극단주의 테러세력이라고도 불리는 알 카에다가 대표적이지만 탈레반, 보코하람, 알 샤밌, 체첸 그룹 등 여러 극단주의 테러세력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공통점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이들의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을 공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의 주요 공격방법은 무장공격, 자살폭탄 및 매설폭탄 테러, 인질납치 등이다

(윤민우, 2015). 이러한 공격방법들의 예를 살펴보면, 무장공격은 2008년 수백명이 사망한 인도의 뭄바이 테러와 2013년 9월 나흘동안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알 사바브 소행의 케냐의 쇼핑몰 테러, 2016년 7월에 독일 안스바흐 폭탄테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자살폭탄의 예로 2016년 프랑스 대혁명기념일(7.14)에 니스에서 폭탄을 장착한 차량이 돌진하여 8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이 있었다. 최근에는 2019년 7월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두건의 자살테러로 이슬람 무장단체인 파키스탄 탈레반에 의해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자살테러 방법은 테러리스트가 직접 폭발물을 소지하거나 장착하여 오토바이,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선정된 타겟이나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직접 자폭함으로써 그들의 의지를 표명한다. 매설폭탄테러는 유실된 도로나 동물의 사체, 바위, 쓰레기통, 주택 등에 폭탄을 매설하여 부비트랩의 형태로 타겟이 근처에 도달했을 경우 유선 혹은 무선으로 폭발시킨다. 인질납치 형태는 테러목표로 선정된 인물을 납치하는 공격행위이다. 이러한 인질테러의 목적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인질테러범이 정치적 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한 목적 등으로 인질을 협상에 이용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인질자체를 참수하는 등 위협과 공포를 조장하여 테러범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테러 공격방법들은 국지전 형태로 전쟁보다 파급효과가 높으며, 비용 및 편익 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테러에 관한 인식전환 시점은 미국 9.11테러 이후를 기점으로 테러목적에 있어 많은 진화와 인식변화가 있었다. 9.11 테러 이전까지는 공공 사회, 또는 개인 및 단체, 국가 등에 대한 위협, 공포의 조장 등이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장공격을 비롯한 네가지 형태였다면 그 이후 테러리즘은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면서도 다른 목적들의 형태를 추구하는 새로운 공격방법의 사이버 테러나 핵 테러리즘의 형태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 사이버 테러동향을 살펴보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공격형태로 새롭게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해킹방법 또는 DDoS 공격 등과 같은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공격행위로 정보통신망이나 컴퓨터 단말기, 서버,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정부나 민간기관(은행, 기업 등)의 시스템에 침해를 가하기 있으며, 그 외에도 사이버 공간을 통해 지휘통제하고 서로 교신, 무기거래, 훈련, 교육 등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테러리스트 모집, 지지자들로부터 자금모

집, 선전, 선동, 심리전 등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사이버테러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테러는 일반적 테러처럼 폭력이나 살상 등으로 얻는 공포의 효과가 없어도 더 효과적이고 쉽게 테러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DoS 공격의 예는 사이버 테러로 지칭되지만 실제로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인명피해 등으로 공포를 주기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정정도 이상의 불편함과 개인 및 국가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9.11테러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테러에 대한 인식과 방법, 목적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현시대에는 이러한 사이버테러의 방법이 테러리즘의 틀 안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2. 국내 사이버 테러동향

최근 국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및 실무회담 등을 통해 과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의 지키기 위해 싸웠던 선조들의 후예로서 북한이 저지른 과거의 만행들을 잊을 수는 없다. 이러한 지난 만행을 뒤돌아 볼 때 아직까지 국내 테러 동향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주체는 북한일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은행 서브망 해킹, 국가 주요직위자 메일을 이용한 바이러스 유포 등 수차례 사이버 테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북한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선동과 이익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 테러로 공격해 왔다. 이렇듯 최근 몇 년간 북한의 테러동향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2세대적인 국지도발이 아니라 3세대적인 사이버 테러에 주력한다는 점이다. 배달형(2011)은 “북한의 사이버테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은 국방위원회 직속의 정찰총국에서 핵심적인 테러 공격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북한은 분명히 최근 까지도 외화벌이를 위해 마약 및 무기 밀거래, 위조화폐 및 돈세탁, 사이버 테러 등 여러 종류의 국제범죄를 자행해 왔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북한의 경우 최근 일반적인 전쟁의 영역보다 융·복합적 사이버테러와 핵을 이용한 국제적 테러위협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과거 대표적 테러 현황(1960대~2010대)을 살펴보면 1958년 대한민국항공사(KNA)소속의 창랑호를 북한 공작원에 의한 강제 납북사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테러 및 테러위협을 자행해 왔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간첩활동 및 무장공비와의 교전 등을 통한 국가체제 교란 및 혼란과 납북사건위주 사건이었으며

1970년대부터는 북한체제가 불리해지면 대화를 유도하다가 다시 유리해지면 무력을 동원한 화전양면전술의 도발을 자행해 왔다. 1980년대부터는 제3국을 이용하여 테러의 주체를 알수 없도록 위장하는 대범한 테러를 시도했다. 1990년대부터는 남북관계 긴장체제가 완화되는 듯 했으나 오히려 은하계곡 무장공비 침투사건(1992. 5.22), 임진강 무장공비 침투사건(1995.10.17.), 제1 연평해전(1999. 6.15)과 같은 무장테러도 빈번히 자행되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 등 국가적 화해분위기가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북한은 이 기회를 무기개발과 핵실험 등 비대칭전력을 극대화 시키면서 접적지역인 NLL, DMZ지대에서 잦은 테러를 자행했고 2009년에는 디도스 공격(7. 7)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메일 악성코드 유포공격 등 사이버 테러 공격양상도 보였다. 2010년부터 최근 몇년까지도 북한은 천안함피격(2010. 3.26), 연평도 포격(2010.11.23.) 등 무장테러와 6차까지 진행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및 방사포사격 등으로 테러위험을 주었으며 이때부터는 과거 일반 무장테러 사건에서 사이버테러 방향으로 전환하여 우리 국가를 공격 및 위협해 왔다. 2011년에도 디도스 공격(3. 4), 2013년 전산대란(3. 20) 등에 이르기 까지 사회 혼란, 금융망이나 전산망 교란, 마비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등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사이버테러와 수차례에 걸친 한국 수력원자력 해킹(2014.12.15.~2015.3.12.), 2014년 대학병원 전산망 해킹, 2015년의 지하철 서버 전산망 해킹, 2016년 1월 청와대 직원을 사칭한 해킹메일 발송, 외교 및 안보라인의 휴대폰 해킹 등을 빈번히 자행해 왔다(유동열, 2016).

사이버 테러 대상을 살펴보면 청와대, 국방부, 국가 주요기관 사이트, 농협 등 금융기관, 방송국 등 다양하다. 이러한 북한과 연계된 중북·친북 사이트가 무려 162개나 되며 국내·외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선동공세를 취하고 있다(월간조선, 2018. 7월호). 이를 활용하여 북한은 범죄세력과의 연대와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오랫동안 제 3세계 및 아시아에서 활동중인 중국 범죄세력 또는 알 카에다 등의 무장테러세력들과 무기나 마약밀거래 등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인터넷망을 이용한 북한의 범죄, 테러세력과의 유대관계가 형성 될 것에 대한 우려가 된다.

북한이 이러한 외부세력과 유대관계가 형성된다면 그동안의 사이버 테러와 다르게 더욱더 누가, 어디서, 어떤 주체가 주도했는지 알아내는 데는 매우 많은 시간적 소요와 그 배후를 밝히는데도 현 정보기술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 소행

이라는 것을 식별했다고 할지라도 이에 적각적인 대응공격을 하거나 책임을 묻고 피해보상이나 국가적 사과를 받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점이 있기에 북한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더 직접적인 무장침투에서 사이버테러를 자행 할 것이다.

Ⅲ. 국내 · 외 테러동향에 대한 교훈

1. 국외 테러동향에 대한 교훈

먼저 국외 테러동향과 공격방법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면 범죄, 테러, 전쟁의 영역 파괴와 융·복합현상, 사이버 공간의 전략, 전술적 활용과 핵테러리즘의 가능성과 같은 뉴 테러리즘으로의 테러 영역의 확장, 테러목적의 다양화, 극대유형의 자생테러의 등장 등으로 인해 이제는 전통적인 대테러 대응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윤만우, 2014). 게다가, 테러세력의 인적, 지리적, 종교적 테러세력 확장은 IS(Islamic State)와 같은 알카에다에 더불어 또 다른 테러 세력을 등장시켰고 이들은 지도자가 사살되더라도 테러세력은 지속적으로 전지구적 파괴력을 증폭시키고 있다(윤만우, 2014).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의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의 세력 확장은 북미와 유럽 전역에 문제가 아니라 국제안보질서를 깨트릴 정도의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해외테러 동향의 추이는 세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테러리즘의 폭넓은 이해와 대테러 대응전략을 다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2. 국내 테러동향에 대한 교훈

북한은 1980년대 초 소련의 컴퓨터 전문가 약 40여 명을 초빙하여 사이버전을 학습하고 1986년 평양에 미림 지휘자동화대학을 설립하여 연간 100여명 씩 사이버전 전문가들을 양성할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되고 지속적,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홍성표, 2011).¹⁾

1) 홍성표, “북한 사이버 공격수법, 고도화 · 지능화”(2011, pp. 34), “사이버 상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2016, pp.75-104)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능력은 2장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사이버 전(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으며 6위 정도의 종합적 사이버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²⁾

〈표 1〉 1960대~2010대 북한 대표적 테러 현황³⁾

구분	테러 및 테러위협 현황
1960년대	1966년 진주 덕의마을 무장공비 침투사건(5.17)
	•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1.19), 중부전선 교전(4.12) • 격렬비열도 간첩선 격침 사건(4.17) • 화천군 비무장지대 침투사건(4.12), 서부전선 미구막사 폭파사건(4.22)
	1967년 • 강릉 고단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5.21) • 연평도 근해 어선포격사건(5.27), 대성동 미군트럭 기습사건(8.7) • 서부전선 군용트럭 기습사건(8.10), 관문점 미군막사 기습사건(8.28) • 경원선 초성리역 폭탄 테러 사건(9.5), 경의선 운정역 폭탄 테러사건(9.13)
	1968년 • 청와대 기습사건(1.21), 푸에블로호 피랍사건(1.23) • 임자도 고정간첩단 사건(7.20),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11.2)
	1969년 • 주문진 무장간첩사건(3.16), EC-121 격추 사건(4.15) • 1차 흑산도 간첩선 격침 사건(6.9), 2차(10.23) •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12.11)
1970년대	1970년 • 해군 방송선(1-2) 피랍 사건(6.5)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폭파 미수 사건(6.22)
	1971~1973년 •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1.23), 소흑산도 근해 간첩선 격침사건(6.1) • 철원군 비무장지대 총격사건(1973.3.7)
	1974년 • 추자도 무장공비 침투사건(5.20), 해경 863경비함 격침사건(6.28) •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8.15), 휴전선 남침용 1명굴 발견(11.5)
	1975~1976년 • 아군 해군경비정에 북한 선박 충돌, 자침사건(2.26) • 북한 전투기 30여대 백령도 상공 침범사건(3.24) • 관문점 헨더슨 소령 구타사건(6.30), 관문점 도끼만행사건(1976.8.18)
	1978년 광천지구 무장간첩 침투사건(11.4),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1.14)

2) 배달형, “한반도 전구 4세대전쟁 및 비대칭 위협 관점의 사이버전/사이버 심리전 발전방향”, 『KRIS 정책토의회 발표자료』, 2014

3) 〈표 1〉. 1960대~2010대 북한 대표적 테러 현황은 이윤규의 『북한대남 침투도발사』(살림지식총서, 2014)에서 연도별 정리연대별 대표적인 사건만 기록되었으며 실제로는 더 많은 침투사건 및 무장테러가 이루어 졌다. 000기록에 의하면 2000년 서해 연평해전까지 북한의 테러현황은 4백70여건, 총 3,738명에 이르는 국가 주요인사와 민간인 납치, 폭파 등 다양한 테러를 자행하며 국가위기사항을 조정해 오고 있다.

1980년대	198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하류 무장공비 침투사건(3.23), 포함 간첩선 침투사건(3.25) • 김화지구 월남 무장공비 침투사건(3.27) • 격렬비열도 간첩선 격침 사건(6.21), 횡간도 무장공비 침투사건(11.4)
	1981년	필승교 무장공비 침투사건(6.29), SR-71 정찰기 피격사건(8.26)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10.9),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9.22)
	1986~198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10.9),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9.22) •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1987.11.29)
1990년대	1992년	은하계곡 무장공비 침투사건(5.22),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10.6)
	1995~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강 무장공비 침투사건(1995.10.17) • 부여 간첩 사건(1995.10.24.),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1996.9.18) •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사건(1997.1.3) • 철원 GP교전(1997.7.16.), 망명자 이한영 암살 사건(1997.2.15) • 최정남 · 강연정 부부간첩 사건(1997.10.27)
	1998~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초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 기도사건(1998.6.22) • 동해 무장공비 사체 발견 사건(1998.7.12) • 강화도해안 간첩선 침투 기도사건(1998.11.19) • 여수해안 간첩선 격침 사건(1998.12.17.), 제1연평해전(1999.6.15)
2000년대	2002~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연평해전 발생(2002.6.29.), 핵무기 보유 선언(2005.2.10) • 1차 핵실험(2005.10.9.), 박왕자씨 피살사건(2008.7.11.) • 2차 핵실험(2009.5.25)
2010년대	2010~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 연평도 포격사건(2010.11.23) • 3차 핵실험(2013.2.12.), 디도스 공격(2011.3.4.), 전산대란(2013.3.20) • 4차/5차 핵실험(2016.16.99),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2016.3.3) • 6차 핵실험(2017.9.3)

이렇듯 북한은 정보수집에 있어서 사이버영역 중 해킹이나 공학적 방법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웹서핑으로도 정보를 수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⁴⁾ 현재 북한은 그들이 처한 국제정치적 상황과 군사적 전쟁수행능력과 경제적 상황의 한계 때문에라도 폭탄테러나 무장공격과 같은 직접적인 공격은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기에 도발의 가능성은 낮을 것이기에 오히려 사이버 공간

4) 북한은 지난 2013년 5월 국내의 한 디카 동호회 사이트에서의 웹서핑을 통해 미 항모 니미츠의 국내 입항 사실을 파악했던 사례로 볼 때 사이버를 통한 OSINT (Open source Intelligence) 활동에도 상당한 관심과 역량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북, 미항모 입항 정보 ‘디카 동호회’서 파악?”(2013. 5. 7)

을 이용하여 테러 행위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이나 무기제조 방법 등의 공유를 통해 국내에서 사제폭탄을 제조하여 자국민에 의한 폭탄테러로 위장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방법들은 그동안의 세계의 테러사건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방된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

급속도로 발달하는 IT산업과 AI기술을 고려하면 사이버 테러 수행 능력과 발전은 가상공력과 현실을 결합한 융복합적 테러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앞으로의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공격용 사이버 무기의 개발은 이를 통해 교통, 국가중요시설, 주요 산업설비 등의 통제시스템을 장악하여 오작동 시킴으로서 인위적인 국가재난으로 초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많은 학자들이 북한 테러동향에 대한 위협을 언급했으며 특히, 윤민우(2014)는 “북한의 경우 일반 테러공격의 독자적인 수행보다는 비대칭 전력을 활용하여 사전 선제공격으로 일반 및 사이버 테러, 핵미사일 시험 등을 사용하여 원점 타격, 심리전 전개 등으로 사전 타격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북한이 한국보다 먼저 사이버 상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 하는 것은 국내외 언론에서도 여러번 언급되었던 것처럼 북한은 오래전부터 사이버 테러공격의 능력 제고를 위해 국방위원회 직속의 정찰총국에 사이버 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체제를 구축하였고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위장한 정보전 연구소이자 해커지휘부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듯 사이버 테러는 국내 안보에 가장 주요한 위협요인이며 앞으로의 북한은 범죄-테러-전쟁이 융합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를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국내 친북세력 등의 여러 세력 등과 유기적인 테러를 감행하고 지휘통제 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국내에 거주하는 친북성향이 강한세력과 위장 탈북자, 조선족, 사회조직에 불만세력 등과 국외에서 유입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등과 사이버테러가 융합된다면 이 또한 더 큰 위협으로 다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14만명이 넘는 무슬림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하며 이들이 IT강국이라는 한국에서 전문적 사이버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고 한다. 이슬람은 오래전에 동북아시장을 이슬람화 시키겠다고 선포했으며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와 유대관계를 갖고 있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수의 무슬림들이 거주하게 됨으로서 북한의 직접적인 테러공격보다 우회한 제 3국민을 통한 폭탄 및 사이버테러의 위협 지역으로 변해 갈수도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IV. 국내 테러 대응방안

먼저, 현재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의 대테러체계를 살펴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이버안전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공공 부분에는 국정원의 ‘국가사이버 안전센터’,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민간부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국방부분에는 국방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국방정보전대응센터’가 담당하고 있다(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2013).

그리고, 이러한 국내 테러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은 그동안 많은 논문과 사설에서 언급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을 통한 사이버 테러에 관심을 두고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장악력 확보라는 기본 전략을 위에서 우리나라 군과 경찰, 국가가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하나의 별개의 전장공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공권과 제해권과 유사한 사이버 장악력을 강화하고 적대국가의 장악력 구축을 저지하고 억제하는 데 사이버 대응 역량강화의 목표가 맞추어 져야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리군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응세력과 전쟁이 발발할 경우 승리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기에 매년 국방예산을 증액하여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며 적대세력보다 더 우세한 무기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북한과의 평화적 협상을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적 훈련이나 노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드웨어적인 국방력과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네트워크 중심전 역량강화와 사이버 심리전에서의 우위확보를 복합적으로 전개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독자 군사력으로서의 사이버 군사력을 지향하고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이는 하늘 공간이 새로운 공간으로 편입되고 나서 공군력이 독자적인 공간에서의 군사력으로 발전되어 온 사례를 참조하면 이해가 수월할 것이다. 우선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전력은 해군의 해상봉쇄난 공군의 전략폭격과 같은 독자적으로서 전쟁의 승리를 확보하고 적의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는 전략의 기본틀이 요구된다. 적의 인식과 의식, 의사판단을 마비시킴으로써 전쟁 수행 자체를 포기시키는 정보장악이 독자적인 전투력으로서 사이버 전력의 전략의 기본 프레임이 될 수 있다(이용석, 2019).

이러한 사이버 전력의 발전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 군이 현재의 사이

버사령부유지와 사이버 전사의 양성과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독자전력으로서의 사이버 군이 어떤 성격으로 자리매김해야하고 어떤 실제적 기능을 갖추거나 갖추려고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 하는바가 크다. 우선 사이버 독자적인 전력으로 고유한 발전방향과 운영 체계를 만들어 내고 사이버 전력의 특성을 담아내야 한다.

또한 군의 사이버 테러 대응방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이버 테러대응 및 전쟁 수행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조율하고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더불어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개별 병사들이나 초급간부 및 지휘관들의 개별전투수행 능력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컨트롤 타워의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전투 현장의 개별 병사들과 지휘관들의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전투지속능력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이 두 양극단의 능력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하며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컨트롤 타워의 부재도 주요한 문제였지만 그 반대편 끝에 있던 현장 출동한 해경의 독자적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과 유연성의 결여도 같은 비중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이버테러의 법집행 측면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수사기관의 전문성, 능력을 확보하고 군과 정보기관, 그리고 국가급 컨트롤 타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현재 사이버테러에 대한 수사기관인 군과 경찰의 수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들 인력들은 타보직과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다소 결여될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 테러 처벌법은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개인정보침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처벌도 많게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법은 예방책이라기 보다 국가 보안적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후 처벌하는 솜방망이 역할밖에 되지 못한다.

군내에서의 사이버 테러 수사담당자들은 순환보직과 같은 문제점과 군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민간 전문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의존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전문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간 한 보직에서 운영되다보면 반드시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독립된 법집행기관으로 수사기관을 운영하고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하고 신분이 보장된 장기간 양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9.11이 테러 등 다양한 사이버 테러를 교훈삼아 중, 장기적 사이버 인력양성과

연구, 개발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V. 결 론

우리 국가가 직접적으로 당면한 사이버테러의 위협은 북한과 국내의 범죄자 또는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국내 테러동조세력들에 의한 구체적인 위협들이 우리 앞에 과제로 주어졌다. 이 위협은 분명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며 현실공간에서의 안보위협과 복합적으로 연동하여 우리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 국가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은 구체적으로 사이버 테러에 관련된 쟁점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될 것 같다. 또한, 국내 안보 사이버테러의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과 기타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위협요소들의 예측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자료에 의하면 “2016년 상반기 북한 정찰총국 등이 주도한 사이버 공격이 전년보다 200% 이상 급증했다”며 “이는 핵실험·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북한 도발 행위의 일부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⁵⁾ 또한, 미래부의 북한사이버 테러 범정부대응방안 발표(2016)에 의하면 “북한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대상의 8500만불 해킹사건 등에 배후로 지목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타개를 위해 해킹 지원 조직을 동원 도박사이트를 통해 외화벌이에 몰두하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

정리해 보면, 국내에서 아직까지 자생테러사건이 없지만 과거 2003년에서 2007년까지 70여명 이상의 외국인 테러 용의자들이 국내에서 체포되어 추방되었으며 2018년 올해 전반기에는 7명의 테러 위험인물들을 색출하여 강제출국 6명과 그중 1명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후 첫 번째로 구속되었다. 이들 모두 수니파 극단주의자 테러조직으로 국제 테러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IS조직에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이 아닌 자생테러가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의미이다.

5) 국방일보, “북, 사이버공격 200%증가”(2016.7.24일자)

따라서, 국가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속에서도 국가와 군은 과거의 북한의 테러방법과 유형을 교훈삼아서 결코 이러한 자생테러의 형태인 폭탄테러와 사이버테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존 안보위협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위 대응방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북한이 추후 사이버테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다양한 공간에서의 테러에 대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더 많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또, 어떤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 방법을 모색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신현기 외 (2012). 경찰학사전. 법문사.
- 배달형 (2011). 국가군사전략급 수준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방향. 전략연구, 제52권, pp.147-174.
- 배달형 (2014). 한반도 전구 4세대전쟁 및 비대칭 위협 관점의 사이버전/사이버 심리전 발전 방향. KRIS 정책토의회 발표자.
- 신용호 (2003). 국제테러의 변천과 국제사회의 법적 대응.
- 윤민우 (2014). 최근 국내외 테러 동향과 테러공격 방법에 대한 분석. 경찰학논총, 제9권 제3호, pp.235-244.
- 윤민우 (2010). G20 정상회담 대비 주요 테러 사건 비교분석과 이를 통한 대테러 대응방안 제시: 각 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치안정책연구소 2010년 용역연구보고서, pp.16-20.
- _____ (2014). 사이버 안보위협 의 문제와 전략적 의미,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vol.14, no.4, pp. 111-147.
- _____ (2015).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의 성격과 최근동향 그리고 이슬람국가(IS:The Islamic State)에 관하여.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윤민우, 김은영 (2011). 아프가니스탄 지역 파슈툰 부족의 안보 · 치안시스템 : 국가권력과 탈레반 테러세력 사이의 안보 · 치안 서비스 경쟁. pp.85-120.
- _____ (2013).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범죄와 테러의 전략적 결합에 관한 연구. 한국 치안행정논집, 제10권 제3호, pp.89-112.
- _____ (2014). 한반도 사이버테러의 위험성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안보학술논집, 제25집, pp.234-242.
- 이상호 (2001). 북한 사이버 심리전의 실체와 대응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3권, 제1호, pp.263-290.
- 홍성표 (2011). 북한 사이버 공격수법, 고도화 · 지능화. p.34.

2. 외국문헌

- Makarenko, Tamara(2004), “The Crime-Terror Continuum: Tracing the Interplay betwee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errorism”, *Global Crime* Vol.6 No.1, pp.129-145.
- J.D. Reed(2008), “Beyond the War on Terror: Into the Fifth Generational War and Conflict,” *Studies in Conflict and Terrorism*, Vol.31, No.8(August 2008), pp.864-722.
- Yun, Minwoo and Eunyoung(2010), “Evolution of North Korean Drug Trafficking: State Control to Participation”, *North Korean Review* Vol.6 No.2, pp.55-64.

3. 기타자료

- 국민일보 (2001.10.16.). “생화학테러리즘 약사”
- 국방일보 (2016.7.24.). “북, 사이버공격 200%증가”
- 연합뉴스 (2013. 5. 7). “북, 미항모 입항 정보‘디카 동호회’서 파악?”
- 중앙일보 (2014.8.27.). “북한 경찰총국 해커에게 악성프로그램 제작 의뢰 일당 구속”

【Abstract】

Re-recognition of the Risk of Cyber Terror in Korea, which was seen as a Terrorism Trend at home and abroad and as a North Korean provocation in the past

Yoo, Seok Bong^{*}

It has already been more than three years since the anti-terrorism bill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 2016. At that time, there were many terrorist risks posed against North Korea, but the South has recently seen many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including the withdrawal of the GOP through inter-Korean summit talks, general-level military talks and working-level talks. However, after the Korean War, South Korea was never safe through the North's many provocations and two-way tactics. In 2008, North Korea was lifted from the list of state sponsors. The U.S. was re-designa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n 2017 and has been maintained so far as to repeat its frequent acts of terrorism and support overseas terrorism support. Given that inter-Korean relations are likely to remain harmonious throughout the country, such as the U.S.-North Korea summit and working-level talk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military should take lessons in the ways and types of terrorism in the past on national security and look carefully at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since they can never be free from the existential security threats such as cyber terrorism that can recur in the present era.

^{*} Andong Science College Department of Defense Medical Professor(The 1st Author)

In addition, it is time for the North to reapply its recognition of how it will prepare for terrorism in diverse areas, even if it is to take preemptive action against future terrorism (e.g. cyber terrorism).

Key Words: Terrorism, Cyber Terrorism, Infiltration Exploitation, Threats, Terrorism

한·일 경비업의 비교를 통한 동향분석과 시사점

이 치 영 · 박 준 석 · 권 혁 빈

한·일 경비업의 비교를 통한 동향분석과 시사점

이 치 영* · 박 준 석** · 권 혁 빈***

[국문초록]

일본 경비업의 경우 1972년 경비업법 제정 이후 나타났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체계는 한국의 민간경비산업 체계 개선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관련 법·제도, 단행본, 학술지, 뉴스, 국회 회의록 등 다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경비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먼저 민간경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검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경비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국민적 인식 변화를 위해 민간경비산업이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의 민간경비는 통합적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써 일본 전국경비업협회가 주도하여 보안플래너, 보안컨설턴트 자격을 통한 방법·방재 등 포괄적 범위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현재 한국에서는 통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제적 노력은 시작되고 있으나, 민간경비산업의 경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안전관련 법·제도, 교육 및 검정제도, 업무수행체계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통합적 안전관리체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대와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앞으로 민간경비에 필요한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주제어: 민간경비, 한국 민간경비, 일본 민간경비, 민간경비 동향, 경비업

*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제1저자)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교신저자)

***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공동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일본 경비업의 동향
III. 한국 경비업의 동향
IV. 한·일 민간경비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I. 서 론

한국의 민간경비업은 1960년대 미군의 군납경비를 시작으로, 1976년 한국은 ‘용역 경비업법’을 제정하여 경비업무의 법제화를 이루었다. 당시 한국 경비업법의 내용은 일본 경비업법의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도입하였고, 조항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일본경비산업과 법에 대한 규제법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은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라는 국제 대회를 유치하면서 대규모 행사에 대한 많은 수의 경비원들을 필요로 하여 경비산업의 양적인 성장기를 거쳐왔으며, 90년대 이후부터는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지도사의 도입, 교육훈련체계 개선 등 경비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2011년 유성기업 사태와 2012년 SJM사태에서 나타났던 경비원 고용을 통한 폭력행사 문제와, 행사장의 안전관리 미흡 문제로 나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에 따라 경비원의 물리적 행사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집단민원현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2016년에는 경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경비원의 신입경비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사회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 관련 연구들(박정원, 2002; 박준석·정석현·조창용, 2004; 박준석·박대우, 2004; 이상원, 2005; 박준석·홍준혁, 2006; 조용철, 2007; 허경미·박영주, 2007; 최은하·유영재·이상빈, 2008; 이상철·안성조, 2008; 조용철·김순석, 2008; 김태민·강영길, 2009; 백석기·이성진, 2011; 박장규·김남중, 2013; 김동희·김태환,

2015; 박성수, 2017)에서 민간경비산업의 교육, 검정, 업무배치 등 질적성장의 요인들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일 경비업법의 비교분석, 교육훈련 개선방안, 민간경비원 검정제도 도입방안 등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세부적인 법·제도, 교육훈련체계 및 과목, 검정제도 등 각각의 측면에서 다루어진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이후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동향과 변화를 분석을 중점적으로 한 연구보다 법,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의 국내 민간경비의 전반적 문제점과 외국의 민간경비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다.

현 시점에서 양국의 민간경비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한·일경비산업의 전체적인 맥락과 배경,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민간경비체계의 구축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일 경비업법과 경비협회 자료, 단행본, 학술지, 뉴스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법·제도, 검정·교육훈련체계 및 주요사례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한국, 일본에서 현대 경비업이 시작된 1960년대를 시작으로 하여 시대별로 구분하여 내용을 분석·비교하였다.

앞선 연구절차와 방법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하여 한·일 양국 민간경비산업 체계의 동향과 배경,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일본 경비업의 동향

1. 현대 경비업의 태동과 경비업법 제정의 배경

일본에서 경비를 업으로 하는 기업이 탄생 한 것은 1962년의 일로, ‘대일경’이라고 하는 기업이 일본 항구의 경비활동을 일임하여 최초의 근대적인 경비업이 시작되었으며, 초기의 경비는 경비업이라는 인식보다 일직이나 숙직의 업무를 대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후 고도 경제성장의 시류에 따라 일본 경비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1964년 도쿄 올림픽, 1970년 오사카 만국 박람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경비산업의 양적 성장과 국민들에게 ‘경비업’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¹⁾.

1968년에는 3억 엔 사건(도쿄도 후추시) 발생²⁾으로 3호 경비(현금 수송)이 경비업 무로 위탁되었으며, 여담으로 당시 TBS 드라마로 제작되었던 ‘도쿄 경비 지령 더 경비원’³⁾ 또한 일본 국민들에게 경비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으며, 이후 확산된 인식과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1972년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현대적인 일본의 경비산업이 시작되었다.

2. 경비업 검정제도 도입

1972년 경비업의 법제화가 이루어진 후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경비업체와 경비원으로 인해 나타난 폭력단과 관계된 부적격 경비업체와 경비원에 의한 문제, 교육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의 증가, 정보 장치 등을 사용하는 기계경비업의 법적근거 마련 및 즉시 대응 체제 미비에 의한 사건사고 발생으로 인해 이를 개선하 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비업법 제정 10년만인 1982년 7월 16일 법률 제67 호로 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①경비업을 현행 신고제를 인정(허가)제로 바꾸고 ② 경비 업체 및 경비원의 결격 사유로 새로 작성제 중독자 및 폭력단원 등을 추가 및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③기계 경비 업무를 신고제로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⁴⁾.

당시 경비업법의 개정과 관련한 배경은 일본 의회의 ‘제96회 국회 본회의 제15호 회의록’에서 그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⁵⁾, 1982년 3,210개의 경비업체에서 일어난 위반 건수는 1,513건으로, 이 중 362건이 경비원에 의해 일어난 범죄였으며, 1/4에 해당하는 86건이 흉악·폭력범죄에 해당할 만큼 불법 경비업체와 경비원에

1) 警備員教育教本 基本教育編(新訂版), 一般社団法人 全国警備業協会

2) 1968년 12월 10일에 발생한 절도 사건으로 현금 수송 차량에 실린 도쿄 시바 우라 전기(현 도시바) 직원의 보너스 약 3억 엔이 오토바이 까지 준비한 가짜 오토바이 대원에게 빼앗긴 사건이다. 『大捜査3億円事件』(読売新聞社部編 1975년)

3) 1965년 4월부터 1971년 12월까지 총 6년 9개월(총 350회)에 걸쳐 방송된 TBS의 텔레비전 드라마로, 일본 최초의 보안 업체 ‘일본 경비 보장’(현재 세콤)이 모델이며 경비업회사인 (주)도쿄 패트rollers 무대로 범죄 및 사건에서 시민을 지키는 경비원들의 분투를 그린 내용이다.

4) 改正 昭和57年7月16日号外法律第67号 [第一次改正]

5) 第096回国会 地方行政委員会 第15号 昭和五十七年四月二十二日 (木曜日)

의한 범죄가 매우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경찰청은 경비원 범죄가 나타나는 원인과 배경을 ‘해당 경비 업체의 지도 교육 체제가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여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지도·교육 의무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경비원의 교육의 내실 강화를 위해 ‘지도 교육책임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경비 업무 실시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경비원의 지식 및 능력을 향상시키고 게다가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당시 20시간의 경비원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더 적극적으로 경비원의 지식 및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검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경비 업무 검정은 개정 전 「경비업법」 제11조 및 1986년 7월 1일 국가 공안위원회 규칙 제5 호 「경비원 등의 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경비 업무 관련 일정 이상의 지식 및 기능을 가지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격이다.

또한 부적격 업체가 경비 업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 영업하게 되는 편법적인 운영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비 업체의 요건에 관해서 영업 개시 전에 도도부 현 공안 위원회에서 사전확인을 통한 확인과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제에서 인정(허가)제로의 제도적 개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1982년 「일본경비업법」이 1차 개정 이후부터 교통유도경비, 귀중품 운반경비, 공항보안경비, 핵연료물질 등 위험물 운반 경비의 4종에 대한 검정제도를 통해 1급, 2급 경비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보다 전문적인 경비원으로서의 자격검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도교육책임자 제도와 기계경비관리자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지도교육책임자제도는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 제도와 유사한 자격제도로써 경비지도사 도입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으며, 3년마다 지도교육책임자 강습을 받아 최신 동향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혼잡경비업무의 추가와 경비원 의무배치제도 도입

일본경비산업은 안정적인 경비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당시 경비업무 중 검정과목으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98년 상주경비(현 시설경비)검정을 추가하였고, 2001년 7월 21일 아카시 불꽃축제 육교 혼잡사고⁹⁾가 일어나 혼잡사고 방지

를 위한 경비체제의 확립, 경비업체에 대한 지도와 함께 행사와 관련하여 혼잡이 예상될 시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혼잡경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앞서 시행되었던 경비원 검정제도와 지도교육책임자제도를 통하여 부적격한 경비업체와 경비원에 대한 문제를 다수 완화하였으나, 당시 건설 기계를 이용한 ATM대상 절도 사건, 방일 외국인 절도 그룹의 피킹용 도구를 사용한 조직적 혹은 광범위한 침입 도둑 사건, 현금 수송 차량 절도사건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폭력단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을 추가하고 정신병자에 관한 사유를 추가하는 제도적인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이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지키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안전을 지키려면 일정한 결격 사유 도입을 우선시 생각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도입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⁷⁾.

또한 새로운 검정과목의 추가와 혼잡경비업무의 법·제도적 도입과 더불어 당해 민간경비원이 44만 명에 육박하며 당시 20만 명이던 경찰의 수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수로 경찰에서도 민간경비를 단순히 경찰의 감독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국가치안의 한 영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로써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간 민간경비산업에서 추진해 온 경비원 검정제도나 지도교육책임자제도의 안정적 정착, 민간경비산업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 세가와 생활안전국장이 새로운 검정제도와 추가적인 업무의 도입에 대해 민간경비가 해당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원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배경을 인식할 수 있다.

이후 2004년 3차 「경비업법」개정에 따른 논의에서 혼잡경비업무에 대한 추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⁸⁾, 구체적으로 제 159회 국회 내각위원회 제13호 회의록에 의하면 자유민주당 모리타 츠기오 의원의 “경비업의 수준향상의 목표치와 효과성에 대한 질의”에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인 이토 테츠로씨가 부적절한 업무 수행 사례와 불만의 발생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적절한 경비 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현재 요구되고 있으며⁹⁾, 이에 「경비업법」개정을 통하여 경비원에 대한 전문적인지도 교육

6) 2001년 7월 20일부터 시작된 축제 중 하루가 지난 21일 아사기리역에서 해변 방면으로 설치된 육교에 많은 수의 사람이 몰려 혼잡사건이 발생, 11명이 사망하고 24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 花火大会事故 市民感覚が一石 産経関西 2010年1月28日

7) 第155回国会 内閣委員会 第3号 平成十四年十一月一日 (金曜日)

8) 改正 平成16年 5月26日号外法律第50号 (第三次改正)

체제의 충실을 통한 고객의 요구에 잘 부응 경비 업무의 실현, 또한 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특정 유형의 경비 업무에 검정 합격자 배치 의무화에 따른 적정하고 충실한 업무 수행, 또한 계약시 서면 교부 의무 및 불만 해결의 노력 의무의 법적 의한 의뢰자의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비 업무 중 테러 행위의 대상이되는 중요 시설 경비 또는 고속도로에서 교통 유도 경비 등 그 실시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요하고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 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특정 유형의 경비 업무에 대해서는 시험 합격자의 배치를 의무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⁰⁾. 배치 비율에 대해서는 “향후 대상 경비 업무의 실태 및 검정 합격자를 감안하여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2005년 「경비업법」 개정에 따라 각 도도부 현 공안위원회에 의해 경비원의 배치 기준이 결정되어 경비원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경비원 검정은 개정 「경비업법」 및 2005년 11월 18일 「국가 공안위원회 규칙」 제 20호 「경비원 등의 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 '교통 유도 경비, 귀중품 운반 경비, 공항 보안 경비, 시설 경비(상주경비에서 개칭), 핵연료 물질 등 위험물 운반 경비, 혼잡 경비의 6 종류가 있다. 검정은 1급과 2급이 있으며, 2급 시험은 성별, 학력 등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1급 시험은 2급 합격 후 1년 이상 당해 경비 업무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¹¹⁾.

또한 경비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도교육책임자 제도가 경비업무 별로 구분 별 자격으로 분할되어 선임·배치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4. 경비업 분야의 확대와 보안플래너, 보안컨설턴트 제도의 추진

2005년 3차 「경비업법」이 시행된 뒤 2009년 혼잡경비업무에 대한 의무배치가 추가되면서 경비원검정-의무배치를 통하여 검증된 경비원에 대하여 특정 민간경비활동과 장소에 의무적으로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민간경비체계가 갖추어졌으며,

9) 第159回国会 内閣委員会 第13号 平成十六年五月十八日 (火曜日)

10) 第159回国会 内閣委員会 第13号 平成十六年五月十八日 (火曜日)

11) 警備員検定等に関する規則 第18条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에서는 2010년부터 보안플래너, 2012년부터 보안 컨설턴트라는 민간자격을 통해 방범·방재, 경비, 소방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합리적 대책 수립, 실행을 통한 위험감소와 공공안전에 기여하는 안전전문가 자격제도를 추진하고 있다¹²⁾. 이 제도는 경비업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다방면의 전문가와 함께 고객의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한다는 점에서 경비업무를 기반으로 포괄적 안전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경비원(1급, 2급)-보안플래너-보안컨설턴트의 보안 자격증을 등급화 하여 상위자격으로서 계층화된 자격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향후 일본의 민간경비 자격제도를 갖추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안 플래너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에 한하여 ‘보안 플래너 미팅’을 개최하고, 저명인사 강연을 청강받거나 의견을 교류하는 등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로봇, 드론을 통한 민간경비업무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쿄 2020올림픽 대회의 준비 등 경비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업의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경찰청 주관으로 경비협회와 올림픽조직위원회, 학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구 감소 시대의 경비 업무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지식인 검토회’를 개최하고 ①ICT, IoT, 로봇 등 기술의 활용에 의한 경비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도입, 검정 합격 경비원의 배치 기준의 재검토와 ②대규모 이벤트에서 경비원과 이벤트 직원 및 자원 봉사자와의 연계, ③경비원 교육·검정의 합리화, ④중소 경비 업체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¹³⁾.

12) 일본 전국경비업협회(<http://www.ajssa.or.jp/>)

13) 平成30年4月, ‘人口減少時代における警備業務の在り方に関する報告書’, 人口減少時代における警備業務の在り方に関する有識者検討会,

Ⅲ. 한국 경비업의 동향

1. 경비업법의 제정과 배경

한국의 민간경비업은 1960년대 미군의 용역경비를 담당하면서 시작되었다. 60년대 초 범아실업공사가 한미합작으로 설립된 한국석유정장의 저유시설 경비를 도급 받았는데, 당시에는 법적인 토대 아래에서 경비가 시작되었다기 보다는 자체적인 경비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1962년 주요 사업장에서 경비를 필요로 함에 따라 청원주의 요청으로 민간에서 경찰관을 채용·임명하는 「청원경찰법」이라는 독특한 체계의 경비 서비스가 실시되었으며,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을 통해 현재 민간경비산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2. 민간경비의 양적 성장과 경비지도사 제도, 새로운 경비업무의 도입

경비업법의 제정 이후 1980년대에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과 같은 국제스포츠 행사를 거치면서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1977년부터 신규채용된 경비원은 근무배치전에 신입교육을 받도록 하여 경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⁴⁾. 경비원의 교육은 ‘용역경비협회’에서 담당하였으며, 이후 보수교육은 용역경비업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월 4시간 이상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경비원의 교육훈련 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995년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신설하였다.

경비지도사 제도는 일본에서 1982년 시행된 지도교육책임자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써 시험에 합격한 후 내무부령(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교육을 받아 경비업체에서 경비원의 지도·교육·감독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경비협회의 위탁을 받아 경비업체에서 신입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1995년 그동안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던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신변보호업무를 용역경비업의 한 분야로 추가하였으며¹⁵⁾, 국

14)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 [시행 1977. 11. 22.] [내무부령 제242호, 1977. 11. 22., 제정]

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 업무를 추가하고, 기계경비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기계경비업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기계경비업자의 신속대응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산업의 요구에 따라 2001년 기계경비업무가 경비업의 종류로 추가되었다¹⁵⁾.

3. 경비협회의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위탁제도의 폐지와 전환

경비지도사 제도의 도입 이후에는 경비업자가 경비협회의 위탁을 받아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전문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2006년 2월 2일 행정자치부령 제318호 「경비업법시행규칙」에 따라 경비협회가 경비업자에게 교육을 위임할 수 있는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고, 경찰청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형태로 전환하여 경비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¹⁷⁾.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 민간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과목과 시간, 일정 시설과 장비, 교육체계를 갖춘 기관에서 민간경비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교육기관 승인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부터 신입경비교육에 경비업무별 교육과목을 도입하였다.

경비협회에서는 2008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신변보호사라는 검정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경찰청의 인가를 받아 국가공인자격으로 신변보호 전문가의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4. 경비원의 휴대장비 규정과 집단민원현장의 도입

2011년과 2012년에는 회사측에서 노조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경비업체를 선임, 경비원에게 불법적인 장비와 도구를 지급하고 폭력을 사용하게 한 유성기업사태¹⁸⁾, SJM사태¹⁹⁾가 일어나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에 대

15) 용역경비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24호, 1995. 12. 30., 일부개정]

16) 경비업법 [시행 2015. 10. 21.] [법률 제13397호, 2015. 7. 20., 일부개정]

17)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6. 2. 5.] [행정자치부령 제318호, 2006. 2. 2., 일부개정]

18) 2011년 6월22일 발생한 유성기업사태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업체(CJ시큐리티 소속) 용역 직원들이 쇠파이프와 죽창을 들고 조합원들을 공격한 사건. 한겨레, 용역은 쇠파이프로 때리고 고꾸라지자 밟아댔다, 2011-06-23

한 문제로 노조원과 경비원 간의 무력충돌이나 무자격의 경비원 동원으로 인한 폭력 사태 등으로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경비업의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경비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도구사용을 제한하는 경비원의 휴대장비에 대한 규정 신설, 경비지도사 배치, 경비원 배치요건 강화, 경찰관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²⁰⁾²¹⁾.

IV. 한국과 일본 민간경비산업의 비교와 발전방안

1. 시대적 구분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을 시대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과 일본 모두 현대 경비업의 시작이 196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만국박람회를 인한 민간경비산업의 양적성장 이후 경비업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1970년대 경비업법의 제정 이후에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으로 법 제정 이후에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시기적 차이를 보였으나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과 법 제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특징을 나타냈다.

이처럼 양국의 민간경비산업은 동일한 경험과 시기에 민간경비산업의 성장과 법적 제정이라는 측면에서 다수의 경비업체와 경비원의 관리적 측면에 있어 불법, 편법적 경비업체의 운영과 경비원의 동원이라는 공통적인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문제해결 및 경비업체와 경비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관리를 위해 양국 모두 경비업체의 경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업체에 대한 요건강화를 실시하고, 일본의 1982년 지도교육책임자 제도와 경비원 검정제도(자격증)를 도입과 한국의 1995년 경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19) 2012년 7월 28일 발생한 SJM사태는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자동차업체 부품업체인 SJM공장에 200명이 넘는 경비업체 '컨택터스' 경비직원들이 들이닥쳐 농성 중이던 조합원 150명을 폭력으로 몰아낸 사건이다. 프레시안, '폭력 업체' 컨택터스, 알고보니 군사조직 방불 충격 2012.07.30

20) 경비업법 [시행 2014. 6. 8.] [법률 제11872호, 2013. 6. 7., 일부개정]

21)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6. 8.] [안전행정부령 제72호, 2014. 6. 5., 일부개정]

〈표 1〉 한·일 민간경비업의 시대적 구분

구분	한국	일본
1960년대	경비업 태동(1960~)	경비업 태동(1960~)
1970년대	경비업법 제정(1976)	양적 성장(1964올림픽, 1970만국박람회)
		경비업법 제정(1972)
1980년대	양적 성장(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지도교육책임자제도 도입(1982)
		경비원 검정제도 도입(1986)
1990년대	경비지도사 제도 도입(1995) 신변보호 업무 추가(1995)	-
2000년대	특수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추가(2001)	혼잡경비업무 추가(2005) 경비원 배치기준 도입(2005) 경비업무별 지도교육책임자 선임(2005)
2010년대	집단민원현장 도입(2014)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도입(2016)	보안플래너 자격제도 도입(2010) 보안컨설턴트 자격제도 도입(2012)

2000년대 이후에는 사건과 사고, 산업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경비업무의 도입이 이루어졌으나, 일본의 경우 1980년대 도입되었던 경비원 검정제도와 지도교육책임자 제도에 대한 법적 개정을 통해 교육과 자격에 대한 강화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은 경비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 추진의 일환으로 경비협회가 주관하여 신변보호사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통합적인 경비·보안서비스 자격제도인 보안플래너와 그 상위 자격인 보안컨설턴트 자격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을 겪은 두 국가는 경비업체와 경비원에 대한 지도·교육·감독활동의 필요성을 직면하고, 각각 지도교육책임자 제도와 경비지도사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을 볼 때, 1960~90년대 양국의 민간경비산업 동향은 법 제정 이전과 이후에 대한 시기적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문제에 대해 동일한 법·제도적 해법을 도입하였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경비원 자체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비원 검정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원의 자체적인 질적 향상기회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일본에 비해, 한국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경비원에 대한 검정제도가 없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이 검정제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비업무였던 혼잡경비업무의 도입과 함께 교육훈련-검정제도라는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앞으로의 경비업무 도입 시에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민간경비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했던 반면, 한국의 경우 검정제도가 없고 경비업무별 구분 없이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동일한 신임·직무 교육만을 시행하고 있어 경비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제도적 구분

한·일 민간경비업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 대상으로 경비업체와 경비원, 고객과 서비스적 측면으로 교육과 자격검정, 현장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상에 따른 구분으로써 경비업체의 불법·편법 운영과 업체설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경비업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였고, 업체에 대한 처벌과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강화와 폭력단 및 불법적 경비원 운영, 동원을 통한 폭력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해당 업체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였다.

고객의 경우 경비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범위, 책임,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일본에서는 경비업체 서비스 서면교부 의무화를 제도화 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기계경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계경비 설치·운영·관리사항 설명 및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타 경비업과 경비업체, 서비스적 측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고객이 경비업체를 선택하는데 있어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비교적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적 측면에서 교육에 있어 경비업체 관리·감독·교육훈련 미흡에 대하여 한·일 양국 모두 교육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경비업무별 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선임하도록 하여 보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일반경비 지도사가 5개의 경비업무 중 4개의 경비업에 대한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전문성 강화와 교육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검정의 경우 경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일본은 업무별 경비원 검정제도를 시행하고, 최근 통합적 보안전문자격의 검정을 위한 보안플래너와 보안컨설턴트 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경비원 검정제도의 일종인 신변보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부분적인 검정제도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표 2〉 한·일 민간경비업의 제도적 구분

구분	원인 및 문제점	해결방안	
		한국	일본
경비 업체	불법·편법운영 및 업체설립	신고제 → 허가제	
		처벌 및 임원의 결격사유강화	
경비원	폭력단 및 불법 경비원 동원	경비원의 결격사유	
고객	경비업무의 책임과 범위, 고객의 편의	기계경비 설치·운영·관리사항 설명 및 교부	경비업체 서비스 서면교부 의무화
교육	경비업체 관리·감독·교육훈 련 미흡	교육관리자 제도 도입 (경비지도사)	교육관리자 제도 도입 (지도교육책임자)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	업무별 교육관리자 선임의무 강화
자격 검정	경비원의 전문성 부족	신변보호사제도 도입	경비원 검정제도 도입
			보안플래너, 보안컨설턴트제도 도입
현장관리	현장관리 강화	집단민원현장 도입	경비원 의무배치제도 도입

또한 현장관리 강화의 측면에서 한국은 2014년 집단민원현장을 도입하여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도록 하고, 경비업법에 따라 48시간 이전에 집단민원현장 배치신고를 받도록 하여 경비원에 대한 폭력과 불법적 경비원 동원을 규제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혼잡경비라는 경비업의 추가와 더불어 현장전문가로서 1급, 2급 경비원에 대하여 구역별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강화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3. 시사점

일본은 시설(1호), 교통 및 혼잡(2호), 호송(3호), 신변보호(4호)의 경비업무를 구분하여 경비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분된 경비업무에 관하여 지도교육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교육·지도사항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지닌 지도자가 경비원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새로운 경비업무에 대한

검정제도와 의무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경비업무의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한 경비업무 시스템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1년 발생한 축제에서의 혼잡사고로 인하여 2005년 새로운 경비업무인 혼잡경비업무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경비업무에서 규정하지 못한 행사장에서 의 ‘혼잡상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민간경비원이 혼잡경비의 안전을 담당하여 안전관리·업무수행을 실시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도 SJM, 유성기업사태 등과 을 통해 공연·행사장에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공연법을 개정하였으나 경비업법과는 별개로 공연법에 의해 해당 안전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 경우 공연운영자 등은 일정 기준에 따라 공연장에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교육의 주체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써 ‘공연 안전’이라는 새로운 안전개념의 도입과 경비분야와는 별개로써 안전활동 시스템을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경비업법에서 정하는 집단민원현장에 따라 해당되는 공연·행사장의 경우 민간경비인력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개별법에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공연장 안전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관리가 가능케 했다는 점은 ‘안전활동의 주체’로써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민간경비가 업무를 담당·수행한다기 보다는 공연법에서 정하는 관리자에 의해 정해진 업무만 담당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는다.

물론 개별법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 할 경우 민간경비원 또한 안전총괄책임자나 안전관리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들이 ‘공연’을 목적으로 부수적인 ‘안전’에 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맡는다는 것은 ‘안전’을 목적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업과의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남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안전관리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는 분야별, 업무별 구분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그 총괄적인 역할은 안전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경비업’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나온 문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로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실제 공연·행사장 안전을 수행하는 주체는 민간경비인력으로, 이들은 경비업법에 의한 24

시간의 신입교육이수 후 배치되는 안전인력으로 공연장에 대한 특성과 위험요소를 인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 없고, 오직 경험과 관리자의 지도사항에 대한 사항만으로 공연·행사장 안전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분야의 안전업무에 대한 수요에 따라 분야·업무별 개별법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행사업무를 경비업무에 추가하여 업무의 특수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안전이라는 공통적 목적을 가진 유사직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안전관리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업이 그 주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이 추가되는 안전업무에 따라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각 부처 및 안전관련분야의 충돌이나 갈등, 그리고 나아가 민간경비업의 존폐가 달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이 집단민원현장을 통해 경비업무의 일부로 일본의 민간경비원 의무배치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적 도입을 실시하였으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일부 개정이 있었을 뿐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개선된 사항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제고와 민간경비원 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재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시스템과 경비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국내 경비업무에 대한 조사와 분류, 유사 안전업무를 통합한 경비업무 개선과 ②해당 경비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인력에 대한 적합한 교육훈련과정 개설 ③전문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업무별 지도사 제도 도입과 민간경비원 교육체계 확립을 이루어 민간경비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관리체계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인식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앞으로 민간경비가 안전산업의 주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경비산업은 검정제도와 의무배치, 새로운 안전분야에 대한 주체로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관인 경찰과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성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경비와 더불어 소방·방재, 기계경비 분야 등 다양한 업무들에 대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일본 전국경비협회등이 주도하여 ‘보안플래너 과정’을 개설하고, 이후 보안플래너의 상위 자격인 보안컨설턴트 자격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플래너, 보안컨설턴트 자격제도를 도입은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과거 민간경비관련 장비, 관리, 안전서비스 제공 등이 각각의 분리된 역할을 수행해온 것과는 달리, 규모가 하여 소수의 업체가 출입통제, CCTV, 출동경비서비스 등을 생산·제공하는 관련업체를 인수하는 등 생산, 관리,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기반의 확대와 맞물려 기계경비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민간 경비인력과 기계를 혼합한 혼합경비 형태가 나타난 2000년대부터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점차 수많은 분야에서 통합적 안전시스템을 모델로 고객에게 다양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적 환경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특히 테러·재난·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등장함에 따라 광범위하고 새로운 예방·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한 국가,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일본은 점차 안전관리분야의 통합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 동향에 맞추어 발 빠르게 이를 대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비업이 그 주체가 되어 안전산업에 대비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합적인 안전관리자의 필요로 인해 최근 ‘산업보안’, ‘융합보안’이라는 용어로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에 대한 통합관리자의 양성에 대한 논의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추세에 맞추어 움직임은 있으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장먼저 국내 안전관련 법·제도적 통합의 노력과 더불어 관련 연구, 산업에 대한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업체들의 노력과 홍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검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향에 맞춘 포괄적, 통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비슷한 시기와 유사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와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운영·관리의 문제점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에는 실패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발판삼아 미래에 직면하게 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해 산·학·관의 협력을 통해 앞서 제시된 전문성 확보, 안전관련분야의 주체적 역할 수행을 기반으로 한 통합체계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박정원 (2002). 한일 경비업법 변천 법제도의 연구 : 교육시스템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석, 정석현, 조창용 (2004). 한일 민간 경호·경비 교육훈련의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15(1).
- 박동균, 박기범 (2012). 일본 민간경비 산업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2), pp.99-127.
- 박준석 (2008). 한국민간경비보안시장 영역확대의 과제와 전망. 2008년 제12회 한국민간경비학회 정기학술세미나집, pp.7-37.
- 박성수 (2017). 민간경비교육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6(3), pp.105-132.
- 김동희, 김태환 (2015). 국내외민간경비교육훈련제도.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 2015(11), pp.307-310.
- 최은하, 유영재, 이상빈 (2008).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16, pp.357-371.
- 허경미, 박영주 (2007).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13, pp.529-550.
- 이상원 (2005).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7, pp.1-34.
- 박장규, 김남중 (2013). 한국 민간경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13(5), pp.117-127.
- 백석기, 이성진 (2011). 경비지도사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crisisonomy, 7(3), pp.87-108.
- 김태민, 강영길 (2009). 한국경비원관리자제도의 발전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6(1), pp.156-175.
- 조용철, 김순석 (2008).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 및 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16, pp.339-356.

- 이상철, 안성조 (2008).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 시큐리티연구, 15, pp.243-264.
- 조용철 (2007). 외국 민간경비원의 자격증제도에 관한 연구:미국과 일본의 시큐리티 자격시험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0, pp.133-152.
- 박준석, 홍준혁 (2006). 민간경호·경비관련 전문자격 제도 도입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7, pp.121-162.
- 박준석, 박대우 (2004). 한국민간경호, 경비관련자격제도 도입방안. 시큐리티연구, 7, pp.191-212.

2. 기타자료

- 警備員教育敎本 基本教育編 (新訂版), 一般社団法人 全国警備業協會
『大捜査3億円事件』(読売新聞社会部編 1975年
第096回国会 地方行政委員会 第15号 昭和五十七年四月二十二日(木曜日)
第155回国会 内閣委員会 第3号 平成十四年十一月一日(金曜日)
第159回国会 内閣委員会 第13号 平成十六年五月十八日(火曜日)
第159回国会 内閣委員会 第13号 平成十六年五月十八日(火曜日)
改正 昭和57年 7月16日号外法律第67号 [第一次改正]
改正 平成16年 5月26日号外法律第50号 [第三次改正]
花火大会事故 市民感覚が一石 産経関西 2010年1月28日
警備員検定等に関する規則 第18条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 [시행 1977. 11. 22.] [내무부령 제242호, 1977. 11. 22., 제정]
용역경비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24호, 1995. 12. 30., 일부개정]
경비업법 [시행 2015. 10. 21.] [법률 제13397호, 2015. 7. 20., 일부개정]
경비업법 [시행 2014. 6. 8.] [법률 제11872호, 2013. 6. 7., 일부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6. 8.] [안전행정부령 제72호, 2014. 6. 5., 일부개정]
경비업법 [시행 2016. 1. 26.] [법률 제13814호, 2016. 1. 26., 일부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6. 2. 5.] [행정자치부령 제318호, 2006. 2. 2., 일부개정]
일본 전국경비업협회(<http://www.ajssa.or.jp/>)
한겨레, 용역은 쇠파이프로 때리고 고꾸라지자 밟아댔다, 2011-06-23
프레시안, '폭력 업체' 컨택터스, 알고보니 군사조직 방불 충격 2012.07.30
연합뉴스, 안전장치 없는 '죽음의 환풍구' 붕괴사고로 27명 사상(종합), 2014.10.17.

【Abstract】

An Analysis of the Trends and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Korean-Japanese Security Industry

Lee, Chi Young^{*} · Park, Jun Seok · Kwon, Hyuck Bin

In the case of the Japanese security industry, the government is continuing its efforts to solve various problems that have emerg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Security Law in 1972. In particular, such a system may have much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nation's civil security industry system. Therefore,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day, we examined the trends of the security industries of Korea and Japan and drew their implications in order to explore the development direction that Korea's private security industry should move forward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data such as relevant laws and systems, books, academic journals, news and parliamentary minutes.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qualification screening system to secure expertise in private expenses in order to develop Korea's private security industry. Second, it is time for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make efforts to play a major role in safety management work in order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change the public perception.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ystem is essential.

Key Words: Private security, Korean private security, Japanese private security, Trends of private security, Private security industries

*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Researcher(The 1st Author)

** Yongin University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Professorr(The Corresponding Author)

***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Researcher(The Co-Author)

부 록

-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투고 · 심사 및 발행규정 135
- 논문집필요령 141
-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56
-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연구윤리 규정 161
-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표절 규정 177
- 논문투고 일정 178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투고·심사 및 발행규정

2014. 12. 22 제정

제1조 【목적 및 주관】

- ①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영문으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journal 이하 ‘학회지’)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2조 【원고모집】

- ①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명칭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영문으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journal 이하 ‘학회지’)라 하고 원고모집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공고하여 실시한다.
- ② 원고모집과 집필요령 등은 학회홈페이지나 학회지 등의 적정한 방식을 통해 회원들이 공지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제3조 【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

- ①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회칙상의 연구범위로 규정된 “1.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테러 분야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테러분야와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이면서 영역에 속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논문집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 ③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은 게재출처를 밝히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자격 및 접수】

- ①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복수의 투고자 일 경우 투고자 모두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② 논문 투고 시 단독저자 1편, 공동저자 1편으로 총 2편으로 편수가 제한되며, 투고된 논문은 학회에 소속되며 연구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③ 접수 마감일은 매회 동일하며 논문 투고 후 심사료를 납부한 날로 한다. 접수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호로 연기된다.
- ④ 온라인으로 논문 원본 파일을 논문게재신청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접수한다. 투고자의 소속이 외국 소재일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원고는 본 학회 “논문집필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위해 투고자에게 반려한다(단, 이 경우 반환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날을 논문 접수일로 한다).
- ⑥ 긴급논문투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5조 【학회지 발행일】

- ① 학회지의 발행은 연2회 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6조 【게재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후에 제출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제7조 【인쇄와 발송】

위원장은 편집방향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발송 절차를 밟는다.

제8조 【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기 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관례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1. 논문제목:
2. 게재예정지: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 제00호(2000년 0월 00일 발행예정)
3. 세부심사결과(해당란에 O표하고 점수란에 점수 기재)

평가기준	등급기준	매우 미흡	다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점수	0 ~ 4	5 ~ 8	9 ~ 12	13~16	17~20	
① 연구목적의 적절성과 명료성							
② 연구 방법의 적절성							
③ 내용 전개의 논리성							
④ 연구 내용의 독창성							
⑤ 학문적 기여도와 유용성							
총점 [/100] 점							

※ 각 평가기준별 ‘다소 미흡’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불가

4. 종합판정(총점을 근거하여 판정)

구분 (점수)	게재 확정 (91-100)	수정후 게재 (81-90)	수정후 재심사 (71-80)	게재불가 (0 ~ 70)
해당란에 O표시				

5. 심사위원 인적 사항

- 소속/직위:
- 성명:
- 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0 / 예금주 ○○○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귀하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논문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논문제목								
심사결과	게재 확정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별첨 2]

학회지 발간 절차 및 처리기간

(※ 총 처리 누적기간: 70일 이내)

절 차	처리기간	누적처리기간
원고심사배정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		
심 사 의뢰	송부기간 5일	접수마감 후 14일 이내
↓		
심 사	심사기간 2주일	
↓		
심사결과접수	회송기간 5일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
↓		
게재여부결정	3일	접수마감 후 33일 이내
↓		
1차수정지시	7일	접수마감 후 40일 이내
↓		
수정원고접수	7일	접수마감 후 55일 이내
↓		
2차수정지시	3일	접수마감 후 60일 이내
↓		
수정원고접수	3일	접수마감 후 67일 이내

※ 2차 수정지시가 없는 경우 바로 발간절차 진행

논문집필요령

I. 논문형식

1. 논문의 틀

- 1)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장만 표기),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키워드 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 2)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영문), 저자이름(국문·영문), 저자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처, E-mail 주소 등을 명기하여 첨부한다.
- 3) 원고 작성은 한글프로그램(1997버전 이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편집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1) 원고의 작성은 A4 용지를 사용하며, 폭: 184mm, 길이: 265mm, 용지방향: 좁게, 제책: 한쪽(1)으로 한다.
 - (2) 여백의 크기는 위: 35.0mm, 아래: 20.0mm, 왼쪽: 33.5mm, 오른쪽: 33.5mm, 머리말: 15.0mm, 꼬리말: 13.0mm, 제본: 0.0mm로 한다.
- 4) 국문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매로 하며, 영문 원고는 국문 원고에 준한다. 20매를 원칙으로 하되, 25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원고의 편집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아래 논문의 요소별 편집에 따른다.

2. 논문의 요소별 편집

- 1) 논문의 제목
 - (1) 글자체는 진한 고딕체(15.0pt)로 지면 가운데 작성한다.
 - (2) 논문제목의 부제를 달 경우에는 앞의 글자에 콜론을 붙여서 쓰되, 뒷글자와는 한 칸을 띄우고 사용한다.
- 2) 저자명과 소속
 - (1) 저자명은 제목 아래 고딕체(11.0pt)로 기술하며 지면의 오른쪽에 위치시킨다. 저자가 복수인 경우 이름간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한다.

- (2) 저자명 뒤에는 ‘*’ 표시를 하여 동일한 지면 하단에 저자의 소속의 각주 형태(신명조체, 9.0pt)로 제시한다. 저자가 복수인 경우 저자의 순서대로 ‘*’ 표시(두 번째 저자명 뒤 ‘**’ 표시, 세 번째 저자명 뒤 ‘***’ 표시)를 한다.
 - (3) 저자가 복수인 경우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제1저자를 가장 먼저 제시하며 그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차례대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순).
- 3) 요약 및 주제어
- (1) 저자명에서 한 줄 간격을 두고 ‘국문초록’이라는 제목을 가운데 신명조체(13.0pt)로 작성하여 괄호([]) 안에 위치시킨다.
 - (2) 요약의 내용은 논문의 내용을 압축하여 신명조체(10.0pt)로 150단어(600자) 안팎의 길이로 작성한다.
 - (3) 국문초록의 첫머리에는 들여쓰기를 한다.
 - (4) 주제어는 고딕체(10.0pt)로 요약내용과 한 줄 간격을 띄워 작성한다.
 - (5) 국·영문 요약 주제어(Key Words)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한다.
- 4) 목차
- (1) 목차는 저자명 아래 위치시키며, 도표를 작성하여 기술한다.
 - (2) ‘목 차’라는 제목을 가운데 고딕체(11.0pt)로 작성한다.
 - (3) 목차의 내용은 로마 목차만을 신명조체(10.0pt)로 기술하며 들여쓰기를 한다.
- 5) 본문
-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고딕체, 14.0pt), 1(고딕체, 12.0pt), 1)(고딕체, 11.0pt), (1)(고딕체, 11.0pt), ①(고딕체, 11.0pt), 가)(고딕체, 11.0pt)의 순서를 따른다.
 - (2) 본문의 내용은 신명조체(10.0pt)로 작성하며 초록의 주요어로부터 페이지를 넘겨 기술하고 들여쓰기를 한다.
- 6) 참고문헌
- 참고문헌을 제시할 때는 ‘참 고 문 헌’이라는 제목을 문단 가운데 고딕체(14.0pt)로 제시하고 참고문헌 내용을 기술한다.
- 7) 영문 요약과 주제어
- (1) 참고문헌을 제시한 뒤에는 영문으로 ‘ABSTRACT’이라는 제목을 문단 가운데 신명조체(13.0pt)로 제시하고 영문 제목(휴먼명조체, 13pt, 진하

제), 저자명(고딕체, 10.0pt), 영문 요약 내용(신명조체, 10.0pt), 주제어(고딕체, 10.0pt)의 순으로 기술한다.

(2) 작성 요령은 국문 초록의 작성 요령과 같다.

8)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9) 논문의 요소별 편집과 관련된 자세한 양식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논문 양식’을 참고한다.

II. 본문에서의 참고 및 인용

1. 일반 문헌의 경우

1) 단독 저자의 연구가 하나만 인용되었을 경우

- 국내 문헌의 경우 성명과 출판연도를 본문 내에 기입한다.

예) 홍길동(2014)은 국가안보란...

- 외국 이름의 경우 동양 저자의 경우에는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하고, 서양 저자는 영어로 성만 표기하고 동양 저자의 이름이라도 영문으로 표기된 연구를 인용했을 때는 저자의 성만 표기한다.

예) 모리아마 타다시(寺山 正, 2012)은...

Moriyama(1999)는...

(1) 인용문헌을 괄호 안에 표기하기

- 저자의 이름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을 경우 문장 끝에 성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한다.

예) ...라고 주장하였다(홍길동, 2013).

...이기 때문이다(Samuel, 2013).

(2) 문헌의 부분 인용

- 저자명을 본문 중에 언급하지 않고 저자의 특정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할 때 인용한 특정 자료와 출판 연도를 구분하기 위해 출판연도 뒤에 자료를 제시한다.

예) ...을 밝혀냈다(홍길동, 김길동, 2010: 표 1 참조).

...을 밝혀냈다(Adams, Smith, & Harrison, 1999: 표 1 참조).

- (3) 본문 중에 저자명과 출판연도가 모두 쓰였을 경우
예) 1970년 Bruden은...
- (4) 한 단락에서 같은 연구가 반복된 인용된 경우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같은 참고 문헌의 출판년도는 반복해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예) Sigmund(2009)은 ...라고 주장했다. 또한 Sigmund은 ...라고 하였다.
- 2) 여러 저자들이 수행한 연구를 인용하였을 경우
- (1)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
-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두 저자명을 모두 제시
 - 본문 중에 저자명이 언급되지 않고 문장 끝 괄호 안으로 처리했을 때 한국문헌과 동양문헌의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문헌의 경우 ‘&’를 사용한다.
- 예) 홍길동과 김길동(2011)는...
Steven와 Trueman(1998)는...
...라고 주장하였다(홍길동, 김길동, 2011; Steven & Trueman, 1995).
- (2) 셋 이상 여섯 명 미만의 저자가 수행한 연구
- 처음 인용할 때는 모든 연구자의 성명을 표시하되, 각 이름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문헌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열거되는 저자명 앞에 ‘&’를 삽입한다.
 -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만 적고 공동 저자명은 생략하고 “등” 혹은 “외”로 표시한다.
- 예) [첫 인용]
...을 분석한 연구에서는(김길동, 홍길동, 이길동, 2005)..
Stevens, Green, Taylor와 Guanberg(2010) 등은...
- 예) [같은 연구일 경우, 두 번째 인용]
김길동 등(2008)의 연구 결과..
Stevens 등(2010)은...
- (3) 여섯 명 이상의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
- 처음 인용 때부터 첫 저자명만 쓰고 첫 저자명 다음에 “등” 혹은 “외”라고 표기한다.
 - 다만 6인 이상의 연구에 첫 번째 저자명이 동일한 다른 문헌이 인용되

어 서로 다른 문헌임을 구분해야 할 경우 두 문헌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만큼까지 뒤에 따르는 저자명을 표기한 다음 “등” 혹은 “외”라고 표기한다.

예) 김길동, 홍길동 등(2008)의 주장처럼...

예) 최근의 연구(김길동, 홍길동 외, 2012)에서...

예) Kants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예) 최근의 연구(Kants et al., 2009)에 의하면...

3) 동명 저자에 의한 복수 연구물의 경우

- 동명 저자(들)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 저자명 뒤 표기된 출판연도로 별개 연구임을 구별한다.

-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저자의 성 앞에 머리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김길동(1998)과 홍길동 외(2000)의 연구에서...

예) 김길동 등(2000)과 홍길동 등(2002)의 연구에서...

예) C. S. Louis(2011)와 G. A. Center(2009)의 연구에서...

4) 저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기관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완전한 기관명을 밝힌다.

- 기관이나 단체명을 축약어로 표기해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때에는 두 번째 인용부터 축약어로 표기해도 된다.

예) [본문에서 인용할 때]

최근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의하면...

외국의 연구(American Society for National Security, 2012)에 의하면...

예) [두번째 인용부터 축약어를 사용할 때]

형정원의(201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국 연구(TIIC, 2014)에 의하면...

5) 저자가 없거나 익명인 경우

- 연구자가 없는 연구를 인용할 경우 저자명 대신 연구를 지칭할 수 있는 두세 단어(보통은 제목의 시작부분)를 저자명으로 취급한다.

예) “한국 국가안보의 태동”(익명, 1980)에서...

“Private Security”(anonymous, 1990)에서는...

예) ...라고 해석하였다(“한국 국가안보의 태동”(익명), 1980).

...라는 주장(“*National Security*”(anonymous), 1990)에서는...

- 판례나 법령과 같은 법률 자료도 저자가 없는 인용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법령의 이름이나, 판례의 표기방식에 따라 표기하고 연도를 기록한다.

예) 국가안전보장회의법(법률 제12224호, 2014.01.10)에서...

6) 개인 서신

- 편지나 메모, 전화, 전자우편이나 전자매체를 통한 대화가 인용의 출처일 경우를 말한다.
- 개인적 서신은 재사용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전자매체(electronic media)로부터 얻은 정보와 같이 재생 가능한 정보의 출처는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한다.

예) (홍길동 2012, 9, 13, 개인 서신)

(Taylor, 2007, 4, 22, personal communication)

2. 재인용, 번역서, 및 부분인용

1) 재인용

- 다른 연구의 인용 방법과 같으나, 본문에 인용할 때는 원전(저자명과 출판년도)과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 저자명이 본문에 제시될 경우 원전의 출판연도 뒤에 콜론을 한 후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예) 홍길동(2008: 김길동, 2005에서 재인용)은...

...을 제시하였다(Steven, 2008: 김길동, 2007: 174에서 재인용).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Louis, 1977: Kants, 1976에서 재인용).

2) 번역서

- 원전의 저자명을 적고 십표를 한 후 원전의 출판연도와 번역서의 출판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제시한다.

예) 국가안보 인식개선방법에 대하여 Kalman(1988/2011)은...

...라고 하였다(Kalman, 1988/2011).

3) 문헌의 특정 부분을 직접 인용한 경우

- 다른 문헌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삽입할 때는 인용 출처의 쪽수 혹은 장

(章)을 표시한다.

- 장(章)은 ‘장’(혹은 ‘chap.’)로 표기하고, 쪽수는 연도 다음 콜론(:) 표시를 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학술지 권수는 축약어 Vol.로 표기하고 권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원전 제목 속에 로마 숫자로 사용된 경우 그대로 사용한다.

예) (홍길동, 2012: 2장)

(김길동, 2009: 15)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Vol. 4: 44-52)

(Kai, 2012: chap. 4)

(Lion & Rush, 1996: 234)

3. 한 괄호 안에 두 편 이상의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의 표기 순서

1) 동일 저자의 연구

- 출판연도 순으로 오래된 것부터 배열한다. 이 때 저자명은 한번만 기입하고 출판연도만 기입하면 된다.
- 출판연도까지 동일한 경우 제목의 가나다라 순서로(영문의 경우 알파벳 순서) 출판연도 뒤에 소문자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예) 선행 연구들(홍길동, 2005, 2011)에서...

선행 연구들(Paker & Rowl, 1998, 2001)에서...

최근 연구(홍길동, 2008a, 2008b)에서는...

2)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저자명의 가나다라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쓰고 연구와 연구 사이에 세미콜론을 찍어 구분한다.
- 다른 연구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한 연구에서 주로 인용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고자 할 때 맨 앞에 주된 문헌을 인용하고 “또한”이란 용어로 부수적인 문헌을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예) 여러 연구(홍길동, 2011; 김길동, 2012)에서는...

여러 연구자(Rawl, 2011; Steven, 2008; Troy, 2010)들은...

...라고 주장하였다(Hans, 2005; 또한 Harryson, 2008; John, 2010)

- 3) 국내와 동서양 문헌이 모두 포함된 경우
 - 국내문헌, 동양문헌(국가명의 알파벳 순), 서양문헌의 저자순으로 나열한다.

III. 참고문헌

1. 참고 문헌 제시 순서

- 참고문헌의 제시 순서는 표기 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출판물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 출판물을 제시한다.
- 외국 출판물은 동양 문헌(알파벳 순) 다음 서양 문헌 순서로 제시한다.

2. 참고 문헌 표기

- 참고문헌 목록에는 제일 먼저 저자명을 적고 한 칸 띄우고, 괄호 안에 출판연도를 쓴 후 마침표를 한다. 저서의 경우는 한 칸 띄운 다음 책이름(고딕체, 영문은 이탤릭체)을 적고 마침표를 하고서 출판 장소와 출판사를 콜론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 학술지 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출판연도, 연구제목, 학술지명, 게재권(호), 쪽수를 적는다. 학술지명과 게재권(호)는 중고딕체(영문은 이탤릭체)로 적는다.
- 참고문헌이 두 줄 이상이 되는 경우, 두 번째 줄부터는 네 칸 들여쓰기를 한다.
예) 홍길동 (2014). 국가안보론. 서울: 진영사.

Paul, M. D., & Kal, C. A. (1999). *Introduction to National security*, New York : West Publishing.

김길동 (2010). 안전관리사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Michael, D. R., & Jinhong, Z. (1999). The determinanats of job satisfaction among united states air force security police.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19(3), 5-18.

1) 저자명

(1) 일반적인 표기 순서

- 국내문헌은 완전한 성명으로 성과 이름을 띄어 쓰지 않는다(외자 이름

도 동일). 외국문헌의 경우, 동양문헌은 원어 그대로 표기하며 서양문헌은 연구자의 성을 적고 십표를 한 다음 첫 글자만 대문자로 적고 생략 표시의 마침표를 찍는다.

-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서대로 제시하고, 같은 자음일 경우, 모음 순서를 비교하고 모음도 같은 경우 받침의 자음 순(국어사전 항목 순)으로 제시한다. 글자가 먼저 끝나는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글자가 계속되는 것보다 앞에 둔다.
- 영어문헌의 경우 첫 저자 성의 알파벳 순서대로 제시하고 저자명에 포함된 글자 하나의 알파벳 순서를 비교하여 순서를 매긴다.

(2) 맨 앞에 제시되는 저자명이 같은 경우

- 동일한 저자명의 연구는 단독 연구이건 공동 연구이건 출판연도순으로 출판연도가 빠른 것을 앞에 배열한다.
- 맨 앞 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가 모두 참고 문헌 목록에 포함될 경우, 단독 연구자 성명이 짧기 때문에 공동 연구보다 앞에 배열된다.

(3) 출판 연도까지 동일한 저자의 연구

- 제목의 가나다(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단 A나 The와 같은 관사는 제외시키고 제목의 알파벳을 비교한다.
- 소문자 a, b, c 등을 표기하고 순서대로 제시한다.

예) 홍길동 (2009a), 국가안보...

홍길동 (2009b), 국민안전...

예) Steve, G. T. (1988a). Origins...

Steve, G. T. (1988b). Risk...

(4) 단체나 기관명의 연구

- 연구 단체나 기관명의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되 기관이나 단체의 완전한 이름을 쓴다.

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14, 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 60년사. 서울: 백산출판사.

(5) 익명의 연구나 저자가 없는 경우

- 본문에서 인용한 연구 제목의 두세 단어를 저자명과 같이 취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제시하고 괄호 안에 익

명(영문 Anonymous)이라고 표기한 후 심표를 찍고 출판연도를 적는다.

- 저자가 없는 경우도 연구의 제목을 저자명으로 취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예) 국가안보의 태동은 (익명, 1955). 안보의 태동. 서울: 백산출판사.

예) National Security (Anonymous, 1955), *Introduction to security*, Boston: Butterworth.

2) 출판연도

- 저자명 바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괄호를 쳐서 써넣고 괄호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1) 미출판 된 연구가 인쇄 중일 경우는 괄호 안에 “인쇄중”이라고 표기하고 해당 저자의 맨 마지막 연구로 취급한다.

(2) 현재 심사 중이어서 출판이 확실치 않는 경우 괄호 안에 “심사중”이라고 표기하고 심사 중인 정기 간행물명을 밝힌다.

예) 김길동 (심사중). 국민안전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3) 발표 자료 등으로 만들어졌으나 출판되지 않는 경우 괄호 안에 “미간행”이라고 표기하고, 학술대회 등의 발표 자료라면 학술발표 년, 월, 일을 기입하고 심표를 한 후 미간행임을 표기한다.

예) 김길동 (2010, 5, 3, 미간행). 국가안보 · 국민안전 서비스의 발전 방안.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 프레스센터.

3) 원전의 서지 사항

- 동양과 국내의 학술지명이나 저서명은 중고딕체로, 서양 문헌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영문 제목이나 부제는 시작 단어의 첫 알파벳만을 대문자로 쓴다.

- 참고자료가 책과 같은 통상적인 출처에서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내용을 제목 옆에 대괄호([])를 하고 써 준다.

예) [CD-ROM], [On-Line} 등

(1) 정기 간행물

① 정기 간행물

- 정기 간행물은 간행물의 완전한 이름과 권수를 중고딕체로 쓰고 본문 인용 때의 표기 방식과 달리, 권수 앞에 “Vol.”이란 글씨를 쓰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권수를 적는다. 그리고 권수 번호에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호수를 적고 이어서 쪽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다.

② 대학의 논문집

- 대학의 논문집의 경우 기관지명이 유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행기관을 명시한다.

예) 김길동 (2013). 안전서비스의 효율적 목표달성에 관한 연구. 안전연구, 5(1), 56-87. 안전대학교 일반대학논문집.

③ 신문 기사의 인용

- 사설이나 일반 기자가 쓴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발행일의 연, 월, 일을 괄호로 묶어 쓰고, 기사의 제목과 게재면을 표시한다.

예) 안전일보 (2009, 3, 1). 안전 관리자의 책임. 5면.

- 독자 혹은 특정인의 기고라면, 이 기고자의 이름을 저자로 취급하여, 일반학술지에 실린 문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익명의 기고일 경우는 기사의 제목 두세 단어로 기사 작성자명을 대신한다.

예) 홍길동 (2009, 3, 1). 민간경비원의 책임. 경비일보, 5면.

④ 잡지 같은 정기 간행물

예) 김길동 (2014, 겨울). 범죄의 수사구성, 수사연구, 55-98.

(2) 저서를 포함한 비정기 간행물

① 책, 보고서, 학위논문, 안내서(brochures), 요강(要綱), 시청각 매체 등을 포함해서 정기 간행물이 아닌 자료

예) 이길동 (2010). 민간경비론. 서울: 진영사.

② 논문 하나가 단행본으로 묶여진 긴 논문(monographs)의 경우

예) 저자명. (연도). 논문 제목. 논문집명 권(호), 전 권이 아닌 경우 쪽수 (연속 간행물인 경우는 일련번호).

③ 학위 논문

예) 김길동 (2014). 경호경비 산업의 발전 방안.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④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 발표회 발표 논문

예) 김길동 (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초록집.

김길동(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심포지움 “국가안보의 의미”.

- ⑤ 미간행 발표 자료

예) 홍길동 (2014).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 결산 보고.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차 총회, 12월 22일. 경기대학교 대강당.

- (3) 편집서나 저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의 인용

- 인용한 장(章의) 저자명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적고 마침표를 찍고 장의 제목을 적는다. 그리고 전체 책을 엮은 편집자의 성명을 적고 한 칸 띄고 편집일 경우 ‘편’ 저서일 경우 ‘저’(영어는 편집자명 앞에 “In”을 넣어 시작하고 괄호 안에 ED./편집자가 복수일 경우 Eds.)라고 표시한 후 저서명(중고딕체)을 적고 괄호 안에 해당 쪽수를 적어 넣는다.

예) 한상희 (2006). 경찰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 최응렬 (편). 경찰개혁론 (pp. 5-15). 서울: 법문사.

- ⑥ 역서와 번역서의 경우

예) 원저자명 (번역서 출판년도). 번역서명(중고딕체, 영문은 이탤릭체) (역자명 역/편역). 출판지: 출판사. (원전의 출판년도).

예) Durkheim, E. (2008).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황보종우 역). 파주: 청아출판사. (원전은 1897에 출판).

- ⑦ 초록 문헌의 경우

예) 김길동(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심포지움 “국가안보의 의미”.

- ⑧ 재인용한 자료들의 제시

- 본문에서와 달리 참고 문헌 목록에는 재인용 문헌만을 제시한다.

- ⑨ 논문, 책, 영화, 비디오, TV프로그램 등의 논평 문헌 표기

예) 논평가 성명 (출판연도). 제목 [자료가 기술하고 있는 원자료의 형태

와 제목]. 자료가 실린 서명, 권(호), 페이지.

※ 논평 문헌이 아니라 매체를 직접 인용한 경우

예) 감독 및 제작자의 이름 (역할) (년도). 제목. [원자료 형태] 방영지역
(비디오 경우 출시회사 주소지): 방송사명(비디오 경우 제작사명).

예) 김철민, 조현탁 (감독) (2010). 대물. [TV 연속극] 서울: SBS TV.

(4) 전자 매체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 인용한 내용의 출처가 마이크로 필름이나 시디롬, 온라인 등의 매체일 경우 그 출처 형태와 출처 정보를 표시한다.

예)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main/main.html>,
2014년 12월 22일 검색)

(5) 출판 장소와 출판사

- 저서의 경우 출판 사항에 출판 도시명과 출판사명을 적는다.
- 출판지가 잘 알려진 도시가 아니거나 다른 곳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도시명 다음에 십표를 하고 국가명(미국은 주(州)명을 공식화된 약자로)을 적는다.
- 출판사명은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간단하게 적고 associations, corporations, university press 등은 적되 Publishers, Co., Inc., 등의 불필요한 용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빼다. 그러나 Books와 Press와 같은 고유 명사는 그대로 쓴다.
- 원전의 출판 도시가 하나 이상일 경우 맨 앞에 나와 있는 출판지나 출판사의 본사가 있는 출판 도시를 적는다.

IV. 서 평

1. 서평은 기획서평과 일반서평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편집위원회가 기획하고 후자는 저자 의뢰 혹은 평자 기고로 이루어진다. 저자 의뢰의 경우 서평을 위한 저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후 편집위원회에서 평자를 추천받아 서평을 의뢰한다.
2. 기획서평은 연구서에 대한 비평적 소개를 넘어 연구주제, 참고문헌, 각주 등 논문의 특징을 온전히 갖춘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으로, 심사(可조

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한다.

3. 일반서평은 연구서의 내용 요약, 기여 평가 등 비평적 소개로 참고문헌, 각주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량은 1권당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로, 심사(可否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한다.
4. 서평은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가격, ISBN을 포함한다.

V. 기 타

1. 외래용어 및 외국어

-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 외국 인명과 논문 제목은 원어명은 그대로 표기한다.

2.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예, 표 1, 그림 1), 표 제목(고딕체, 10pt)은 표 위쪽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그림 제목(고딕체, 10pt)은 그림 아래쪽 가운데에 위치시킨다.
- 표의 설명주는 “주: 1), 2), 3)”으로 시작하고(※주: ()은 점유율), 자료 출처는 아래 부분에 밝힌다(※ 자료: Duncan, 1981: 349의 재구성).
- 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 $p < .05$, ** $p < .01$, *** $p < .001$ 과 같이 표기한다.
- 표 작성에서 줄긋기는 가로줄만을 사용하며 세로 테두리선을 쓰지 않는다. 가장 바깥 가로 선은 굵은 선을 쓰고 안쪽 가로선은 가는 선을 사용한다.
- 그림에서는 x축과 y축과 곡선·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 주어야 한다.
- 원고 작성의 편의상 표와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3.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4.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논문집필요령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지침서 (APA) 및 한국심리학회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을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집필요령에 없는 내용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지침서(APA)에 따른다.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4. 12. 22 제정
2019. 3. 2 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4조의 2호에 규정된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 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편집이사로 하며,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②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동의를 거쳐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 ① 편집위원은 전문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부교수 이상의 자나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자로 한다. 단 상임이사회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은 국내 대학의 공식적인 연구논문집,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학회의 연구지 등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1

년을 기준으로 3편 이상의 게재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기타 이사회는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 【업 무】

-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 2차 심사(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6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 ①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②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3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조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1편, 논문심사의견서 등을 우송한다.

제8조 【논문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①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 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 학회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각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평가서에 실증논문과 개관논문 또는 이론논문을 구분하여, 7개 심사기준별로 7점 척도에서 평가하며, 총점에 따라서 심사결과를 ‘수정없이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추가적 경험적 연구 첨가 및 재심사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각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여, 필요시 논문수정제의 요구서를 첨부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 ② 2차 심사는 ‘부분 수정 후 게재’ 또는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⑤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6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제10조 【논문게재료】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지 20쪽까지는 쪽수에 관계없이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편당 20만원,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편당 2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쪽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21쪽부터 한 쪽당 1만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 ① 학술지 내에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 명단과 각 권호의 심사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 ②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③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④ 공동논문의 경우,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 1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 ⑤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주에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⑥ 학회지 논문의 게재순서는 해당 권호의 심사용 원고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제12조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제13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저자의 요청에 따라서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된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심사요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편집위원회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 【기타】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작성 세칙 또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발간한 출판지침(Publication Manual) 최근판을 참조한다. 그 외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운 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

제17조 【내규개정】

내규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제18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 【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당시의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구윤리 규정

2014. 12. 22 제정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의 학술지인 본 학회지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논문기고자들에게 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1장 연구윤리, 2장 연구진실성심사로 나뉜다.

제1장 연구윤리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①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 ②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④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2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 ①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②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 ① 연구 참여는 자의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학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동의를 참여자의 서명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참여자가 영아, 유아, 또는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기타의 경우 법적인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다.
 -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비밀 보장의 한계
 - 참여에 대한 보상
 - 연구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로 문의한다.
-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개입(intervention) 연구를 수행하는 심리학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실험 처치의 본질
 -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서의 할당 방법
-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5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 ②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6조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학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 ②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면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 ③ 위 1.항의 경우에도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음을 참여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연구 불참여의 의사결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연구를 시작한다.

제8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해당 학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에서 속이기】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 ③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시점을 넘지 않는 기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0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설명(debriefing)】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 ③ 사후설명 정보의 제공은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 연구에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 ②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 ③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 ④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결과 보고】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주요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이중출판)와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 ① 주요부정행위 : 주요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 “왜곡”이라 함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자료(data)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다. 연구자료(data)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주요부정행위이다.
 -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간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 이중출판 :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data)나 결과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료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학술지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부적절행위 : 주요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기재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이다.
- 조사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 주요부정행위 교사 · 강요 :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주요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출판 업적】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용어정의
 -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 준비동안에 공저자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간 합의를 도출한다.
 - 제1저자는 저자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1저자가 될 수도 있다.
 -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논문투고, 심사자와 교신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기초한 경우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 교신저자가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주저자의 연락처도 제시해야 한다.
-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 ③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 · 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학술적 · 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 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 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수정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⑥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제15조 【자료보관 및 재검증을 위한 공유】

- ① (보관)
 - 수집된 원자료를 매체(디스켓, CD, USB 등)에 기록하고 보관하는 주 책임은 주저자에게 있다. 매체에 기록된 자료를 기록자료라고 한다.
 - 기록자료를 포함하여 연구결과의 결론도출에 근거가 된 자료를 근거자료라고 한다. 근거자료의 보관은 동료 연구자 또는 학계의 다른 연구자에 의한 검증을 허용하기 위하여, 출판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

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에 의하지 않는 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 연구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confidentiality)가 어려운 경우
- 소유한 근거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는 경우
- 재검증의 필요가 없음을 편집위원회에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

③ 전항에 의해 근거자료를 제공받은 심리학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근거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근거자료를 요청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연구부적절행위로 간주되고 연구진실성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16조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심리학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훈령 236호 (2007. 2. 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심리학자 윤리규정 (2003. 8 제정, 2004. 8 수정)의 3장 “연구관련 윤리”.

APA 심리학자 윤리규정 (2002 제정)의 8장 “연구 및 출판”.

프린스턴대학교 학부생을 위한 출판규정 (2006-2007).

서울대학교 연구지침 (2008. 7. 30).

과기총뉴스레터 (2008. 8.5). “올바른 논문저자 표기와 연구윤리”.

연구윤리정보센터 “좋은연구” 웹사이트 (<http://좋은연구.kr>, 또는

<http://www.grp.or.kr>). (2008. 8.15)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006. 6.16. 규칙 제1563호)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007. 1. 2 제정).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007. 3. 19 제정).

제2장 연구 진실성 심사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심사·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 ①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③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④ “본 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에 기고하는 모든 저자들 및 관련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적용절차】

- ① 제보 또는 혐의가 접수 된지 15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진실성예비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진실성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완결보고서를 접수하면 편집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 및 해당기관에 알린다.
- ④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5조 【예비조사위원회】

- ①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②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한 혐의도 접수절차를 거쳐서 처리한다.

제7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제보 · 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보내용이 본 학회지의 윤리규정 제1부 13조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제보일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보일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본 학회지에 기고하였으면 조사대상이 된다.

제8조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 ③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 【예비조사 결정】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0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본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제11조 【본 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조사위원회는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윤리위원회와 공조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본 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위원이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본조사위원에게 조사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④ 본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본 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판정 또는 조치 필요사항
 -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제17조 【판정 및 조치】

- ① 본조사결과의 판정 및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 해당논문은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저자(들)은 1~3년간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 회원 자격 여부(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 정지, 자격(면허) 상실, 자격(면허) 정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판정사항은 제보자,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산하 학술지 편집위원장, 기고자, 기고자의 소속연구기관에 통보한다.

제1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 ①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 ②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의 투고 및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5년 이하의 참여금지
- ③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④ 기타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제20조 【시행세칙】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표절 규정

2014. 12. 22. 제정

제1조 【정 의】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나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유 형】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 【심사주체】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 【제 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 ①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 ②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의 투고 및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5년 이하의 참여금지
- ③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④ 기타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논문투고 일정

순서	전반기	후반기
원고접수마감일 / 발행예정일	4월 30일 / 6월 30일	10월 31일 / 12월 31일

1.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안내

1)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안내

- 위에 명기된 접수 마감일은 매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호로 연기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된 논문은 학회에 소속되며, 연구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작성규정 : 학회지 편집양식 A4 용지 20매 기준 (별쇄본 및 심사료 포함)
- 논문투고시 단독저자-1편, 공동저자-1편으로 총 2편으로 편수제한
- 투고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저자명을 표기할 때 저자가 다수인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순으로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논문투고 방법안내

온라인 논문투고 : knspsa2014@gmail.com 또는 홈페이지(<http://www.knssa.com>)

3. 온라인 논문투고 후 문의

담당자 : 이대권 (010-8873-9975/knspsa2014@gmail.com)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강 욱 (경찰대)			
편집위원	권혁빈 (용인대)	김도우 (경남대)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김태훈 (성신여대)
	윤민우 (가천대)	이창배 (울산대)	장항배 (중앙대)	최 관 (한세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9호

인쇄일	2019년 12월 28일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발행인	박준석
편집인	강 욱
발행처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div> <div>449</div> <div>-</div> <div>713</div> </div> 경기도 용인시 처안구 삼가동 용인대학교로134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5층 박준석교수 연구실 전화 (031) 8020-2633 FAX (031) 8020-2882 E-mail knspsa2014@gmail.com Homepage http://www.knssa.com
인쇄처	백산출판사
전 화	(02) 914-1621(代)
F A X	(031) 955-9911 <div> edit@ibaeksan.kr <div>www.ibaeksan.kr</div> </div>

